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 관련
일본 신문보도의 차이와 변화

－1986년과 2001년의 朝日, 毎日, 産經, 讀賣를 대상으로－

2005년

서강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岡本 昌己(오까모또 마사미)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 관련
일본 신문보도의 차이와 변화

－1986년과 2001년의 朝日, 毎日, 産經, 讀賣를 對象으로－

指導教授 金 均

이 論文을 文學 碩士 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6年 7月 7日

서강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岡本 昌己(오까모또 마사미)

감사 드리며

1998년 10월에 오부치 일본 국 총리대신과 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 사이에서 교환된 ‘日韓共同宣言’은 한·일간 사이에 친근감과 좋은 관계를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공동선언에는 “過去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교류와 협력을 유지해 온 日·韓 양국이 1965년의 국교 정상화 이후 각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켰으며, 이러한 관계가 상호 발전에 기여했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過去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교류와 협력을 유지해 온 한·일 양국”이 “각 분야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 시키는 데에 왜 “1965년의 국교 정상화”를 거쳐야 했는가.

일본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지극히 가까운 ‘一衣帶水’의 존재이며, 역사적으로도 깊고 깊은 관계에 있다. 그러나 일본의 한국에 대한 침략과 식민지 지배는 오늘날 아직도 한·일간에 다양한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긴장 관계를 타개하기 위해 양국은 지속적으로 교류를 거듭해 왔으나 그 성과는 아직 보람이 있는 것이 되지 못했다. 한·일 양국의 적극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마다 한국에서는 일본 비판이나 반일 운동이 일어나고, 일본에서는 반성과 동시에 한국을 혐오하는 기묘한 감정이 팽배한다.

우리 일본인에 있어서 ‘한국’이란 단지 이웃 나라 이름이 아니다. ‘한국’은 우리가 망각한 과거를 상기시키는 불길한 부호로 기능하고, 또는 보고 싶지도 않은 가면 밑의 얼굴을 비추는 거울로 기능한다. 그러나 잘못된 맺어진 역사의 매듭을 풀기 위한 수 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으며,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우리의 과거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며, 우리의 미래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작은 너무나 작은 이 연구 성과를 가지고 미래를 향해 행진하는 대오를 따라가기로 한다. 도와 주신 분들에게, 그리고 도와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목 차

i. Abstract	V
ii. 國文抄錄	VII
I. 序論	
1. 문제제기	1
2. 연구문제	4
3. 일본신문의 정치적 특성 개관	7
II. 理論的論議	
1. 미디어와 현실	9
2. 뉴스 프레임 연구	11
3. 일본 신문의 한국관련 보도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	14
III. 研究方法	
1. 분석대상과 샘플링	19
2. 프레임의 추출	21
A : 자의적 감정 프레임	23
B : 위상 재정립 프레임	25
C : 사회적 이벤트 프레임	27
D : 자율성 회복 프레임	28
E : 외교의 희생물 프레임	30
F : 외압유도 프레임	33
G : 검정의 이해 요구 프레임	35
H : 내정간섭 프레임	37

IV. 分析結果	
IV-1. 연구문제 ①의 분석결과	39
1. 기사의 양적 분석	39
2. 기사의 프레임 분석	42
2-1. 각 신문의 프레임 분포	42
2-2. 프레임의 추이	43
2-2-1. 5월 27일부터 6월18일까지 (제1기)	44
2-2-2. 6월19일부터 7월7일까지 (제2기)	46
2-2-3. 7월8일부터 사건이 수습된 9월 초까지 (제3기)	48
3. 개별 신문에 관한 논의	50
4. 소결	53
IV-2. 研究問題 ②의 分析結果	56
1. 기사의 양적 분석	56
2. 기사의 프레임 분석	59
2-1. 프레임 분포의 개관	59
2-2. 프레임의 추이	62
2-2-1. 제1기 분석 기간 (연초부터 5월 9일까지)	63
2-2-2. 제2기 분석 기간 (5월 10일부터 7월 7일까지)	75
2-2-3. 제3기 분석 기간 (7월 9일부터 연말까지)	77
3. 소결	86
IV-3. 研究問題 ③의 分析結果	89
1. 두 가지의 역사교과서 문제	89
2. 4가지 신문의 변화	91
V. 要約과 結論	101
參考·引用文獻	105
附錄	109

표 목 차

<표 1> 각 신문의 발행부수 비교	19
<표 2> 샘플링에 사용한 키워드	20
<표 3> 추출한 프레임들	21
<표 4> 진보적 입장의 프레임	22
<표 5> 보수적 입장의 프레임	22
<표 6> 1986년도 기사의 양적분석	40
<표 7> 1986년도 취재기사의 소스 유형	40
<표 8> 1986년도 프레임 분석 결과	42
<표 9> ‘復古調日本史’ 합격 관련 기사	44
<표 10> 기술 수정은 나카소네 수상의 지시	46
<표 11> 검정 합격 관련 기사	48
<표 12> 2001년도 기사 양적분석	57
<표 13> 2001년도 소스 유형	57
<표 14> 2001년도 프레임 분석 결과	60
<표 15> 2001년 3가지 분석 기간	62
<표 16> 2001년 제1기 프레임 분포	63
<표 17>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의 역사인식을 언급	67
<표 18> ‘모임’ 교과서 검정합격 관련 조간 1면 기사와 사설	69
<표 19> 한국정부 수정요구 관련기사	73
<표 20> 제2기 프레임 분포	76
<표 21> 제3기 프레임 분포	78
<표 22> 한국정부의 수정 요구에 대한 회답	81
<표 23> 한국정부가 일본문화 개방 중단	84
<표 24> 위안부에 관한 언급이 있는 기사 건수	97

그림 목차

<Fig. 1> 산케이 신문의 프레임 변화	91
<Fig. 2> 요미우리 신문의 프레임 변화	93
<Fig. 3> 아사히 신문의 프레임 변화	96
<Fig. 4> 마이니치 신문의 프레임 변화	98
<Fig. 5> 1986년도 프레임 분포	109
<Fig. 6> 2001년도 제1기(상) 프레임 분포	110
<Fig. 7> 2001년도 제1기(하) 프레임 분포	111
<Fig. 8> 2001년도 제2기 프레임 분포	112
<Fig. 9> 2001년 제3기 프레임 분포	113

ABSTRACT

Difference in the "history textbook problem" related newspaper report and change.

OKAMOTO, masami

Dept. of Mass Communications

The Graduate School of Sogang University

Supervised by KIM, kyun Ph. D.

This research analyzed the matter whether a Japanese newspaper (ASAHI, SANKEI, MAINICHI and YOMIURI) reported “a history textbook problem” how. The cause of “the history textbook problem” is a matter of Japanese history recognition. And it is the conflict that “the textbook official approval system”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is a cause.

A subject 1 analyzed the article of a Mamorukai matter in 1986, and analyzed the article of a Tsukurukai matter in 2001 as for the subject 2. Then, these results of an analysis were compared, and a subject 3 analyzed a change in the Japanese newspaper.

As for a matter in 1986, the textbook that the conservatives group Mamorukai applied for the official approval is a cause. The Japanese Government intervened in “the textbook official approval”, and then amended contents of description of the textbook. ASAHl and MAINICHI are the positions that the arbitrary practical use of the official approval system is criticized. The Mamorukai matter was defined when the arbitrary practical use of the official approval system was a matter of the cause. YOMIURI was defined when it was a matter by lack of understanding to a standard for an official

approval. Then, Mamorukai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were criticized. SANKEI criticized governmental intervention severely. And it was blamed for receiving foreign pressure with the national independence loss.

As for a matter in 2001, the textbook that the conservatives group Tsukurukai applied for the official approval is a cause. The Japanese Government rejected intervention to the official approval, and rejected a demand for the amendment from South Korea and China.

ASAHI criticized the textbook of Mamorukai. But, “amendment denial” by the government was supported. MAINICHI criticized the textbook of Mamorukai, too. But, “amendment denial” by the government was supported. YOMIURI and SANKEI supported the textbook of Mamorukai. And “amendment denial” by the government was supported, too.

There is “Japan’s lost decade” during a Mamorukai matter in 1986 and a Tsukurukai matter in 2001. Japan suffered an economical blow, and then cultural confidence was lost. “Amended history” was necessary so that Japan might take back confidence. Then, Japanese society accepted the textbook of Mamorukai. One newspaper was absorbed in giving “amended history” a good reason. Another one was absorbed in contradicting the criticism of South Korea and China. Then, other newspapers kept silent. A change in the Japanese society influenced all newspapers.

국문초록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 관련 일본 신문보도의 차이와 변화 (1986년과 2001년의 朝日, 毎日, 産經, 讀賣을 대상으로)

본 연구는 일본의 신문이 “역사교과서 문제”를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역사교과서 문제”의 원인은 일본의 역사인식의 문제이며, 문부성(문과성)의 교과서 검정 제도가 낳은 갈등이다. 연구문제 1은 1986년의 ‘지키는 회’ 사건의 기사를 분석하고, 연구문제 2는 2001년의 ‘만드는 모임’ 사건의 관련 기사를 분석했다. 그리고 연구문제 3은 두 가지 사건의 보도를 비교하고, 4 가지 신문들의 변화를 분석했다.

1986년의 사건은 보수파 집단인 ‘지키는 회’가 검정 신청한 교과서가 원인이 되었다. 일본정부는 교과서 검정에 개입하여 교과서의 기술 내용을 수정했다. 아사히와 마이니치는 검정제도의 자의적인 운용을 비판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지키는 회’ 사건은 검정제도의 자의적인 운용이 원인이 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요미우리는 검정 기준에 대한 인식 부족에 의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지키는 회’와 문부성 쌍방을 비판했다. 산케이는 정부의 검정개입을 심하게 비판하고, 동시에 외국의 압력을 수용한 것을 국가 주체성 상실이라고 비난 했다.

2001년의 사건은 보수파 단체 ‘만드는 모임’이 검정 신청한 교과서가 원인이 되었다. 일본 정부는 검정 개입을 거부하여,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수정 요구를 거부했다. 아사히는 ‘모임’의 교과서를 비판했다. 그러나 정부에 의한 ‘수정 거부’를 지지했다. 마이니치 역시 ‘모임’ 교과서를 비판했다. 그러나 정부의 ‘수정 거부’를 지지했다. 요미우리와 산케이는 ‘모임’의 교과서를 지지했다. 그리고 정부의 ‘수정 거부’도 지지했다.

1986년의 ‘지키는 회’ 사건과 2001년의 ‘모임’ 사건 사이에는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이 있다. 일본은 경제적 타격을 받고 그리고 문화적인 자신을 상실했다. 일본이 자신을 되찾기 위해서는 “수정한 역사”가 필요했다. 그리고 일본 사회는 ‘모임’의 교과서를 수용했다. 어느 신문은 “수정된 역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에 열중했다. 어떤 신문은 한국과 중국의 비판에 반박 하는 것을 일삼았다. 그리고 어떤 신문은 그러한 사회 분위기의 변화에 침묵했다. 일본 사회의 변화는 모든 신문에게 영향을 주었다.

I. 서론

1. 문제 제기

우리는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세계’를 미디어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다. 광범위한 사회 환경의 현실을 사람들이 인식하기 쉬운 환경 이미지로 재구성하여, 보도를 통해 그것을 제공하는 것은 매스 미디어의 중요한 기능이다 (田崎·兒島, 2003, p.71). 그러나 뉴스는 “사회 상황의 전면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고, 스스로 돌출해 온 어떤 일면에 대한 보고”이며¹, “불가피하게 제도적 관행에 동의하는 뉴스 제작자가 제도적 과정에 의존해서 만들어 내는 산물”이다². 즉 뉴스는 세상의 다양한 단편 중에서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골라내진 것으로 구성된 어떠한 언급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언급에 근거하여 세계의 다양한 양상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직접 얻은 확실한 지식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이미지, 혹은 주어진 이미지에 근거한 행동”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Lippmann, 1922, 掛川トミ子역, 1987, p.42).

한·일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생각할 때, 미디어의 역할은 지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미디어를 통해서 수용되는 한국에 관한 다양한 정보는 “명확한 목표를 따라 조직된 의식적·의도적인 행동에 의해 형성되어 송출된 메시지”이며(이광호, 1998, p.55), 이것은 실제하는 한국과는 또 다른 ‘리얼리티’를 지니고, 우리 일본인이 한국을 이해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미디어의 메시지가 그대로 개개인의 ‘한국상(韓國像)’ 형성에 직결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외측 세계’와의 ‘접촉’의 대부분을 미디어에 의존하고 있으며, 우리의 ‘현실 구성’에 관여하는 미디어의 영향력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알려져 왔다.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는 1982년에 처음에 일어났다가, 계속 한·일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역사교과서 문제는 우선은 일본사회의 역사 인식 문제이다. 그리고 동시에 지극히 미디어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좌파 언론이 외국의 압력을 유도하는

¹ Lippmann, W. (1922) *Public Opinion*. 掛川トミ子역 『世論』 (岩波書店, 1987).

² Tuchman, G. (1976) *Making News*. 박홍수 역 『메이킹 뉴스』 (나남출판, 1995)

목적으로 일으킨 사건이다” 라고 하는 우파의 주장에 의한 것이 아니다. 또는 “보수와 집단과 미디어가 만들어 낸 미디어 이벤트이다” 라고 하는 좌파가 주장하는 바에 의한 것도 아니다. 이 반복되는 갈등은 근본적으로는 일본의 아시아 근린 국가에 대한 침략과 식민지 지배라고 하는 역사에 대한 인식 문제에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교과서 검정 제도의 극히 의심스러운 중립성과 공정성이 일으킨 갈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미디어에 따라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어떤 미디어는 “자랑스러운 과거”를 상기시키는 데에 열중하고, 또 어떤 미디어는 그러한 “자랑스러운 과거”를 기꺼이 수용한 일본사회의 변화에 입을 머물렀다. 뉴스 제작과 관계되는 저널리스트는 자신의 “주관적인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다” (Lippmann, 1922, I. p.216). 그리고 뉴스 제작의 과정에는 “사건의 어떤 뚜렷한 국면에서, 게다가 흥미를 돋우는 것을 말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루틴(routine)을 고집하지 않을 수 없는 압력이 항상 존재한다(ibid. I. p.204). 즉 “뉴스와 진실은 동일물이 아니고, 분명히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ibid. I. p.214).

한·일간 사이에서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역사교과서 문제’는 전후(戰後) 일본의 교육에 있어서의 이데올로기 대립의 상징³으로 여겨져 온 ‘교과서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패전 후에 米軍 주도로 실시된 일본 국 헌법과 교육 기본법에 근거한 민주화 교육은, 그러나 전전(戰前)의 교육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한 文部省(문부성)에 의해서 좀처럼 진척되지 않았다(浪本, 1984). 게다가 1949년의 중화 인민 공화국의 성립이나 미·소 간의 대립이 심화한 것으로부터, 일본의 민주화 교육을 주도한 미국의 대일(對日) 점령 정책 그것 자체가 변화하고, 일본을 ‘불패의 반공 방벽(不敗の防共防壁)’⁴으로 만드는 것에 변화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교육 행정은 서서히 전전(戰前)의 국가 통제적 색채를 현저하게 하는 ‘교육의 역행(教育の逆コース)’⁵을 걷기 시작했다(浪本, 1984, pp.51-62).

³ 堀内孜(2002) “教科書制度と教科書問題” 京都教育大學教育研究所紀要(pp.3-10)에서 인용.

⁴ 맥아더가 1949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 날에 발표한 성명(朝日1949/7/4). 일본의 비무장화 정책이 끝난 것을 의미한다.

⁵ 제2차 대전 후의 냉전 격화 속에서 나타나서 대일 강화조약(1952) 발효와 함께 더욱이 현저하게 된, 전후 민주주의를 부정하여 전전에의 복귀를 목표로 하는 동향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을 요미우리 신문이 ‘逆コース(역행)’ 이라고 규정하여 이것이 용어로서 정착했다.

‘교육의 역행’은 교과서 검정 권의 문부대신에게의 일원화나 교과서 채택 제도의 광역화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1955년에 일본 민주당의 발행한 팸플릿 ‘うれうべき教科書の問題 (우려할 만한 교과서의 문제)’⁶로 표면화했다. 이 팸플릿은 당시 민주적 교육을 주도한 역사교과서를 ‘편향(偏向) 교과서’로 비난한 것이었다. 그리고 문부성은 이 해에 실시한 검정에 의해서 ‘日本教職員組合’⁷(일본 교직원 조합)이 관여한 교과서를 포함한 많은 교과서를 불합격 시켰다. 이 ‘제1차 교과서 공격’⁸ 이후 ‘문부성 대 일본 교직원 조합(일교조)’, ‘일본 민주당(후에 자유민주당) 대 일본 사회당’이라고 하는 대립 구도가 차츰 형성되어, “이데올로기 대립을 배경으로 하는 논쟁의 시대”(讀賣 2001/4/4)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후 일본의 이데올로기 대립이 교과서의 역사 기술을 매개로, 아시아 근린 국가들을 말려 들게 하고 갈등을 일으킨 것이 ‘역사교과서 문제’이다.

미디어의 ‘현실 구성’에 관한 영향력은 이미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져 왔다. 본 연구는 그러한 선행 연구들의 성과에 힘입어 일본의 4가지 신문들이 역사교과서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재구성했는지를 프레임 분석을 통해서 보기로 한다. 일본 신문이 한·일간의 갈등 문제를 보도하는 데에서 국익이나 외교정책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 혹은 산업으로서의 미디어는 이익추구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 그리고 역사교과서 문제라고 하는 한·일 관계의 근간에 관한 문제를 얼마나 정확히 보도했는지 보기로 한다.

⁶ ‘우려할 만한 교과서의 문제(1955년 8월 13일)에서는 편향 교육을 추진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교과서로서 4가지를 제시했다. ①교원 조합 운동이나 일본교직원 노동조합을 무조건 지지하고, 그 정치 활동을 추진하는 타입, ②일본의 노동자의 비참한 상황을 소개하고, 그것으로 급진적이고 파괴적인 노동운동을 추진하는 타입, ③소련이나 중공(中共)을 새삼스레 미화·찬미하고, 반대로 일본을 비하 하는 타입, ④마르크스=레닌 사상, 즉 공산주의 사상을 이식하려고 하는 타입 등.

⁷ 1947년 6월에 결성된, 지역 단위의 교직원 조합의 연합체(平凡社世界大百科事典에서 인용).

⁸ 여당이 교과서 내용을 문제시하고 비난한 사건을 지시하여 사용하는 말. 제1차는 1955~56년의 일본 민주당에 의한 것이며, 제2차는 1980~82년의 자유민주당에 의한 것. 이것은1979년 말에 자민당이 “신 우려할만한 교과서의 문제”라고 하는 팸플릿을 만든 것에 기인했다. 제3차는 1996년부터, ‘자유주의 사관 연구회’나 ‘만드는 모임’ 등 우파 단체와 국회 내 보수파 의원에 의한 교과서에의 다양한 압력을 말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미디어의 현실구성 이론에 입각하여, 일본의 신문 미디어가 1986년과 2001년에 일어난 역사교과서 문제를 어떻게 재구성했는지를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86년의 ‘지키는 회 사건’과 2001년의 ‘만드는 모임 사건’의 신문보도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각 신문마다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본다. 그리고 1986년과 2001년의 2가지 사건의 보도 형태를 비교하고, 15년간에 일본 신문들에 어떠한 통시적 변화가 있었는지 보기로 한다. 이 연구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일본의 전국지인 朝日新聞(아사히 신문), 産経新聞(산케이 신문), 毎日新聞(마이니치 신문), 그리고 讀賣新聞(요미우리 신문)을 대상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한다.

연구문제① 1986년 제1차 역사교과서 문제에서 일본 신문들의 보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② 2001년 제2차 역사교과서 문제에서 일본 신문들의 보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③ 제1차 그리고 제2차 역사교과서에 문제에 대한 일본 신문들의 보도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연구문제 ①은 1986년의 제 2 차 역사교과서 문제인 ‘지키는 회’ 사건을 4 가지 신문들이 어떠한 담론으로 기사를 구성했는지를 비교한다. 1986년의 역사교과서 문제는 ‘일본을 지키는 국민 회의’(지키는 회)⁹가 고등 학교용 역사교과서로서 편집해서 검정 신청한 『新編日本史』의 기술 내용에 역사왜곡이 있었다고 해서 외교 문제가 된 사건이다. ‘지키는 회’가 신청한 교과서 『新編日本史』는 문부성의 수정을 거쳐 교과서 검정에 합격했는데 한국이 그 기술 내용을 문제시하자, 일본정부는 검정에 개입하여 기술 내용의 수정작업을 착수했다. 일본정부는 검정 기간의 확대 해석과 1982년의 제 1 차 역사교과서 문제 때 검정 규칙에 추가된 ‘近隣諸國條項(근린 제국 조항)’¹⁰을 근거로 해서

⁹日本を守る國民會議는 일본에 특유한 年號인 ‘元號’의 사용 범제화와 日本國憲法 개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현재 ‘日本を守る會’와 하나가 되어 ‘日本會議’를 형성하고 있다.

¹⁰ 역사교과서에서 근·현대사 기술에는 아시아 근린 국가들에 대해 배려해야 한다는 조항.

검정 개입을 정당화 했다. 아사히와 마이니치 그리고 요미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개입을 시인했는데, 산케이는 격렬하게 비판했다.

연구문제 ②는 2001년의 제3차 역사교과서 문제를 일본의 4가지 신문이 어떻게 기사화 했는지를 비교하는 것이다. 2001년은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만드는 모임)이 중학교용 역사교과서로서 편집해서 검정 신청한 『新しい歴史教科書』(새로운 역사교과서)의 기술 내용에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국이나 중국이 비판하여, 기술 수정을 요구한 사건이었다.

‘만드는 모임’이 만들어서 검정 신청한 ‘새로운 역사교과서’는 문과성(文科省)의 수정을 거쳐 검정 합격했다. 한·중 양국은 이 교과서의 자국 중심적인 기술을 역사 왜곡으로 지적하여, 검정 과정에서 기술의 적절한 수정을 요구하고, 또 검정 합격 후에는 문제 부분을 지적하고 재수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문과성은 검정제도의 공정성과 중립성 유지를 이유로 검정 과정에 대한 개입을 거부했으며, 합격 후의 수정은 검정 규칙상 못한다고 거부했다. 4가지 신문 중에는 한·중 양국의 비판을 동조하고 수정요구를 긍정적으로 보도하는 신문도 있었지만, 재수정 요구에 대해서는 모든 신문이 그것을 거부했다. 연구문제 ②는 4가지 신문이 각각 어떠한 담론으로 2001년의 역사교과서 문제를 재구성했는지를 비교하는 것이다.

연구문제 ③는, 1986년의 제1차 역사교과서 문제와 2001년의 제2차 역사교과서 문제의 보도 형태를 비교하고, 일본 신문들의 역사교과서 문제 관련 보도가 어떠한 통시적 변화를 보였는지를 분석, 비교하는 것이다.

1980년대 후반의 일본 사회는 “공전의 버블 경제를 배경으로 정보·소비 사회의 무한한 공간이 열린 시대”이었다(姜&吉見, 2001)¹¹. “1970년대 말의 일본은 ‘(서구를)따라잡기’ 형태의 근대화 목표를 달성하고, 모델이 된 선진 구미 국가들을 초월할 정도의 지위에 있다고 하는 자기 인식”(ibid. pp.65-66)의 시대에 있었다. 그것은 쇠퇴하는 구미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근대를 초월하는’ ‘문화의 시대’를 리드하고 있는 일본문화와

1982년에 추가되었다.

¹¹姜尙中&吉見俊哉 “グローバル化の遠近法”(岩波書店, 2001)는 임 성모에 의해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다. “세계화의 원근법”(이산, 2004).

그 국민성은 세계로 발신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고조 했던 시대이었다(ibid. p.78). 당시 나카소네 정권은 “방위비의 GNP1% 범위 돌파”나 “야스쿠니 신사 공식 참배” 등 그때까지의 정치적 터부를 차례차례로 찢어, ‘戰後政治の總決算’ (전후 정치의 총결산) 이라고 말해진 시대를 창출했다. 야당은 ‘지키는 회’ 교과서를 나카소네 정권의 전후 민주주의의 부정(否定)이 만들어 낸 사회 분위기가 낡은 것이다 라고 비판했다. 또 그 당시의 한국 미디어 역시 이러한 일본사회의 모습을 “지속적인 변영에 자기 도취한 것 같은 일본”(조선일보 1986/5/30)과 같이 묘사했다. 조선일보는 ‘지키는 회’ 사건을 단순한 교과서의 역사 기술 문제가 아니고, 나카소네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공식 참배’나 ‘천황 재위 60년 기념 행사’ 등과 관련 짓고, “‘전후 정치의 총결산’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조선일보 1986/5/30).

문화적, 경제적으로 고양하던 1986년에 비해 2001년은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Lost Decade of Japan)’으로 형용 된 장기 불황 안에서, 냉전 구조의 변화와 세계화라고 하는 세계 수준의 변화를 경험하며 간신히 맞이한 21 세기이었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세계는 격변했고, 그러한 변화에 호응하듯이, 일본에서는 ‘55년 체제’¹²가 끝났다. 교과서 문제는 바로 이 55년 체제의 성립과 함께 시작된, 보수파에 의한 전후 민주적 교육에 대한 부정적 개입이었다. 연구문제 ③은 4가지 신문의 역사교과서 문제 관련 보도가 1986년과 2001년으로, 15년 간의 ‘자학의 시대’에 각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이데올로기 대립이 교육 현장에 가져온 갈등을 ‘교과서 문제’로 간주하고, 이러한 일본 국내 문제가 한국이나 중국 등 아시아 근린 국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킨 사건을 ‘역사교과서 문제’로 간주한다. 이것은 두 가지 사건을 다른 사건으로서 엄밀히 언급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며, ‘교과서 문제’와 ‘역사교과서 문제’에 구별은 없다. 일본의 각 신문 지면에서도 양쪽 표기를 혼용하고 있다. 그리고 논문 중에는 1986년의 역사교과서 문제를 ‘지키는 회 사건’으로, 2001년의 그것을 ‘만드는 모임 사건’으로 간략하게 표기한다. 1982년의 제1차 역사교과서 문제는 산케이 신문이 이미

¹² 1955년 11월에 성립한 여당인 自由民主黨과 야당인 日本社會黨의 2대 정당으로 된 정치 체제를 말한다.

‘침략·진출 오보 사건’으로서 보도했으며 다른 곳에서도 이 표기를 따라 쓰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 논문도 이것을 따라 ‘오보 사건’으로 기술한다.

3. 일본 신문의 정치적 특성 개관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이 된 일본 신문의 정치적으로 어떠한 특성¹³을 지니고 있는지를 그들의 발생과정을 통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¹⁴. 우선 일본의 신문은 모두 유사한 보도를 한다는 것은 이미 정설(定說)처럼 되어 있다. 이것은 근대 초기 일본의 의견신문 opinion paper이 자본주의적 산업으로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당파성을 포기했기 때문이다¹⁵. 이것은 그 당시의 정치적 탄압을 회피하면서 동시에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데에 일석이조(一石二鳥)의 방법이었다 (稻葉, 2000, p.335). 또한 창간 때부터 ‘공평무사, 불편부당(公平無私, 不偏不黨)’을 내건 大阪朝日(오사카 아사히)¹⁶ 신문이나 (1879년 창간), “신문은 상품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창간 된 大阪毎日(오사카 마이니치) 신문 등에 의해서 일본의 신문은 이념적인 대립보다 속보성이나 발행 부수 등의 대립을 통해서 발달해 왔다고 하는 역사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지금 현재도 존재한다(ibid. pp.336-337).

中村輝子(나카무라 테루코, 1997)는 1980년대의 나카소네 정권 시대의 몇 가지 주요 이슈를 가지고, 아사히 신문과 마이니치 신문 그리고 요미우리 신문의 논조를 비교했다.

¹³ 한국어 논문으로서는 이정복(1986)“일본신문의 정치적 특성”이 있다.

¹⁴여기서는 현재 일본사회에서 거대한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신문들의 발생과정을 개관하는 것으로 일본신문이 이념적인 회에서 거대한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신문들이 이념적인

¹⁵ 대표적 사건으로 1918년의 “白虹事件”이 있다. 이것은 寺内(테라우치) 내각에 의한 신문규제를 반대하여 오사카에서 열린 테라우치 내각 탄핵 신문기자 대회의 모양을 보도한 오사카 아사히의 8월 25일 석간이 판매 금지되어, 이어서 오사카 아사히의 발행금지를 요구한 사건이었다. 이 “白虹事件”은 당시 신문들에 찬물을 뒤집어 쓴듯한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으로 아사히는 사장이 사임하고 편집 간부의 인책사직, 그리고 “본사의 본령선명”이란 사고를 게재했다. 그 후 아사히는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기업적 확대를 지향하게 되었다(이나바, 2000, pp.58-59).

¹⁶ 1879년1월에 오사카에서 창립되었다(사주 무라야마 류헤이). 당초부터 구어체를 사용하고 그림 등이 있는 “小新聞”이었기 때문에 시류를 영합하여 순조로운 발전을 보였다. 1883년에는 부수 2만부를 자랑하고 1988년에 도쿄에 진출, 東京朝日를 창간했다.

1980년대 당시의 나카소네 정권은 그 때까지의 ‘정치적 터부’를 차례차례로 무너뜨려 간 것으로, 전후 오래 동안 계속된 보수 정권의 역사 중에서도 특이한 시대를 만든 정권이었다.

나카무라에 의하면 이들 3가지 신문의¹⁷ 각각 개별성의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은 정권의 이념을 지지하든가 혹은 그것에 대한 비판인가 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이는 ‘야당=(일부)신문=좌익’ 대 ‘여당=(일부)신문=우익’ 이라고 하는 단순한 이분법으로 바뀌기 쉬운 상황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신문 업계 내부에서 서로 반발하는 것에 의해서 현실의 정치로부터의 독립성을 위태롭게 하고¹⁸, 정치 보도가 정쟁(政爭)에 깊이 관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상황이었다. 신문사가 정권에 대한 긍정 또는 비판이라는 이분된 구조를 만들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일본의 신문이 모두 여당에 비판적이다라고 하는 통설을 반영하지 않다. 경합하는 미디어 시장에서는 수용자가 관심을 가지는 다양한 뉴스를 다루어야 하며, 권력자에 유리한 기사만으로는 만족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흥미로운 뉴스나 ‘이야기’를 찾으려고 하는 미디어의 ‘구조적 편향성’은 권력자에 역 작용할 경우가 있다(蒲島, 1990, p.24). 그러나 신문의 주장이 여·야당의 대리 전쟁처럼 해석되는 상황에서는 정치적 의도로서의 정보 리크(leak)나 조작에 약한 체질을 만들기 쉽고 비판했다.

그리고 나카무라는 분석 과정에서 이들 3지의 기사 형태가 보도와 해설과 사실이 거의 일원화(一元化)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찾아냈으며, 이것을 일본 신문의 특징인 조직 취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다. 하나의 기사가 복수의 취재 작업으로부터 구성되는 경우나 대규모 사건에 대해서는 다수의 기자가 동원되는 것으로부터, 편집 과정에서 신문사로서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쉽고, 논설이나 의견기사도 조직으로서의 자세를 체현(體現)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것이 지면의 다원성이나 다양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나카무라, 1997, pp.114-126).

¹⁷ 나카무라는 자민당을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산케이 신문과 경제지인 日本經濟新聞을 제외한 아사히와 마이니치 그리고 요미우리의 3가지 신문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¹⁸ 이러한 상황을 가져온 하나의 배경으로서 나카무라는 1970년대 후반의 아사히와 요미우리의 치열한 판매 경쟁을 지적했다. 1977년에 판매 부수 제 1위가 아사히로부터 요미우리로 바뀌었다.

II. 이론적 논의

1. 미디어와 현실

리프만은 그의 저서 『여론』¹⁹에서 우리가 외적 세계와 접하는 데에 있어 ‘의사환경’의 개재(介在)를 지적했다. ‘의사환경’은 바꾸어 말하면 “머리 속에서 그리는 세계”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환경이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복잡하고, 늘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대처 가능한 단순한 모델로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의사환경’이 개재한다고 여겨졌다 (Lippmann, 1922). 이 ‘의사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리프만은 뉴스를 들었다. 그에 의하면 신문보도는 눈이 보이지 않는 환경과 접촉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지만, 뉴스의 본질은 사회 상황의 전체상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 경찰, 국회, 혹은 증권거래소 등 몇 가지 정해진 장소에서 사람들이 알기 쉬운 형태 즉 ‘스테레오 타이프’로 나타난 것이다(ibid. p.193). 게다가 뉴스 제작의 현장에는 어떤 패턴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뉴스를 생산하지 않을 수 없는 다양한 압력이 존재한다 (ibid. p.204). 결국 “뉴스는 진실과 동일물이 아니고, 분명히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이다(ibid. p.214). 리프만은 우리의 행동이 전술한 ‘의사환경’에 대한 하나의 반응이다라고 했는데 (ibid. I, p.29), 사람들이 외계와 교섭할 경우에 이 머리 속의 이미지는 자주 사람을 실수하게 한다 (ibid. p.47). 그것은 “직접 얻은 확실한 지식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낸 이미지, 혹은 주어진 이미지에 근거”해서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ibid. p.42).

리프만의 이 아이디어는 미디어와의 접촉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현대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것은 사회와 개인 사이에는 항상 미디어가 중재하고 있으며, 미디어가 그리는 ‘현실상’은 어떠한 형태로 변형 또는 가공된 현실인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 때, 미디어가 그리는 현실과 “실제의 현실”에 얼마나 괴리가 생기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¹⁹ Walter Lippmann *Public Opinion*. (1922) 掛川トミ子역(岩波書店, 1987).

리프만의 ‘의사환경’은 전후 일본의 매스커뮤니케이션 연구에도 영향을 미쳤다. 藤竹 曉(후지타케)는 리프만의 ‘의사환경’이 ‘환경화’되어 현실 환경과 등가(等價)인 것으로 되어 수용되는 과정을 설명했다²⁰(藤竹, 1968). 여기에서는 후지타케의 이론을 竹下俊郎(타케시타 토시오)²¹의 저작에서 소개한다(竹下, 1998, pp.27-34).

藤竹(후지타케)는 우선 ①“미디어 의존의 불가피성”을 들어,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미디어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설명한다. 다음에 ② “매스 미디어의 공개성·편재성”에 의해서 미디어가 제공하는 ‘의사환경’이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어,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인정된 지식이 되어 ‘의사환경’이 많은 인간의 “공유된 세계”로 변화하는 것을 설명한다. 그리고 ③“저널리즘 활동의 주기성”에 의해서 ‘의사환경’은 정기적으로 갱신되어, 사람들의 주목을 끊임없이 ‘의사환경’에 끌어 당길 수 있게 된다²². 이와 같이 후지타케는 리프만의 ‘의사환경’을 현실 환경의 ‘신회할 만한’ 대체물로 변화하는 것을 설명했다.

랭과랭 부부는 1951년의 ‘맥아더의 날’ 연구²³나 1952년의 ‘대통령 후보 선출 당대회’ 연구²⁴에 의해서 뉴스 제작에 있어서의 관행이 현실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을 설명했다(Lang & Lang, 1984). 랭과랭 부부는 뉴스의 제작 과정에서 생길 의도하지 않

²⁰ 藤竹의 아이디어는 清水幾太郎(시미즈 이크타로우)의 ‘코피의 지배’ 개념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清水는 『社會心理學』(1951)에서 미디어가 제공하는 현실 묘사를 “코피”로서 논했다.

²¹ 竹下俊郎 『メディアの議題設定機能』(學文社, 1998).

²² 미디어의 장기적 효과란 관점에서, ①미디어 제작 물은 장기간에 걸쳐서 몇 가지 패턴과 일관성을 가진다고 하고, ② 그것들은 학습효과를 발생한다고 가정되어, ③개인적 경험을 넘어 현실을 식별하는 재료를 제공한다(McQuail, 2000, p.459)

²³ 1951년 시카고에서의 맥아더 환영 행진을 현장과 텔레비전 보도의 2면에서 분석한 것. 연구는, ①텔레비전의 취재 보도는 사회 분위기를 통합할 방향에 편집되어 다른 의견을 소개하는 여지가 없었다, ②텔레비전의 취재보도는 시청자의 시야를 확대했지만, 시청자 자신이 이벤트를 주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폭 넓은 보도는 행해지지 않았다, 라고 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Lang&Lang, 1984, 이동신 왜 공동 역, 1998).

²⁴ 1952년의 시카고에서의 대통령 후보 선출 黨 대회를 취재한 ABC와 CBS 그리고 NBC의 보도를 분석한 연구이다. 당 대회의 취재는 합동취재로, 3국은 같은 소재를 사용하면서도 구성에 의해 시청자에게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했다. 이것은 ①사건에게 주어진 특정한 해석은 시청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②정보 전달의 타이밍은 후속 사건을 같은 해석범위 안에 넣어(모순되는 정보는 무시된다), ③ 당 대회에 대한 해설의 어조나 태도가 미묘한 효과를 가져와서, 그 결과 이들은 시청자를 복잡하고 혼란한 사건을 특별한 방법으로 이해하도록 영향을 주었다. 연구자는 이것을 텔레비전 보도의 ‘추론적 구조’라고 명명했다(ibid. p.91).

는 왜곡이나 편견을 ‘비의도적 바이어스’라고 명명하고, 이러한 제작의 관행에 의해서 미디어는 현실을 구성해서 ‘상징적 환경’을 창조한다고 했다. 또 ‘추론적 구조’는 뉴스의 구성요소를 어떠한 콘텍스트에 따라서 배치할까에 의해서 시청자에게 특정 해석을 촉진하는 것을 설명한 것으로, 이것은 오늘의 프레임링 개념과 지극히 유사하다 (Lang & Lang, 1984, 이동신 외 역, 1998).

맥콤&쇼가 1976년에 발표한 “보이지 않은 환경의 조직화”²⁵는 당시의 다양한 의제 설정 이론의 연구성과를 소개하면서, “상징의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내는 능력”을 총괄했다. 이 연구 보고서에서는 그때까지의 미디어 시청자를 주된 대상으로 한 의제설정 기능의 연구에다가, 그것과 동시에 미디어 생산물이 어떻게 생산되는가에 대한 철저한 이해 역시 중요하다고 주장되었다. 그리고 생산 과정에 있어서의 다양한 영향으로서, 출판사의 압력이나 공동체의 영향,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기술적·문화적 제약 등, 편집실 안에서 일어나는 눈에 보이지 않은 다양한 요소를 제시하면서 “뉴스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미디어의 정의는 모두 전문직적인 규범에 있다” 라고 했다 (MaCombs & Shaw, 1976).

2. 뉴스 프레임 연구

우리는 ‘의사환경’의 진위를 의심할 것이 없이 마치 현실 환경처럼 받아 들인다. 미디어는 어떻게 해서 우리를 납득시키는, 혹은 우리 스스로 진실이다라고 확신하는 설득력이 있는 메시지를 생산하는가.

“뉴스가 사회를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다”²⁶ 라고 하는 주체·객체 (혹은 주관·객관)의 二元論적 접근은 오늘날 현상학적 관점에서 비판되어, 현실의 반영 내지는 왜곡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뉴스 연구로부터 ‘현실의 구성’ 그 자체로서 뉴스를 이해하고

²⁵McCombs & Shaw (1976) *Structuring the “Unseen Environment”* Journal of Communication, Spring, 1976.

²⁶ 이 개념은 오늘 날에도 "객관 보도"와 세트가 되고, 가끔 미디어의 책임 회피의 면죄부로 기능 하기도 한다.

고찰하려고 하는 입장이 대두했다(岡田直之, 1992, p.166)²⁷.

터크만은 뉴스 연구에 ‘전통적 접근’과 ‘해석적 접근’의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했다(Tuchman, 1978, 박홍수역, 1995, p.250). ‘전통적 접근’이란 전통적 사회학에 의거하여 인간의 활동을 규범이 사회화 된 결과로 보고, 그러한 규범은 사회구조의 객관적 특징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한다.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회 생활의 측면에 대한 정의를 비롯해서 모든 규범은 사회구조가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래서 “뉴스의 정의는 사회구조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것이며, 뉴스 제작자는 사회화 된 규범에 입각해서 사건을 선택하고 보도함으로써 “뉴스는 사회를 반영한다”는 것이 된다.

또 하나는 쉷트(Alfred Schutz)의 현상학적 사회학에 의거한 ‘해석적 접근’으로, 이것은 뉴스 제작자의 활동을 보다 능동적인 것으로 강조한다. 이 입장은 현실 사회가 제공하는 규범을 행위자가 자원(資源) 혹은 제약(制約)으로서 자신의 계획 성취에 적극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는 현상학적 사회학의 주장에 의거한다. 뉴스 가치를 결정하는 명확한 규범은 사회가 아니고 행위자로서의 뉴스 제작자나 언론 조직에 있다고 하는 입장이며, 뉴스 제작자는 사회적 규범에 의존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자원으로 주체적으로 정의한다. 뉴스 제작자가 어떤 사건을 사회구조와의 관련으로 설명할 때, 즉 사건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정의하고 형성하는 것에 의해서, 그 사건은 사회를 ‘공유된 사회 현상’으로서 구성하게 된다. 뉴스는 뉴스 제작자와 조직에 의해서 의미가 부여된 사건이며, 뉴스는 연속적으로 사회 현상을 정의하고 재정의하는, 구성하고 재구성하는 것이다 (ibid, pp.250-252).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이 모두 의미가 부여되어 뉴스가 되는 것은 아니다. 터크만은 본래는 의식되지 않았던 사건이나 무정형(無定形)의 발언이 식별될 수 있는 사건이나 발언에 변환되기 위해서는 프레임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일상 속의 다양한 사건은 ‘프레임’을 통해서 독자가 이해 가능한 뉴스가 된다는 것이다.

프레임이란 “(적어도 사회적인)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주관적인 관여를 지배

²⁷岡田直之(오카다 나오유키) 『マスコミ研究の視座と課題』(東京大學出版會,1992)

하는 조직화의 원칙이다”(Tuchman, 1978, p.261). 터크만의 ‘뉴스 프레임’이라고 하는 개념은 고프만의 ‘프레임 분석’(Goffman, 1974)에서 시사 받은 것인데, 고프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행하는 상황이나 문맥에 대해서 행위자가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데에 ‘프레임’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했다. 터크만은 고프만을 “단편적인 경험이나 정보를 조직화하여 정리하기 위해서 프레임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아이디어의 창시자”로서 소개하고, 프레임을 통해서 어떻게 우연한 사건이 명확하게 정의된 이벤트로 변형되는지를 논의했다 (Tuchman, 1978, p.26). 터크만은 뉴스 프레임을 ‘창틀’에 비유하고 그것에 따라 일상의 사건이 뉴스라고 하는 일정한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는 이야기로 변환되는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나 동시에 창틀의 크기나 방향에 의해서 가끔 “안 보이는 것” 혹은 “언급되지 않은 것”이 생기는 것도 문제시한 것이다.

기트린(Gitlin, 2003)은 미디어 조직이 뉴스 제작에 관여하는 모습을 ‘미디어 프레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기트린은 프레임을 그것이 “언어 혹은 이미지에 관계없이 심벌의 조작자가 정상적으로 담론을 조직화 하는 선택·강조·배제, 혹은 인지·해석·제시의 지속적인 패턴”이다 라고 정의했다(p.7). 프레임은 뉴스 제작자가 재빠르게 그리고 대량의 정보를 기계적으로 (routinely) 처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어떤 ‘그것’을 정보로서 인지하고 인지의 카테고리에 할당하고, 수용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포장한다 (p.7). 수용자는 미디어 프레임에 의해서 구성된 ‘이야기’에 근거하여 현실을 재구성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기트린은 이러한 선택과 구성이 뉴스 제작에 관여하는 조직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로 일어나는 것을 “헤게모니 과정으로서의 뉴스 생산 과정”(烏谷, 2001, p.86)²⁸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 설명했다. 기트린은 자신이 경험한 60년대 학생 운동이 미디어의 흥미 본위의 보도로 쇠퇴해 이윽고 붕괴하는 과정을 분석하고, 거기에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미디어의 현상유지 기능, 즉 기존 사회 질서의 유지와 강화로서 기능 하는 모습을 찾아냈다. 기업으로서의 미디어에 있어서 “발행 부수는 목적을 위한 수

²⁸烏谷昌之(가라스타니 마사유키) “프레임 현상과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 58, pp.78-93.

단”(Lippmann, 1922)이며, 수용자의 극대화라고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수용자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재미있다고 느끼는 것 뿐 아니고,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믿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널리즘은 정당성을 담보하는 전문적 특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항상 수용자에게 느끼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Gitlin, 2003, p.259).

그런데 미디어는 지배적인 헤게모니²⁹와 상관적 관계에 있는 한 지배층의 이해관계 안에서 자리 잡을 수 있지만, 헤게모니로부터의 이탈은 전문직능(傳門職能) 집단으로서 저널리즘의 정당성을 의심 당하게 한다(ibid. p.12). 그래서 뉴스 루틴은 기본적으로 지배적인 헤게모니의 원칙과 모순되지 않는 프레임을 생성(生成)할 방향으로 기울게 되어 (ibid. p.271), 뉴스 제작자가 일상적인 관행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그대로 헤게모니적인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鳥谷, 2001, p.87). 이와 같이 기트린은 사회의 어떤 “단편”을 선택·구성하여 뉴스로서 변환하는가 하는 것에서 뉴스 제작에 관여하는 개인·조직이 사회 전체에 있어서의 지배적 헤게모니 투쟁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하며 결정한다고 설명한 것이다.

3. 일본 신문의 한국 관련 보도의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

일본 신문의 한국관련 보도에 관한 몇 가지 선행 연구를 소개하고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간략하게 개관하기로 한다.

伊藤陽一 (이토우 요우이치, 2000)는 뉴스의 국제 유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국제보도의 질적 문제를 논의하다가 국제보도에서는 국내 보도보다 편향성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토우에 의하면 국제 보도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는 미디어 프레임에는, 이문화와 이민족은 자기들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강조해서 독자의 관

²⁹ 기트린은 헤게모니를 “지배계급(혹은 동맹)의 종속적 계급과 집단에 대한, 그들의 상식과 일상적 관행에의 이데올로기(생각과 가정)의 침투에 의한 지배이다. 그것은 확립된 질서에 대한 대중의 동의의(반드시 고의가 아니다) 조직적이고 교묘한 처리이다” 라고 정의했다 (Gitlin, 2003, p.253).

심을 끄는 ‘이국 정서’나, ‘자기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이민족은 우리보다 뒤떨어지고 있다. 혹은 늦는다고 하는 “자문화 우월성의 강조” 등을 제시했다 (ibid. pp.50-51). 그리고 이토우는 이러한 미디어 프레임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①외국이나 외국인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 ②국제 보도는 국내 보도와 비교해서 복잡한 사상(事象)을 단순화 해서 전달할 필요성이 높다는 것, ③기자가 자국의 독자나 조직의 ‘기대에 응하는’ 것 자체가 자국에 있는 기존 스테레오 타입에 영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그리고 ④국제 보도의 경우는 독자는 거의 자국민(自國民)임으로 선입관이나 편견으로 기사를 생산하는 일이 있다고 했다(ibid. p.51). 또한 이토우는 특정 국의 특정 국에 대한 바이어스의 존재를 지적하여, 그 원인을 “양국간의 역사적인 경위, 불신감, 열등감, 굴절한 의식” 등에 의거한다고 하면서, 전황을 굳이 ‘일왕(日王)’이라고 표현하는 한국의 대일 보도를 그 예로 제시했다 (ibid. p.51).

渡邊良智 (와타나베 요시토모, 1990)는 아사히 신문과 마이니치 신문 그리고 요미우리 신문과 일본 경제 신문의 전후(戰後)의 사실로부터 한국·조선 관련 보도 경향을 분석했다. 와타나베의 연구는 한국에 관한 보도와 북한 관련 보도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 전후 일본신문이 가장 많은 관심을 나타낸 것이 “한국의 국내 문제”와 “일본과 한국간의 문제”이었다는 것을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었다. 또, 보도 내용이 외교 분야와 정치·군사 분야가 80%를 넘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고, 일본인의 한국 인식이 이러한 영역에 치우치는 것을 우려했다. 혹은 한국의 야당 정치가인 김대중에 관한 기사가 돌출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어서 일본 신문의 “한국의 정치상황”에 대한 관심의 높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의 배경으로서 일본 사회의 한국에 대한 “특수한 인식”(ibid. p.249)을 문제시하고, 그것은 “일본이 한국보다 정치의 민주화 라고 하는 점에서 발달하고 있어서, 한국을 지도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 정치가를, 또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했다(ibid. p.252). 또 시기별로 보면, 일본과 한국 사이에 빈번한 정부간 교섭이 있었던 시대는 한국에 대한 ‘비판’이 눈에 띄어, 80년대 이후는 ‘요망’ 하는 사실이 두드러졌다가, 일본 신문의 한국에 대한 태도는 호의적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마이니치 신문이 뜻밖에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것과 반대로 일본 경제 신문이 다른 신문보다 관심이 낮았다. 또 아사히 신문이 한국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이며, 이것과 대조적으로 일본 경제 신문은 가장 호의적인 것 등 지적되었다³⁰. 그리고 일본 신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 대상은 각 신문에서 유사하다고도 지적했다.

楠根重和(쿠스네 시게카즈, 1999)는 국제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일본의 매스 미디어의 한국 인식을 논의했다. 쿠스네는 1945년부터 1996년까지의 아사히 신문의 기사 분석을 실시하여, 한국의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따라 아사히 신문의 한국관이 변화하는 것을 설명했다. 또 “자기를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의해서, 상대방 이미지는 좌우된다”고 하여, 일본 사회의 변화에 의해서도 한국에 대한 의식이 변화하는 것을 설명했다(楠根, 1999, p.138).

쿠스네는 이 연구에서 한·일간의 상호 이해를 위한 바람직한 보도를 제언했다. 그것에 따르면, ①상대방에 대한 중요도의 차이에 인한 정보량의 차이를 지적하여, 일본의 대한(對韓) 보도는 지극히 자의적인 정보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②“야당적 한국 인식”이란 아사히 신문의 야당적 입장이 대한(對韓) 보도를 빗나간 것으로 해 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의 야당이 반미·반군국주의 입장에서 한국을 보는 것과 관련한다.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부터 일본사회에서 “전쟁 가해자 의식”이 일반화 된 것과 한국의 민주화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간신히 현실에 맞은 한국상을 보도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③“역사 인식의 차이”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관의 차이가 어떤 하나의 사상(事象)을 볼 때 쌍방에서 시차(視差)를 일으키는 것이다. 일본은 진지한 과거와의 대치(對峙)를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④“문화 중심 주의”는 일본 중심 주의에 대한 반성을 재촉하고 있다. 쿠스네는 구미의 대 일본 보도에는 일본을 멸시하는 자세가 있지만, 이것과 같은 종류의 경향을 일본의 대한 보도에서 찾아냈다. “한국은 뒤떨어져 있다” 라고 하는 이미지는 한국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것을 저해하고, 상대방에 대한 요구

³⁰ 한국에 대한 비판적 사실은 일본경제신문이 가장 적고, 마이니치와 요미우리는 日經의 3배가 되어, 아사히는 마이니치와 요미우리의 2배가 된다고 한다. 아사히가 가장 비판적이며, 산케이가 가장 호의적인 것이다(渡邊, 1990, p.255).

나 제안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³¹ (ibid. p.142). ⑤“서양 중심 주의의 내면화 위험성”이란 자국 문화 중심 주의와 관련하고, 일본과 한국은 어느 쪽이 보다 서구에 가까울까 싸우고 있는데, 쌍방이 상대방의 originality의 결여를 지적하면서 서양과 자기를 동일시 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군사 정권 때의 한국에 대해서 서구 민주 주의적 가치의 정착을 제언(提言)하는 보도가 현저했는데, 아직 일본 사회는 그러한 제언을 하기에는 미숙하다고 하는 지적이다. ⑥“내셔널리즘의 대립”은 내셔널리즘을 기반으로 한 비판은 상대방으로부터 유사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을 지적하고, 동시에 그것은 자신이 듣기 싫은 비판을 봉살(封殺)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것은 한·일 문제를 터부시하는 경향을 초래하여, 그 결과 편견을 억압해 차별의식을 음습(陰濕)한 것으로 만드는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지적이다. 그리고 ⑦“교류의 자유화”에서는 한국인의 대일(對日) 의식을 분석한 오택섭(1991)의 연구를 소개하면서, 실 체험(實體驗)이 수반하지 않는 이념의 충돌은 상호 이해를 위해서 유익하지 않다고 하고, 다양한 형태의 상호 교류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⑧“저널리즘의 책임”에서 한·일 양국의 저널리스트의 빈번한 교류를 권장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 연구자가 일본 신문의 보도 경향을 분석한 연구를 몇 가지 소개한다. 明治(미이지)기에 창간 된 時事新報³²와 朝日新聞의 사설을 비교하여 거기에 나타난 한국상(像)을 분석한 1982년의 李度珩의 연구는 19세기 말의 時事新報와 전후의 朝日新聞의 쌍방 사설에서 한국에 대한 日本형 이상(理想) 주의의 무책임하고 과도한 관여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 요인을 일본의 국내 여론의 정치적 또는 전략상의 관심사에만 집착하는 일본적 폐쇄성에 있다고 했다(이도형, 1982, p.80). 또한 1990년대의 ‘위안부 문제’와 ‘무역 불균형·기술이전’ 관련 기사로 보도경향을 분석한 李相湖는 아사히와 마이니치 그리고 요미우리의 3가지 신문이 이 문제에 대해 마치 하나같이 같은 논조를 보여 주었다고 했다(이상호, 1992, p.139). 이상호는 일본의 3가지 신문의 이러한 이슈에 대한 역사적·근본적인 인식 부족과 더불어 한국쪽의 문제 제기의 배경에 대한 이해

³¹ 이것과 같은 지적은 앞의 이토우 요이치의 프레임 분석에서도 볼 수 있다.

³² 1882년3월, 慶應義塾出版社(本社東京)에서 창간된 일간지. 福澤諭吉(후쿠자와 유키치) 지도하에서 中上川 彦次郎을 사주로 하여, 福澤 문화생을 주요 스태프로 창간되었다.

에 그 요인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安江良介 (야수에 료수케, 1988)는 일본 신문의 한국보도의 특징으로서 한국의 정치 체제에 밀착한 현상(現狀)에 대한 고정적인 시각이나 예견 능력의 결여에서 오는 빈번한 사실 오인, 그리고 역사적 시야의 결여 등을 열거하고, 결과적으로 일본 신문은 자의적으로 사실을 잘라서 보도한다고 비판했다 (安江, 1988, pp.69-73).

또한 일본과 한국 그리고 중국의 매스미디어와 국제 관계를 분석한 内川 (우치카와) 등의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미디어 종사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해 불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밝혀냈다. 우치카와 등은 한·일 양국의 저널리스트들에 대해 “상대국의 신문이나 텔레비전이 자기 나라에 대해 공정하게 전달하고 있냐”고 하는 설문 조사를 실시했는데, 서로가 상대방에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고했다. 양국의 저널리스트들의 의식에 상호 불신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또 1995년에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저널리스트 심포지엄은 한·일간의 커뮤니케이션 갭(gap)을 만들어 내는 하나의 요인이 한·일 저널리스트의 인식에 있지 않느냐는 문제 의식에서 시작 된 것이었다. 심포지엄에서는 “원래 양국 국민간의 상호 의식을 확대해야 하는 저널리즘이 충분히 기능 못하고, 오히려 불필요한 적대감을 부추기고 있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보고가 있었다(『檢證 韓日報道』, p.10).

이러한 연구들은 우리 시대의 미디어가 국익이나 외교 정책이나 또한 자기 나라 국민들의 상대국에 대한 선입관이나 스테레오타이프 등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III.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과 샘플링

본 연구는 일본의 ‘4대 신문’ 또는 ‘4大紙’ 라고 말하는 아사히 신문, 산케이 신문, 마이니치 신문, 요미우리 신문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미디어가 다양화하는 가운데 신문이 가지는 영향력은 이전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저하하고 있다고 흔히 말한다. 그러나 일본신문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신문은 텔레비전과 함께 여전히 정보원으로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며,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고 인지되어 있는 것을 보여 준다. 본 연구가 분석 대상으로 한 4 가지 신문은 일본의 全國紙이며, 따라서 이들은 일본사회 여론을 형성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항상 신문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분석 기간은 제2차 역사교과서 문제가 일어난 1986년과, 제3차 역사교과서 문제가 일어난 2001년의 각각 일년간으로 했다. 아래 표1은 1986년과 2001년의 4가지 신문의 발행 부수와 동년의 일본 신문 총 발행 부수이다. 이들 4가지 신문의 합계 발행부수는 일본의 신문 총 발행부수의 50%가까이에 이른다.

<표1> 각 신문의 발행부수 비교

년도	아사히	산케이	마이니치	요미우리	일본 총발행 부수
1986	7,590,987	1,987,578	4,179,975	8,923,543	46,102,891
2001	8,319,303	2,026,696	3,986,577	10,286,536	51,890,225

(日本新聞協會 2003年調査結果 <http://www.pressnet.or.jp/>)

샘플링

본 연구는 4가지 신문의 1986년과 2001년의 각각 일년간의 기사 중 아래 표2에 있는 키워드를 제목에 포함하는 기사를 추출했다.

<표2> 샘플링에 사용한 키워드

1986年	2001年
歴史教科書(教科書)	歴史教科書(教科書)
検定制度(検定)	検定制度(検定)
新編日本史	新しい歴史教科書
日本を守る國民會議(守る會)	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會(つくる會)
復古調	

‘역사교과서’ 또는 ‘교과서’와 ‘검정제도’ 또는 ‘검정’은 1986년과 2001년에 공통하는 키워드로서 설정했다. ‘新編日本史(신편 일본사)’와 ‘新しい歴史教科書(새로운 역사교과서)’는 1986년과 2001년에 각각 문제가 된 역사교과서의 명칭이다. ‘日本を守る國民會議(일본을 지키는 국민 회의)’와 ‘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會(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은 문제가 된 교과서를 편집한 단체이며, 기사에서는 각각 ‘지키는 회’나 ‘만드는 모임’과 같이 표기되는 경우가 많다. ‘復古調(복고조)’는 1986년 당시 ‘지키는 회’가 편집한 교과서를 지시하여 사용된 말이며, 정식 명칭인 ‘신편 일본사’의 대명사로 기능하고 있었기 때문에 키워드에 포함했다. 이러한 키워드로부터 알 수 있듯이 본 연구는 광범위한 기사를 포함한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작성했다. 역사교과서 문제는 전후 일본의 이데올로기 대립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말로 언급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분석 대상 기사를 각 신문사의 축쇄판과 원지면(原紙面)에서 수집했다. 이때 신문지면의 독특한 구성 요소인 ‘표제의 공유’를 감안했다. 즉 역사교과서 문제 관련 기사 중에 어떤 하나의 제목을 공유한다고 간주 될 수 있는 복수 기사에 대해서는 모두 분석대상으로 포함했다. 또한 각 신문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원지(原紙) 혹은 축쇄판에서 기사 제목 등을 확인하여 수정하고 분석대상으로 했다. 신문사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할 때 제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³³. 그리고 추출한 샘플 중에서 기사 내용을 확인하고 역사교과서 문제와

³³아사히 신문사에 문의해 보았더니 “기사 검색의 편의를 위해서”란 답을 얻었다. 제목의 글자 수는 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날의 지면에서는 상상 가능한 부분은 생략한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는 후에 검색·열람하는 것이므로 공시성이 없어, 제목 만으로는 기사 내용을 상상하기 어렵다. 그래서 ‘역사 교과서 문제’ 등의 말을 보충한다는 것이다.

무관한 기사는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2. 프레임의 추출

본 연구는 ‘역사교과서 문제’를 말하는 다양한 사회 담론을 프레임으로 설정하여 분석했다. 이 장에서는 프레임과 그 프레임 설정의 근거가 된 담론들을 소개하면서, 일본 국내 또는 외국 연구자, 한국사회와 중국사회가 ‘역사교과서 문제’를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살펴 보기로 한다.

‘역사교과서 문제’는 전후 일본 사회의 이데올로기 대립이 교육 현장에 가져온 다양한 갈등을 말하는 ‘교과서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전후의 민주적 교육이 ‘교육의 역행(教育の逆コース)’을 걷기 시작했을 때부터 일어난 다양한 갈등이 한국이나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근린 국가까지 영향을 미친 것을 역사교과서 문제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프레임이 된 다양한 담론들은 우선은 ‘교과서문제’를 언급하는 담론에서 시작한다.

일본 사회에서 교과서문제를 정의하는 것은 보수적 입장인가 혹은 진보적 입장인가 하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또 한국이나 중국도 일본과 역사를 공유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역사교과서 문제를 언급했다. 혹은 유럽이나 미국의 언론과 연구자들도 각기 독자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을 정리하여 정의했다. 다음 표3은 진보적 입장과 보수적 입장으로 프레임을 나누어서 표지 한 것이다. 그리고 표4와 표5에서 진보파와 보수파의 프레임과 그 프레임마다 대표적인 담론을 일람 표시했다

<표3> 추출한 프레임들

진보적 입장에서의 프레임 설정	보수적 입장에서의 프레임 설정
A. 자의적 감정 프레임	D. 자율성 회복 프레임
B. 위상 재정립 프레임	E. 외교의 희생물 프레임
C. 사회적 이벤트 프레임	F. 외압 유도 프레임
	G. 감정의 이해 요구 프레임
	H. 내정간섭 프레임

<표4> 진보적 입장의 프레임

프레임 명칭	주된 화자	언급
A 자의적 검정 프레임 (보수적집단의 역사왜곡)	진보적 지식인 야당 日敎組 한국과 중국	올바른 역사 인식 필요하다 교육의 우경화/전후 교육의 '역행'이다 침략전쟁 미화와 긍정하지 말라 식민지 지배 긍정하지 말라 전후 민주적 교육의 의기이다
B 위상 재정립 프레임 (경제적 위상의 재 정립)	진보적 지식인 서구 연구자 한국,중국 지식인	국가 정체성 재 정립을 의한 역사수정 일본형 역사수정주의에 의한 역사 고쳐쓰기 신 국가주의적 운동에 의한 정체성 찾기
C 사회적 이벤트 프레임 (이벤트로서의 교과서문제)	진보적 시민단체 진보적 지식인 외국 연구자	우파 미디어와 단체가 만들어 낸 사건이다

<표5> 보수적 입장의 프레임

프레임 명칭	주된 화자	언급
D 자율성 회복 프레임 (역사기술과 제도의 자율성 회복을 지향)	보수적 정치집단학자 우파 지식인 반공 종교단체 지키는 회 만드는 모임	교육의 좌익 편향/ 反日적 역사교육 방지하자 아시아 해방 전쟁/전쟁 불가피였다 아시아 근대화에 기여했다 자학사관(自虐史觀)에서의 탈피하자 일본인으로서의 자신 회복하자 제도의 공정성 유지하고 바르게 운영하라
E 외교의 희생물 프레임 (저자세 외교의 산물)	보수적 정치인 만드는 모임	외교가 역사를 왜곡시켰다 교육이 외교정책의 희생물이 되어 있다 '외압'이 역사를 왜곡시킨다
F 외압 유도 프레임 (미디어의 부적절한 문제의 확대)	보수적 정치가 보수적 지식인 지키는 회 만드는 모임	미디어가 문제를 확대 시켰다 오보가 외국의 압력과 개입을 유발했다 외압 도입으로 자기 주장 강화를 도모한다 (외국의 압력을 유도하기 위한 선정적 보도)
G 검정 이해 요구 프레임 (일본의 검정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한 갈등)	일본정부 문부성	일본은 국정교과서가 아니다 일본은 검정제도를 통해서 교과서를 만든다 한국(중국)은 국정 교과서를 사용한다 정부 및 문부성은 검정에 개입 못한다 검정은 역사인식이나 역사관을 결정 못한다 일본정부의 역사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
H 내정간섭 프레임 (내정간섭 또는 주권침해)	보수적 정치인 보수적 지식인 지키는 회 만드는 모임	외국이 일본의 역사 왜곡 강요한다 수정요구는 내정간섭이며 주체 침해이다 수정요구 수용은 국가 주체성을 상실한다 수정요구는 헌법을 위법하는 행의 강요한다 교과서 문제는 일본 국내 문제이다 재수정은 검정제도상 불가능하다

A : 자의적 검정 프레임 (저의적 검정을 통한 보수파의 역사 왜곡)

이 관점은 진보적 입장에 서서 역사교과서 문제를 전후 교육의 이데올로기 대립의 연장상에서 파악하려 한다. 일본의 진보 세력은 보수 세력에 의한 ‘검정의 자의적 운용’을 문제시한다. 교과서는 검정 과정에서 문과성(구 문부성)³⁴의 ‘수정 의견·개선 의견’을 받아 기술을 수정한다. 그러나 이들 의견의 근거가 되는 기준이 분명치 않고, 게다가 그때마다의 정치적 또는 사회적 상황에 따라 의견이 변화하기도 했다. 진보파(혹은 좌파)는 이것을 “검정의 자의적 운용”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일본 사회당은 우파가 만든 교과서가 문부성(문과성)의 검정 통과한 것을 “아시아 침략 전쟁과 식민지 주의를 미화한 ‘역사 개찬(改纂)’ 교과서의 검정 합격은 전전(戰前)의 잘못된 역사 교육에 다시 길을 여는 것이다” 라고 비판했다 (淵上貞雄, 2001). 이것은 전전의 역사교육이 국민을 전쟁으로 이끄는 데에 큰 역할을 완수했다는 것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오늘날의 교육이 출발한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일본 공산당 역시 우파 집단은 역사를 왜곡한 교과서를 통해서 “일본은 올바른 전쟁을 했다” 라고 주장하여, “전쟁의 역사를 억지스럽게 왜곡시켜서 전시중(戰時中)의 성전론(聖戰論)을 사실상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不破哲三, 2001). 이러한 보수 세력의 ‘편향 교과서 공격’과 ‘역사 개찬(고쳐 쓰기) 교과서’ 편집의 목적은 전후의 일본 사회에 널리 퍼진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이념의 파괴와 전쟁방패(戰爭放棄)를 명기한 일본 국 헌법의 개헌을 목적으로 한 여론 만들기에 있었다(高島伸欣, 2000)³⁵.

아시아 글린(近隣) 국가들의 관점은 교과서를 편집하여 검정 신청한 우파 단체와 교과서 검정의 운용 주체인 문과성(또는 문부성)이 일체가 되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일본의 역사 고쳐 쓰기를 군국주의 혹은 패권 주의의 부활이나 식민지 시대의 향수이며,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의 현상으로 보았다. 중국 역시 일본의 군국주의자가 침략전쟁을 일으켰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역사 왜곡을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역사교과서 문제는 일본사회의 우익화의

³⁴ 문부선(文部省)은 2001년에 문부과학성(文部科學省)으로 개칭했다.

³⁵ 高島伸欣 “국가의 진로를 묻는 중대한 과제”(勞動新聞 2000/11/25)

축도이며, 우익 보수 세력이 전전의 정치 제도와 이데올로기의 회복을 도모하고 있는 것의 집중적인 현상으로 본 것이다. 그리고 교과서는 일본정부와 문부성에 의해서 검정 되는 것으로부터, 일본정부는 역사교과서의 수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민일보01/3/16). 2001년의 검정 결과는 1980년대에 일어난 두 가지 교과서 문제에 있고, 역사 인식이라고 하는 문제의 새로운 중대한 사태이며, 이것으로 “일본 내에서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침략전쟁을 부인하여 미화하는 우익 세력이 존재하고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비판을 했다 (인민일보01/4/9).

이상 자의적 검정 프레임을 구성하는 담론들을 보았다. 이러한 담론들을 근거로 해서 이 프레임이 주장하는 바는 이렇다. “역사교과서 문제는 보수 세력에 의한 역사의 개찬(고쳐 쓰기)에 기인한다. 이것은 검정을 통한 교과서의 기술 수정이라고 하는 형태로 일어나고 있으며, 검정은 정부와 문과성(문부성)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즉 ‘역사교과서 문제’는 문과성(문부성)에 의한 자의적인 검정 운용이 아시아 근린 국가까지 영향을 미친 사건인 것이다.

자의적 검정 프레임은 검정제도의 강화에 반대하는 진보적 학자나 지식인 그리고 교과서 집필자의 입장을 옹호하고, 그들의 주장을 대변한다. 그리고 아시아 근린국, 특히 한국이나 중국 등에서의 역사 왜곡 비판에 적극적으로 동조한다. ‘역사의 개찬(고쳐 쓰기)’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방법은 검정제도 그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지만, 사회적으로 아직 인정 받기 어렵다. 그래서 대안으로서 제도의 공개적인 운용이나 제 삼자 기관에 의한 운영 등, 개선 안을 제시한다.

그러나 자의적 검정 프레임은 검정제도를 인정했을 경우 “검정의 자의적 운용”을 철저히 비판하지 못하게 된다. 한·중 양국은 지키는 회나 만드는 모임과 일본정부·문과성(문부성)을 하나의 ‘역사 왜곡 집단’으로 간주하고 비판한다. 그러나 일본 미디어가 한·중 양국과 같은 관점에서 비판하려면 검정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해야 한다. 그래서 자의적 검정 프레임은 검정제도보다 오히려 문제가 된 교과서를 편집해서 검정 신청한 보수파 단체를 격렬하게 비판하는 경향을 지니게 된다. 왜냐하면 ‘우파’의 교과서를 수정하려면 현재의 교과서 행정 하에서는 검정제도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B : 위상 재정립 프레임 (일본의 정치적 위상의 재정립)

이 관점은 역사교과서문제를 일본사회의 이데올로기 대립이란 관점을 떠나서 보다 넓은 시야에서 보는 것을 가능케 한다. 이것은 역사교과서 문제를 냉전 구조의 변화와 글로벌리제이션의 영향을 받아 아시아에 있어서의 일본의 입장을 새롭게 구축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기인하여 일어난 사건으로 간주하는 관점이다.

리히터 (Steffi Richter)³⁶ 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 일본이 냉전시대의 서쪽 진영과의 관계를 잃었기 때문에 아시아에 있어서의 일본의 입장을 다시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세력이 대두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한 세력은 “지금까지 보지 못할 정도로 토착적인 일본의 독자성을 강조한” 역사교과서로 서양적 현대에 거리를 두고,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세계화에 대항하려고 하고 있다고 보았다³⁷. 그리고 그러한 ‘과거’를 만드는 시도는 괴로운 현실을 완화하거나 혹은 그것으로부터 결별하려고 하는 시도이거나 (Richter, 2003, p.1), 혹은 ‘심리적 구제’ 인 것이다³⁸ (Morris-Suzuki, 2001).

그러나 이러한 교과서는 “전과자의 낙인이 찍히며 [...] 역사가 단죄되어, 침략자란 오명을 씻지 못한 일본”³⁹을 위해, 침략 정책이나 식민지 지배를 철저히 변호하면서 전전의 역사관을 재구성 한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미래를 상실한 일본인에게는 “일본인으로서의 자부심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매력적인 메시지로 돌린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인 개개인을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에 동일화 시키기 위한 함정이며, 동시에 전후의 실증주의적 역사 연구의 신뢰성을 손상시켜서 심각한 문제를 일본의 지식층에 던진 것이다(藤永壯, 1998, pp.286-308).

이러한 역사의 고쳐쓰기는 또한 보수 세력이 냉전구조가 붕괴한 21 세기에 맞추어 그 체제를 변화시키고 있는 데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간주하는 관점이 있다. 종래 일본의 내셔널리즘은 ‘반공 내셔널리즘’이었는데, ‘반공’의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³⁶ Prof. Dr. Steffi Richter. 독일 Leipzig 대학교 교수. 일본학.

³⁷ 독일의 게오르구·엑카트 국제 교과서 연구소, 핀겔 소장에 대한 인터뷰 기사(梶村太一郎, 2001, p.131)

³⁸ “(만드는 모임의) 역사 교과서가 목표로 하는 것은 국가 중심적인 질서의 재구축이며, 일본국민의 심리적 구제일 것이다” Tessa Morris-Suzuki (朝日2001/4/5).

³⁹ 이 부분은 후지나가가 中村燦(나카무라 아키라) 『大東亞戰爭에의 길』(展轉社, 1990)에서 인용.

미국과 대립하는 위협성을 띠게 되었다. 또 보수 세력의 정책 모순을 합리화해 온 것은 ‘象徴天皇制(상징 천황제)’이었지만, 그 주역이었던 히로히토는 죽었다. 그래서 만드는 모임의 교과서는 국민이 정부와 대립하지 않도록 “근대의 천황교(天皇敎)로서의 야스쿠니”를 이용하면서 새로운 ‘일본형 원리주의’로 보수 세력이 이데올로기와 지배 체제를 재구축해 나가려고 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小森 陽一, 2004)⁴⁰.

이러한 자국 중심 사관은 1990년대 중기로부터 명확하게 된 국가 예고이즘의 각성을 호소하는 것이다(安丸良夫, 2001)⁴¹. 그것은 皇國史觀(황국사관)의 단순한 부활이 아니고, 천황의 권위나 그것에의 승배는 국민 국가적인 공동체 안에 구성요소로서 재정의되어 있어서, 민주주의나 국민 주권과 모순되지 않는 형태로 자국중심 사관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자국중심 사관은 국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것의 부정이며, 국가 예고이즘의 즉시적인 긍정과 다름없다(ibid. 2001, p.82). 이는 국가를 보편적인 것으로 하고, 모든 행동은 그것이 국익을 위해서 라면 보편적인 正義와 보편의 규범에 근거하는, 정당한 행동이라고 하는 합의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都正一, 2001). 그리고 새로운 역사(혹은 역사교과서)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집단적 기억을 역사적 기억으로 바꾸기 위해 과거를 소유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며, 역사교과서 문제는 ‘우월론적 국가주의’와 ‘패권 주의적 민족주의의 부활’이 일으킨 사건으로 간주되었다(都正一, 2001, pp.84-98)⁴².

이러한 담론을 근거로 해서 위상 재정립 프레임은 이렇게 주장한다. “일본형 역사 수정주의에 의해서 서양적 현대에 거리를 두고,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글로벌화에 대항하려고 하는 곳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전술한 자의적 검정 프레임이 검정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보수파에 의한 역사 왜곡을 비판해 온 것과 비교하면, 이 프레임은 제도

⁴⁰小森陽一(고모리 요우이치, 도쿄대학 대학원 종합 문화연구와) “만드는 모임 교과서에서 일본의 보수 구조를 읽는다”(http://www.hansen-jp.com/209komori.htm). 小森는 “벌써 일본 사회는 우경화를 끝마치며, 전체주의의 단계에 들어갔다”고 본다(2004/1/1).

⁴¹安丸良夫(야스마루 요시오). 2005년 3월까지 와세다 대학교 대학원 문학연구와 객원교수. 인용 부분은 “역사가의 윤리란 무엇일까” 『世界』(2001, p.82)

⁴² 都正一(경희대학교). “집단적 기억을 역사적 기억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世界』(2001, pp.83-93).

그 자체에는 구애 받지 않고, 보다 광범위한 사회 상황에 대한 비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즉 역사교과서 문제를 일본 사회 내부의 이데올로기 대립이라고 하는 관점뿐만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시야로부터 정의하려고 한다.

1980년대에 경제적·문화적으로 전성기를 맞이한 일본 사회는 1990년대에 들어와 현저하게 나타난 장기 경제적 불황에 의해서 자신을 상실하여, 게다가 냉전 구조의 변화와 글로벌리제이션의 움직임 속에서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다양한 형태로 계속 위협 받아 왔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 사회에 “구미 제국의 힘이 동아시아를 삼키려고 한 그 제국주의의 시대”를 상기시켜서, 아시아에 있어서의 일본의 입장을 새롭게 재구축 하려는 시도를 유발했다. 그 방법은 일본이 “자국의 전통을 살려서 서구 문명과의 조화의 길을 찾기 시작하여, 근대 국가의 건설과 그 독립의 유지에 노력”⁴³한 초기 근대화 시기처럼, 지금 다시 “세계사적 시야 안에서, 일본과 일본인의 자화상을, 품격과 밸런스를 가지고 생생하게 묘사한 교과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실현시키자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실태는 지금까지 볼 수 없을 정도로 토착적인 일본의 독자성을 강조한 역사교과서에 의한 내셔널리즘의 고양이며 (Richter, 2003, p.1), 우월론적 국가주의와 패권주의적 민족주의의 부활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다 (도정일, 2001).

C : 사회적 이벤트 프레임 (사회적 이벤트로서의 역사교과서 문제)

사회적 이벤트 프레임은 역사교과서 문제를 우파 단체와 미디어, 그리고 일본정부가 만들어 낸 사건으로 보는 관점이다. 倭義文(타와라 요시후미)⁴⁴는 ‘만드는 모임’의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과 문부 과학성, 그리고 산케이 신문의 합작으로 간주하고, ‘만드는 모임’ 사건이 미디어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건인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고 한다. 타와라에 의하면 산케이 신문은 1995년 무렵에 부수 신장을 위해서 교과서문제를 불 붙이는 것을 계획했다 (타와라, 2001, p.112).

⁴³ ‘만드는 모임’의 “주장”(http://www.tsukurukai.com/02_about_us/01_opinion.html)

⁴⁴ 타와라는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 네트 21’의 사무국장. 이 조직은 이에나가 교과서 재판의 지원 활동을 계승하고, 교과서문제를 중심으로 어린이 와 교육의 문제에 임하는 전국적인 정보와 운동의 센터로서 1998년에 설립되었다 (『徹底批判 最新日本史』, 2002).

산케이 신문이 ‘만드는 모임’과 협동한 배경에는 산케이 신문사의 영업 전략이 있었다. 산케이는 당시 구독료를 인상하면서, 한편으로 판매 부수 200만부를 달성하기 위한 ‘챌린지 200’을 성공시키려면 타사 신문에 없는 특징 있는 독자적인 지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교과서 문제’로 그러한 계기를 만드는 것을 계획했다⁴⁵. 산케이는 ‘만드는 모임’이 결성된 후 기관지적 역할을 담당하고, 산케이 산하의 잡지 ‘正論(세이론)’은 만드는 모임의 홍보 잡지로서 활약했다. 그리고 산케이의 이러한 ‘문제 제기’에 의해서 다른 잡지들도 교과서 문제나 위안부 문제를 취급하게 되었다 (ibid. p.112).

산케이 신문과 ‘만드는 모임’의 모체를 형성한 ‘자유주의 사관 연구회’ 등은 1995년 경부터 접촉이 있었는데(타와라, 2001), 여기에 종래부터 보수 논자이며 “國民の油斷(국민의 방심)”의 저자인 西尾幹二(니시오 칸지), 만화가 小林よしのり(코바야시 요시노리), 일본 사상 사 연구자 坂本多加雄(사카모토 타카오) 등이 합류해서 ‘만드는 모임’은 1997년 1월에 결성되었다(小熊英二, 2003, p.1). 그 후 산케이 신문은 교과서 출판사 각 사의 신규 교과서의 원고가 완성된 1999년경에 “교과서의 성적표”라고 하는 연재를 개시했다. 이것은 현행 역사교과서의 역사 기술의 적성(適性)을 ‘신화’나 ‘고대’ 등 항목별로 평가한 것이며, 기존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다(朝日 2001/4/4). 또한 ‘만드는 모임’의 교과서가 검정을 합격하자마자 “새로운 교과서의 충격”이라고 하는 연재 기사를 게재했는데 이것은 ‘만드는 모임’의 교과서와 타사 교과서를 비교하다가 타사 교과서를 비판하면서 ‘만드는 모임’ 교과서를 어필하는 기획 기사이었다. 따라서 사회적 이벤트 프레임은 역사교과서 문제를 미디어가 이윤 추구 과정에서 의도적·비의도적으로 일으킨 사건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D : 자율성 회복 프레임 (역사 기술과 검정제도의 자율성 회복)

보수파는 전후 일본의 교과서는 좌파의 학자나 교육자에 의해 마르크스주의나 노동

⁴⁵ 산케이 신문은 自由主義史觀研究會 대표인 藤岡信勝에 “일본 근·현대사에 관한 역사이야기”라고 하는 연재기사를 의뢰하고, 이것은 후에 『교과서가 가르치지 않은 역사』란 책이 되었다(産經新聞社간). 이 책은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역사 교과서에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시민들 사이에 널리 알리기 위한 책이었다.

운동의 주장만 기술한 것이 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편향(偏向) 교과서를 바로 잡으려면 우선 좌파의 압력에 의해서 빼뚫어진 검정제도의 자율성을 되잡아서, 공정하고 엄격한 운용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검정제도는 계속 좌파의 압력에 의해 원래 가지고 있던 기능을 잃어서, 좌경화 된 편향 교과서를 막을 수 없게 되었다고 우려한다.

이 관점은 전후 일본은 ‘도쿄 재판 사관’을 수용하고 ‘대동아 전쟁’을 침략 전쟁이라고 잘못해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 점령 군이 미국의 ‘역사 인식’을 이식하는 데에 성공했는데, 그들의 교육 목적이 일본인에게 전쟁에 대한 죄악감을 이식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사회는 지도자가 아시아 근린 국가에서 사죄를 반복하는 것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産經2005/8/4). 전후의 점령 군 주도의 교육은 일본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잃게 해서 이것이 교육의 황폐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전후의 교육을 점검하고 우리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기 위한 역사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주장이다.

일본 사회의 일부에서는 ‘침략전쟁’이라고 하는 말을 역사교과서에서 사용하는 것을 구애한다. 그 이유는 滿州事變(만주사변) 이후의 전쟁이 가지는 “구미 열강에 의한 식민지 지배로부터 아시아를 해방했다” 라고 하는 측면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침략전쟁’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전쟁에 종사한 사람이나 英靈(전사자)에 대한 명예 훼손”이 되며, 또한 “일본의 역사나 일본인에 대한 모욕”이 된다. 지키는 회(日本を守る國民會議)는 “헌법의 개정”과 “나라를 지키는 국민 의식의 고양”, 그리고 “교육의 정상화” 라고 하는 목표를 내걸어 ‘편향 교과서’의 적발과 비판을 일삼는 단체이었다. ‘지키는 회’ 역시 “만주 사변 이후의 전쟁은 침략 전쟁이다” 라고 하는 좌파의 역사관을 지워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982년에 ‘근린제국조항(近隣諸國條項)’이 검정 조항에 추가되어 문부성은 이제 교과서의 ‘침략’ 기술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⁴⁶. 그래서 ‘지키는 회’는 천황중심의 오른 역사를 되찾는다는 자기들의 주장을 담은 역사

⁴⁶ 1982년의 사건은 교과서에 기술된 ‘침략’을 ‘진출’로 수정했다는 보도가 단서가 되어 일어난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일본정부는 검정조항에 근·현대사에 관한 기술은 근린 국가에 배려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교과서의 출판을 결정한 것이었다 (村上義雄, 1986, p.80).

이러한 담론들이 자율성 회복 프레임을 형성했을 때는 “전후의 일본 사회는 점령 군 (또는 전승국)에 의한 반군국주의적 ‘민주교육’이나 마르크스주의에 오염된 학자와 교육자에 의해서 자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교과서를 낳았다. 검정제도는 이러한 교과서를 올바르게 수정하여, 다채롭고 다양한 교과서를 낳는 시스템으로서 원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검정제도의 약체화는 교육의 황폐와 결합되어 있어 제도의 중립·공정성 유지와 엄격한 적용이 일본사회의 안정과 질서의 회복으로 연결된다” 라고 주장하게 된다.

자율성 회복 프레임은 다양한 형태로 검정제도의 중립성 유지와 공정하고 엄격한 운용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 교과서의 채택은 “일방적인 주의주장을 교육현장에 가져가려고 하는 교원”(産經2001/2/25)이 아니고 원래 담당자인 각 지방의회가 선정하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는 것을 주장한다. 또 제도를 비판하거나 폐지를 주창하는 소리를 비난하고 배제하여, ‘만드는 모임’ 교과서의 채택 반대 운동을 사회 질서를 소란 하는 ‘좌익·반체제 운동’과 동일시한다. 이와 같이 자율성 회복 프레임은 광범위한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우파 입장에서 언급할 때 이용된다. 그래서 이 프레임은 검정제도와 교과서 행정 전반에 관한 보수파의 포괄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E : 외교의 희생물 프레임 (일본정부의 저자세 외교의 산물)

외교의 희생물 프레임은 “일본의 역사 교육은 외교의 희생물이 되어 있다. 역사교과서 문제를 일으킨 요인들 밑바닥에는 외국의 개입을 감수한 일본정부의 저자세 외교 (또는 謝罪外交)⁴⁷ 가 있다” 라고 주장한다. 즉 1982년의 ‘오보 사건’에서 일본정부가 치졸한 외교적 결착을 붙인 것이 발단이 되어, 1986년의 ‘신편 일본사 외압 검정 사건’에서는 일본정부가 한국과 중국의 ‘외압’에 굴해 검정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위에서 이 프레임은 한·중 양국과의 비판이나 수정요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외무성의 외교 정책이나 문과성(문부성)에 대한 태도 등을 감시한다. 이러한 태도는

⁴⁷ ‘저자세 외교’ 또는 謝罪外交란, 외국의 일본 비판에 대해 반박하지도 않고 거부도 못한 채 외국이 말하는 대로 양보하는 모습을 야유하는 말이다. “사죄외교는 일본의 걸음을 ‘악’으로 단정한 도쿄재판의 맹종(盲從)에서 시작되었다” (西村眞吾 자민당 국회 의원).

1982년의 첫번째 역사교과서 문제인 ‘침략·진출 오보 사건’ 때부터 볼 수 있었는데, 특히나 ‘중군위안부’의 징용에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한 1993년의 정부 보고서 발표, 1993년의 細川(호소카와) 수상의 전쟁 책임 인정 발언, 그리고 1955년의 村山 수상이 일본의 전쟁 책임을 명문화한 ‘村山談話(무라야마 담화)’ 등에 의해 이러한 우파의 태도는 더욱 강화되었다.

‘중군위안부’ 문제는 1991년 12월에 한국인 전 위안부가 일본정부에 대해 사죄 요구와 배상 청구로 제시한 것으로부터 표면화했다. 1993년 8월에 일본정부는 당시의 河野洋平(코노 요헤이) 내각 관방 장관의 담화로 위안부 징용(徵用)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와 강제성을 인정한 보고서를 제출했다⁴⁸. 그리고 일본정부는 그 후 교과서에게 위안부의 기술을 시작하다가 1997년도 중학교용 역사교과서에 위안부가 기재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적으로 큰 파동을 불러일으켜서, 1996년에 국회 내에 ‘明るい日本國會議員連盟(밝은 일본·국회 의원 연맹)’ 이나 이듬해에는 ‘日本の前途と歴史教育を考える若手議員の會(일본의 전도와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신진 의원의 회)’ 등의 우파 국회의원 단체를 낳는 계기가 되었다.

‘신진 의원의 회’⁴⁹는 중학교 교과서에 ‘중군위안부’가 기재된 것을 직접적인 계기로 발족한 의원 단체이다. 모임에 참가한 의원들은 “사실(史實)에 근거하지 않는, 반일(反日)적인 교과서로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에 대한 불안”을 공통적인 인식으로 하고 있었으며, “초등·중등 학교의 역사 교육이 정치나 외교, 특정의 이데올로기에 흔들리고 있는 현상을 간과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입장을 취했다. ‘신진 의원의 회’는 ‘중군위안부’ 징용에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한 당시의 정부 관계자나 학자·연구자 등을 초청하고 독자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중군위안부’는 역사적 근거의 실증에 실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외교적으로 군의 관여와 강제성을 인정한 것이었다고 결론지

⁴⁸ “우리는, 역사 연구, 역사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영원히 기억에 남겨서 같은 잘못을 결코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단단할 결의를 제차 표명한다”(위안부관계 조사결과 발표에 관한 河野 내각 관방 장관 담화1993/8/4)

⁴⁹ 1997년 2월 27일에 자유민주당 中川昭一(나카가와 쇼이치) 의원이 중심이 되어, 중의원과 참의원 합해서 87명의 국회 의원의 참가에 의해서 발족되었다.

었다⁵⁰. 즉 ‘중군위안부’는 외교·정치의 산물이며, 문부 과학성의 검정 정책에는 “사실보다 외교에 대한 배려” 라고 하는 자세가 확립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진 의원의 회’는 역사교과서는 “국민 의식의 형성에 기여한다고 하는 교과서의 적극적 역할로부터, 史實을 존중하는 교과서”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歴史教育への疑問』, p.4)⁵¹. 물론 여기서 말하는 “史實을 존중한다”는 것은 ‘중군위안부’ 같은 근거 없는 역사 기술을 삭제할 것을 의미한다.

‘밝은 일본 국회의원 연맹’⁵² 은 ‘신진 의원의 회’의 성립에 앞서서 1996년 6월에 역시 ‘중군위안부’ 문제를 계기로 해서 결성되었다. 이 의원 단체는 설립 취지에서 “(일본을) 침략 국가로서 죄악시 하는 자학적인 역사 인식이나, 비굴한 사죄 외교에 대해서는, 결코 동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안이하게 타국의 견해에 영합하여 추종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그 동안의 정부의 ‘저자세 외교’를 언외(言外)에 비난했다.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만드는 모임)’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1997년에 설립되었다. 이 단체도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위안부 기술을 문제시하여, ‘중군위안부’ 기술이 없는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발족한 단체이다. ‘만드는 모임’에 의하면 교과서 악화의 발단은 1982년의 일본 미디어의 ‘오보 사건’, 즉 검정 과정에서 ‘침략’

⁵⁰일본 정부가 군의 관여를 인정한 그 배경에는 한·일간에 걸치는 ‘위안부 재판’ 지원 단체의 격렬한 운동과, 외교적 그리고 양국의 국내 정치에의 배려가 있었다고 하여, 일본군의 관여 인정은 ‘정치적·외교적 결착’이었다는 것이다.

⁵¹신진 의원의 회에 소속하는 위원들은 “중군위안부의 존재는 그 역사적 실증에 실패하고 있으며, 외교적 배려라고 하는 ‘정치적 관여’에 의해서 역사의 진실이 왜곡되고 있다”(衛藤晟一의원) 라고 하거나, 혹은 1982년의 ‘침략·진출 오보 사건’과 1986년의 ‘新編日本史 외압 수정 사건’을 예로 들어 이러한 사건은 정치적 타협에 의해 초래된 것이며, 그것이 교과서 검정에 영향을 주어 일본의 공교육을 왜곡했다고 했다 (石崎岳 의원). 또 “외교교섭의 처리 수단으로서의 ‘정치적 판단’이 교과서 검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간주하고 있고(坂上善秀의원), 1982년의 ‘근린 제국 조항’의 추가도 정치적·외교적 결착이며, 이것이 그 후의 검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나타냈다 (下村博文의원). 또한 일본 근대에 있어서의 일본사의 평가를 “일부의 학자에 의한 유도로, 외국 비판에 영합하고 형성된 것”이라고 비판하거나(小野晋也의원), 1990년대의 교과서 정책을 “사실에 반하는 것을 정치적 술책 안에서 정부가 인정해 버려, 자국의 역사를 부정·단죄해, 말살하려고 하는 교과서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砂田圭祐의원).

⁵² 1994년에 발족한 ‘중전 50주년 국회 의원 연맹’이 명칭을 바꾼 것. 회장은 奥野誠亮 (오쿠노 세이스케). 오쿠노는 결성총회의 기자회견에서 “위안부는 상거래 행위, 강제 연행은 없었다” 라고 발언하여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의 위안부 기술을 비난했다.

기술을 ‘진출’로 수정했다고 하는 보도에다가, 거기에 부추겨진 외국의 개입에 대한 정부의 ‘저자세 외교’에 기인한다. 1982년의 사건은 일본의 교과서 검정에 대한 첫번째 외압(外壓)이었으며, 일본정부가 이러한 외압에 의연히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역사 교육과 역사교과서가 왜곡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⁵³.

외교의 희생물 프레임은 1990년대 전쟁에 대한 반성이 ‘끝이 없는 사죄’⁵⁴로 변화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강화되었다. 90년대까지 일본의 정권은 전시중(戰時中)의 일본의 행위에 대해서 ‘깊은 반성과 유감’을 표명해도, ‘사과’라고 하는 표현은 주의 깊게 피해 왔다. 그 이유는 전술한 바 ‘대동아 전쟁’이 가지는 구미 열강에 의한 아시아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동아의 여러 민족을 해방하여 독립을 제촉했다”고 하는 측면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가운데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는 “아시아에 대한 과거의 청산”이란 문제에 대한 ‘진보적 보수’의 하나의 입장 표명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술한 ‘중군위안부’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있던 국회에 ‘보수 반동’을 불러일으켜서, ‘밝은 일본 국회의원 연맹’이나 ‘일본의 전도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신진 의원의 회’ 등의 의원 단체와 ‘만드는 모임’을 낳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F : 외압유도 프레임 (미디어에 의한 문제의 부적절한 확대)

보수파는 역사교과서 문제를 일본 미디어의 ‘외압 유도’가 초래한 사건으로 정의한다. 교과서문제는 국내 문제인데 ‘좌파’ 미디어가 자기 입장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외국의 압력의 유도를 의도하여 것으로 갈등이 일어났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일본의 미디어는 외국의 일본 비판을 센세이셔널하게 취급하다가 이러한 논조를 외압으로 이용하여, 자기 입장을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鈴木健二, 1991; 佐渡, 2003에서 재인용)⁵⁵. 그래서 보수파 입장은 역사교과서 문제는 검정제도에 비판적인 ‘좌파’ 미디어가 국내 여론을 주도하려고, 한국이나 중국의 비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선정적인 보도

⁵³ http://www.tsukurukai.com/02_about_us/02_maso.html

⁵⁴ 산케이 신문의 기사에서 인용. “一億 총 참회(懺悔)에서 시작한 日本人의 전쟁에 대한反省은 어느새 謝罪로 변했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은 역사 인식 문제를 외교 카드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 끝이 없는 謝罪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産經2005/8/2)

⁵⁵ 佐渡眞紀子(2003) “マスメディアの自國報道と受容者の自國イメージとの關連性”에서 재인용.

를 하다가 일어났다고 본다. 예를 들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검정신청 교과서의 내용을 폭로하거나 한·중 양국의 일본에 대한 반감을 새삼스럽게 부추기는 내용의 보도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정부는 문제의 근본 요인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외교적 배려만으로 문제의 해결을 도모했기 때문에, 1982년에 이어서 1986년에도 역사 교과서 문제가 재발했다고 분석했다 (林, 1987, pp.12-15).

산케이 신문이 1982년의 사건을 ‘침략·진출 오보 사건’ 이라고 명명한 것처럼, 이 사건은 미디어의 오보에 의해서 일어났다. 보수계 잡지 ‘諸君!(쇼큰!)’은 1982년 10월 호에서 교과서 문제를 취급 하여, ‘교과서 문제, 大 신문의 범죄’, ‘신문이 크게 기른 작은 오보’ 등, 아사히 신문을 비롯한 주류 미디어의 보도 체제를 비판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보수파에 의한 역사교과서 비판은 동시에 신문에 대한 비판이란 경향을 지니게 되었다 (吉見俊哉, 1998, p.202)⁵⁶.

‘신진 의원의 회’ 대표 中川昭一(나카가와 쇼이치) 의원은 역사교과서 문제를 ‘중군위 안부’ 문제처럼 근거 없는 사실(史實)이 일부 매스 미디어나 특정 인식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제기되어, 이것이 ‘일부의 외국’에 의해서 증폭되다가 일본정부를 움직여, 역사 교과서의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또 회원인 大野松茂(오오노 마츠시게) 의원도 “일본의 매스 미디어가 정부 고관이나 정치가의 발언을 크게 다루는 것으로 외국의 반응을 부르고, 그러한 반응으로부터 소란을 피워 정부 비판을 한다” 라고 말했다⁵⁷. 또 ‘지키는 회’ 역시 1986년의 역사교과서 문제의 발단은 “매스컴(즉 아사히 신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라고 하였다 (村上, 1986, p.45).

또 외압 유도 프레임은 한·중 양국의 미디어가 자국 정부의 대 일본 정책을 비판하거나 여론 고조를 목적으로 선정적인 보도를 실시해서 문제를 확대·심각화 시켰다고 비난한다. 특히 한국정부가 국민 여론의 통합을 위해 ‘반일 캠페인’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이번 역사교과서 문제에서는 한국정부의 일본 비판과 수정 요구의 배경

⁵⁶ 小森陽一&高橋哲哉 편 『ナショナル・ヒストリーを超えて(내셔널 히스토리를 넘어서)』(東京大學出版會, 1998)에 있는 吉見俊哉 “雑誌メディアとナショナリズムの消費(잡지 미디어와 내셔널리즘의 소비)”에서 인용.

⁵⁷ 『歴史教科書への疑問(역사 교과서에의 의문)』(展轉社, 1997) 에서 인용했다.

설명에서 이 담론이 빈번히 사용되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이 주장하는 문제의 해결 방법은 반일 보도로 국론을 북돋워 정책 수행을 도모한다는 수단을 버리는 것이다⁵⁸.

G : 검정의 이해 요구 프레임 (검정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 갈등)

이 관점은 주로 보수파에 의한 것으로, 역사교과서 문제는 일본의 검정제도에 대한 오해 혹은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다. 일본정부의 견해는 “한국이나 중국은 국정(國定) 교과서 제도이기 때문에 검정제도를 잘 이해 못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역사 교과서의 기술 내용에 개입할 수 있다고 보는 오해를 낳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으로부터 국회나 정부 담화 등에서는 항상 “일본의 교과서는 국정은 아니더라고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森수상, 국회의사록2001/3/12) 라든가 “우리나라 교과서는 국정이 아니고 검정제도인 것 등에 대해서, 종래부터의 설명을 했습니다”(小泉수상, 국회의사록2001/10/30) 등의 답변을 반복했다. 즉 교과서 제도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간주한 것이다⁵⁹.

일본은 1903년부터 패전 후의 한 시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국정교과서를 사용했다. 그러나 패전 후에 국정교과서는 군국주의·전체주의를 지탱한 국가 중심적인 교육의 축(軸)이었다고 간주되었다. 그리고 국정교과서의 폐지와 검정제도의 도입은 “교육의 민주화라고 하는 깃발을 들고 [...] 군국적 중앙 집권적 교육의 지방 분권적 교육 제도로의 발전이 되어 나타났다”⁶⁰고 크게 평가 받았다. 즉 검정제도에의 이행은 바로 군국주의에서 민주주의나 평화주의로 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국정교과서는 국가 이데올로기를 국민에게 주입하기 위한, 국민 통합의 기둥이 되는 역사관을

⁵⁸산케이신문은 “중·한 양국은 “일본의 매스컴 보도→중한 양국으로부터의 외압→교과서 검정에의 일본 정부의 정치적 개입이라고 하는 악순환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라고 했다 (産經2001/3/5).

⁵⁹그러나 이러한 정부 주장은 1982년의 역사교과서문제 때에 벌써 야당 의원에 의해 “한국이나 중국은 일본의 검정 제도를 숙지하고 있다”(사회당 나라사키 의원1982/7/29)고 반론 되었다. 또 요미우리 신문이 "(중국의) 唐 외무부장은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가 매우 복잡한 것은 이해하고 있다" 라고 보도한 바 있다 (讀賣2001/3/7). 그래서 이 담론은 한·중 양국이 일본의 검정제도를 이해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주장하는 것이다.

⁶⁰일본사회당 相馬助治(소우마)의 국회 발언(1953/2/3). 기타 일본사회당의 矢嶋三義 (야지마) (1956/3/16)나 일본 교원 노동조합 중앙 집행위원장 小林武(고바야시 다케시) (1954/3/13) 등이 같은 발언을 했다.

형성하기 위한 도구이다라고 비판 받게 되었다(讀賣2001/5/8)⁶¹. 그래서 국정교과서에
서 검정교과서에의 이행은 ‘전전부터 전후에, 국정으로부터 검정에’ 라고 하는 단순한
도식으로 환원되어, 교과서 검정제도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상징으로서 기능 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앞의 정부 견해를 읽어 보면 거기에는 “민주와 자유로
‘집권적 이데올로기 통치’에 심판을 내리는 정치적 올바름”(孫歌, 2001, p.160)⁶²을 주장
하는 것이 된다. 즉 이는 검정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이며 정의(正義)이다
라고 하고, 국정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를 ‘전체주의 국가’ 혹은 ‘민주화가 덜 된
국가’로 간주하는 것이 된다.

또한 이 담론에는 문과성(문부성)은 검정에 개입 못 한다고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
다. 검정제도는 국가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규칙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고,
정부 또한 문부성은 검정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개입 못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정
담당자는 문과성(문부성)의 직원이며, 그들의 검정 결과를 심사하는 검정 심의회 의원
도 문부 대신의 임명으로 조직 된다. 그래서 문과성(문부성)은 검정에 개입 못 할지도
모르나, 검정과 그 후의 심의에 관여하는 인원을 선택하여 조직하는 것으로 검정결과에
대해 어떤 방향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간주된다⁶³. 한국이나 중국 입장에서 보면 검정
제도를 통해서 교과서를 인정하는 시스템이니 문과성(문부성)과 일본정부는 교과서 내
용에 책임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리 검정제도에 개입 못 한다고 해도 교과서를
인정하는 주체가 일본정부와 문과성(문부성)임으로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을 가져야 하며,
교과서의 기술 내용을 인정한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 일본정부는
“교과서의 역사 인식이나 역사관이 정부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⁶⁴ 등의 말로 책임을 회피해 왔다.

⁶¹ “한국은 국사 교과서가 사실상 국정교과서인 것을 상징되는 것처럼, 국민통합의 기둥이 되는
역사관이 있다” (讀賣新聞, 2001/5/8). 또한 “중국에서는 공산당 독재 하, 역사인식 이라면 국가
당 공인의 역사관 밖에 존재하지 않으며, 그 역사관에 대한 비판이나, 언론의 자유는 허용되지 않
다. 당연히 교과서는 국정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讀賣2001/3/2) 등의 기사가 있다.

⁶² 孫歌(Sun Gae). 중국 사회과학 문화연구서 연구원.

⁶³ 문과성은 2001년 1월, 만드는 모임 교과서의 검정 통과를 우려하고 반대한 외무성 출신 심의
회 위원을 다른 부서로 이동시켰다(산케이 신문은 ‘更迭’로 보도).

⁶⁴ 福田(후쿠다) 官房長官의 담화(외무성 2001/4/3). 그러나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교과서의 내용

이러한 담론을 기반으로 하는 검정의 이해 요구 프레임은 “역사교과서 문제는 일본의 검정제도에 대한 오해나 이해 부족에 기인한 갈등이다. 그래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검정제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형태의 주장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한·중 양국은 교육 과정에 부분적으로 국정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지만, 양국은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를 잘 알고 있으며(朝日2001/3/1, 産經 2001/3/1),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가 매우 복잡한 것도 이해하고 있다 (讀賣2001/3/7). 이러한 것으로부터 검정의 이해 요구 프레임은 마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수용자에 주도록 기능 하여, 동시에 수용자로부터 검정제도 그 자체의 시비를 묻는 관점을 상실 시킨다. 그러나 전술한 바 이러한 변명은 단지 검정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며, 검정제도가 역사교과서 문제의 원인이 되어 있다는 것을 호도하기 위한 구실이다⁶⁵.

H : 내정간섭 프레임 (내정간섭 또는 주권 침해)

보수파 입장은 한국이나 중국이 일본의 교과서의 기술 수정을 요구하거나 검정제도를 비판하는 것은 내정간섭 혹은 주권 침해이며,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는 것은 국가로서의 주체성을 잃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우선 “교과서 문제는 패전 후 일본의 이데올로기 대립에 기인한 것이니 순수하게 국내 문제이다” 라고 하는 관점이 있다. 그래서 외국이 이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내정에의 간섭이라고 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과는 달리 한국이나 중국의 수정요구를 ‘제도상 불가’ 라고 하는 말로 거부하는 태도가 있다. 검정제도는 정부나 문과성(문부성)이 개입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는 한·중 양국의 비판과 수정요구에 반박하는 태도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교과서문제를 국내문제로 보고 간섭을 기피한다는 태도는 일치한다.

한·중 양국의 비판을 내정간섭으로 반박하는 입장은 검정제도에는 아무 문제 없다는

이 정부 견해와 일치하지 않아도 검정을 통해서 인정한 한 내용에 책임을 가져야 할 것이다.

⁶⁵마이니치 신문은 기사에서 “한국과 중국이 역사교과서로 반발하고 있는 것도, 근본 원인은 검정 제도에 있다” (毎日2001/7/11) 고 주장했다.

전제에 입각하는 것이며 역사교과서 문제를 논하는 데에 제도적 측면에서 언급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검정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제도적 문제를 은폐하기 위한 담론이기도 하다. ‘내정간섭 프레임’은 외국의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 對 그들’이라고 하는 대립 구조 안에 배치하여 그린다. 이 프레임이 주장하는 문제의 해결 방법이란 각각의 나라가 각각의 역사를 구축하여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⁶⁶.

한·중 양국의 수정요구를 ‘제도상 불가’ 라고 하는 말로 거부하는 입장은 한국이나 중국의 수정요구를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검정제도에의 개입을 문제시하는 것이다. 검정제도는 전전의 국정교과서를 축으로 한 국가주의 교육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제도상 국가가 교육을 좌우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검정에의 개입을 전제로 하는 수정요구는 수용 못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입장에 서는 신문은 검정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간과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실제 이를 운용되고 있는 현행 제도로서 시인하고, 제도의 개선 내지 폐지를 제안하면서도 그것과 한·중 양국의 수정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로 본다. 이 입장 역시 교과서문제를 일본 국내 문제로 보고 있으며, 어떻게 보면 일본사회 내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향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⁶⁶역사교과서 문제에 관련한 한·중 양국의 비판을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은 1982년의 사건부터 계속 있어 왔다. 그 당시의 松野幸泰(마츠노 유키야스) 국토청 장관이나 中川一郎(나카가와 이치로) 과학기술청 장관, 箕輪登(미노와 노보루) 郵政 대신들이 발언했다. 그리고 1986년은 당시 藤尾正行(후지오 마사유키) 문부대신이 한·중 양국의 비판에 대해 역 비판을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 파면되었다(藤尾亡言). 2001년에는 민주당이나 자민당의 국회 의원이 그렇게 주장한 바 있다⁶⁶. 전술한 ‘신진 의원의 회’에 소속하는 高市早苗(타카이치 사나에) 의원은 “나 자신은, 타국의 교과서에 수정요구 등을 하는 것은 분명한 내정 간섭이며, 주권 침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혀있다. (http://rep.sanae.gr.jp/nagatacho/6000_0710.htm) 또한 ‘만드는 모임’과 교과서 문제로 연계하고 있는 ‘일본 정책 연구 센터 (日本政策研究センター)’⁶⁶ 등 우파 단체는 한·중 양국의 비판과 수정요구를 “내정 간섭이며, 결코 수용 못한다”고 주장했다.

IV. 분석 결과

IV-1. 연구문제① 1986년 제1차 역사교과서 문제에서 일본 신문들의 보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1980년대에 들어와서 한·일간에 다양한 교류가 일어났으며 1984년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한국의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 일본을 방문했다. 1986년에는 아시아 게임이 개최되었으며, 1988년에는 서울 올림픽 개최가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한국 붐이 일어나던 시기이었다⁶⁷. 이렇게 양국 간 좋은 분위기 가운데 두 번째 역사교과서 문제가 일어났다. 산케이 신문이 ‘新編日本史 외압(外壓) 검정 사건’이라고 이름 붙인 1986년의 제 2 차 역사교과서 문제의 특징은, ‘우파’가 교과서를 편집하여 검정 신청했다는 것과, 일본정부가 검정에 개입하여 기술 수정한 것이다. ‘日本を守る國民會議’(지키는 회)가 검정 신청한 고교용 역사교과서 『新編日本史』는 그 기술 내용에 역사왜곡이 있다고 하여 국내·외로부터 문제시되었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비판을 받아 검정에 개입하여, 이미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를 4번에 걸쳐 수정했다. 이것은 검정의 규정에 없는 ‘특별조치’이었다. 아사히와 마이니치 그리고 요미우리는 근린 국가에 대한 배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정부에 의한 검정개입을 시인했지만, 산케이는 강하게 비판했다.

1. 기사의 양적 분석

다음 페이지 표6은 각 신문의 1986년 역사교과서 문제 관련 기사의 양적 분석 결과이다. 각 신문의 기사 건수에 다소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취재 기사와 의견 기사의 비율 등에 있어서 아사히와 마이니치 그리고 요미우리 사이에서는 유사한 경향성을 볼 수 있다. 산케이 신문만이 의견기사의 비율이 높는데, 이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하려고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⁶⁷ 요미우리에는 “수학여행을 한국으로 떠나는 학교가 많아 졌다”는 난성 기사도 있었고 (讀賣 1986/7/17), 아사히는 ‘한국’ 또는 ‘日韓’이란 말을 제목에 포함하는 기사 건수는 600건을 넘는 상황이었다.

<표6> 1986년도 기사의 양적분석

1986	아사히	산케이	마이니치	요미우리
	85 (100.1%)	75 (100%)	64 (100%)	47 (100%)
취재기사	69 (81.2%)	41 (54.7%)	54 (85.9%)	39 (83%)
(국내)	(37)	(31)	(23)	(27)
(특파원)	(17)	(7)	(13)	(5)
(통신사)	(15)	(3)	(18)	(7)
의견기사	10 (11.8%)	18 (24.0%)	7 (9.4%)	5 (10.6%)
(사설)	(2)	(6)	(2)	(1)
(해설)	(5)	(1)	(3)	(4)
(기획/연재)	(3)	(11)	(2)	(0)
기고	1 (1.2%)	7 (9.3%)	0	0
독자투고	5 (5.9%)	9 (12.0%)	3 (4.7%)	3 (6.4%)
인터뷰	0	0	0	0
기타	0	0	0	0
한국관련 기사	18	6	17	8
중국	11	7	14	4
중/한	2	2	0	3

<표7> 1986년도 취재기사의 소스 유형

1986	아사히	산케이	마이니치	요미우리
국내 취재기사	37	31	23	27
소스 건수	38 (100%)	32 (100.1%)	23 (99.9%)	27 (99.9%)
정부·공공기관	15 (39.5%)	13 (40.6%)	13 (56.5%)	10 (37.0%)
정당·정치가	4 (10.5%)	0	0	0
사법·경찰	0	0	0	0
언론기관·출판	0	1 (3.1%)	1 (4.3%)	0
민간·학술단체	2 (5.3%)	2 (6.3%)	1 (4.3%)	1 (3.7%)
사회단체	3 (7.9%)	3 (9.4%)	3 (13.1%)	2 (7.4%)
기타	1 (2.6%)	3 (9.4%)	1 (4.3%)	2 (7.4%)
지키는 회	13 (34.2%)	10 (31.3%)	4 (17.4%)	12 (44.4%)

아사히 신문은 기사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다채로운 뉴스 소스로 ‘지키는 회’ 교과서에 대한 비판 기사를 게재했다. 아사히가 ‘지키는 회’ 교과서를 비판하는 데에 스스로 한 것은 일본 교직원 조합(日教組)이나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 일본 공산당과 일본 사회당 등의 야당이며, 이들은 소위 진보적(좌파) 입장에서 교과서문제와 관계해 온 단체들이다. 이것에 대해 산케이가 지면에 등장시킨 소스는 교과서의 좌경화(편향)을 우려하는 보수파 지식인, 교과서 정상화를 지향하는 ‘신 일본 협의회’ 등 보수적 교육 단체들이었다. 이들 개인·단체는 ‘지키는 회’ 교과서를 옹호하고 문부성의 검정개입을 비판하고 외무성의 압력을 비난했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아사히와 산케이의 검정제도와 교과서 행정에 대한 인식과 입장의 차이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는 모든 신문에서 ‘지키는 회’가 소스가 된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문부성과 ‘지키는 회’ 사이에서 일어나던 기술수정 작업이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관련 정보는 거의 다 ‘지키는 회’에서 제공 되었기 때문이다.

마이니치 신문은 아사히·산케이에 이어 기사 건수가 많았다. 특히 특과원과 통신사 기사 건수가 국내 취재 기사보다 많았으며 한·중 양국의 반응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⁶⁸. 마이니치의 경우 해설 기사의 건수는 평균적이지만 검정제도에 대해서는 가장 비판적이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스트레이트 기사 위주로 대응했는데, 그 배경에는 1982년의 ‘오보 사건’의 영향이 있었을지도 모른다⁶⁹.

산케이 신문은 의견 기사의 비율이 지극히 높게 나타나서, 이번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을 알 수 있다. 산케이가 게재한 18건의 의견 기사와 기고·독자 투고의 반수는 정부와 외무성의 검정 개입을 비판하는 기사이었다. 특히 ‘외압 검정’이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10건)를 연재하여, 문부성의 검정에 대한 정부와 외무성의 압력을 비판

⁶⁸ 마이니치는 뜻밖에 한국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渡邊(와타나베, 1990)의 분석결과가 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신문이 아사히 신문이며 그 다음에 마이니치 신문이다. 가장 호의적 신문이 산케이 신문이다.

⁶⁹ 1982년의 역사교과서 문제는 산케이 신문이 ‘침략·진출 오보 사건’이라고 이름 붙은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 사건은 검정과정에서 침략 기술을 진출로 수정했다는 오보가 단서가 된 사건이었다. 산케이 신문은 1982년 9월에 오보에 대한 사죄 기사를 크게 게재하였고, 그 후 산케이는 검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검정 관련 보도를 하는 것을 문제시하기 시작했다. 특히 검정 중인 책의 내용을 폭로하는 것으로 중국이나 한국의 ‘외압’을 유도하는 것을 심하게 비판한다.

했다. 그 배경에는 역시 1982년의 사건이 연관되어 있는데, 산케이는 제1차 역사교과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도 문부성에 압력을 가한 외무성을 심하게 비판했었다. 산케이는 특파원과 통신사 기사의 비율도 그다지 높지 않아, 한·중 양국의 교과서 비판보다 정부와 외무성의 검정개입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산케이에 있어서 역사교과서 문제란 좌파 미디어의 ‘폭로주의’ 보도가 초래한 사건이며, 일본정부의 치졸한 외교정책이 초래한 사건이었다.

요미우리 신문은 가장 기사 건수가 적고, 스트레이트 기사에 많이 의존했다. 요미우리는 ‘지키는 회’ 교과서를 일찍 기사화 했는데(3/19), 처음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문부성과 ‘지키는 회’ 사이의 기술 수정이 일어나면서부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때문에 ‘지키는 회’가 스스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다.

2. 기사의 프레임 분석

2-1. 각 신문의 프레임 분포

아래 표8⁷⁰은 1986년의 각 신문의 프레임 분포이다. 아사히와 마이니치 그리고 산케이와 요미우리 사이에 검정과 교과서 행정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어서 각기 기조(基調)가 된 프레임이 다르다. 아사히와 마이니치가 기조로 하는 자의적 검정 프레임(A)은 교육에 대한 압력이 구체적으로 검정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본다. 이 프레임은 문부성의

⁷⁰ <표8> 1986년도 프레임 분석 결과

1986	아사히 86 (100%)	산케이 86 (100%)	마이니치 65 (100%)	요미우리 47 (100%)
A.자의적 검정 프레임	86 (100%)	0	64 (98.5%)	2 (4.3%)
B.위상 재정립 프레임	0	0	0	0
C.사회적 이벤트 프레임	0	0	0	0
D.자율성 회복 프레임	0	14 (16.3%)	0	34 (72.3%)
E.외교의 희생물 프레임	0	43 (50.0%)	1 (1.5%)	5 (10.6%)
F.외압 유도 프레임	0	10 (11.6%)	0	0
G.검정의 이해 요구 프레임	0	3 (3.5%)	0	2 (4.3%)
H.내정간섭 프레임	0	16 (18.6%)	0	4 (8.5%)

검정 기준이 사회적 또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문제시하여, 이러한 변화를 ‘검정의 자의적 운용’이라고 해서 문부성과 일본정부를 비판해 왔다. 말하자면 자의적 검정 프레임은 검정제도나 교육 행정 등을 전반적으로 비판하는 좌파의 포괄적인 프레임이다. 이것과 대조적으로 산케이 신문과 요미우리 신문이 기조로 하는 자율성 회복 프레임(D)은 검정제도와 역사 기술의 자율성 회복을 주장하는 우파의 포괄적인 프레임이다. 이 프레임은 검정제도는 좌파에 의해 약체화 되어 있다고 보고, 그것에 기인하는 교과서의 ‘편향(좌경화)’을 우려한다.

산케이와 요미우리에서 나타난 외교의 희생물 프레임(E)은 일본정부의 외교를 중시하는 정책이 검정에 대한 외국의 간섭을 초래하여, 그 결과 일본의 역사교과서가 왜곡되었다고 보는 프레임이다. 이번 ‘지키는 회’ 사건에서는 특히 외무성의 간섭에 대해 나타났다. 또 외압(外壓) 유도 프레임(F)이란 일본의 ‘좌파’ 미디어가 자기 입장을 강화하려고 외국의 비판을 유도하기 위해 선정적인 보도를 하다가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산케이가 1982년의 ‘오보 사건’을 자주 언급했는데 거기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검정의 이해 요구 프레임(G)은 한·중 양국은 국정교과서 체도를 채용하기 때문에 일본의 검정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이것이 원인이 되어 갈등을 일으킨다고 간주하는 것이며, 중국의 비판에 대해 이 프레임이 나타났다. 내정간섭 프레임(H)은 일본의 검정제도 혹은 교과서 행정에 대한 외국의 비판을 내정간섭이자, 주권의 침해로 간주하는 것인데, 이번 사건에서는 산케이 신문에서 많이 보게 되었다.

2-2. 프레임의 추이

1986년에는 ‘지키는 회’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후 뚜렷하게 신문의 프레임 변화를 가져온 두 가지 이슈가 있었다. 그것은 검정 개입과 기술 수정을 당시의 나카소네 수상이 직접 지시했다는 것과(6/19), 또 하나는 수정 결과에 대한 중국과 한국의 반응이다(7/8). 이 장에서는 1986년의 ‘지키는 회’ 사건 전체를 이들 두 가지 이슈를 기점으로 해서 3기에 나누어, 각 신문의 프레임의 추이를 보기로 한다 (1986년의 각 신문의 프레임 추이는 p.109에 있는 그림을 참조).

① 5월 27일부터 6월18일까지 (제1기).

‘지키는 회’ 교과서는 문부성의 ‘수정 의견’과 ‘개선 의견’을 따라 기술 수정을 실시한 후, 수정 결과에 대한 검정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5월 27일 합격했다. 제1기 분석기간은 아직 ‘역사교과서 문제’가 되지 않은 시기이며, 4가지 신문은 각각의 검정제도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지키는 회’ 교과서의 검정 합격에 대해 다양하게 반응을 보였다.

<표9> “복고조 일본사” 합격 관련 기사의 제목과 프레임

1986/5/28	관련 기사 제목
아사히	A ‘復古調日本史’ 합격으로, 이례의 격론 3시간 반
	A ▲ [기고] 노골적인 편향 검정, 국정교과서 같아
	A ▲ ‘교육 바꿔 싶다’ 표명 日本を守國民會議
	A [사설] 왜 지금 이러한 교과서를(5/30)
산케이	D 改憲派가 독자적인 교과서, 高校日本史 수정 가하고 檢定審에서 합격
	D [사설] 뒤풀이하지 말자 교과서 소란의 愚(6/14)
마이니치	A 皇室 기록 많은 ‘高校日本史’ 800개소 수정하고 인정
	A [사설] 복고조 교과서가 낳은 문제(6/6)
요미우리	D 改憲派 日本史 패스 -教育勅語, 신화 등 다루며-
	D 波紋을 일으킨 역사교과서 -표현의 자유 감안하며, 검정 역할 재고-

아사히는 기사 건수가 가장 많았고, 이미 ‘지키는 회’ 교과서의 검정 합격을 쟁점화할 생각인 것을 알 수 있다. 관련 기사 모두 자의적 검정 프레임(A)이 나타났으며, ‘지키는 회’가 만든 ‘복고조’ 교과서의 검정 통과를 “자의적인 검정의 운용이 가져온 결과”로 간주한 것을 알 수 있다. 5월 28일의 기사는 “복고조 일본사” 라고 하는 센세이셔널한 제목에 의해서 ‘지키는 회’ 교과서의 전향 중심의 역사 기술이나 침략전쟁의 가해성 은폐 등을 어필하려고 했다. 5월 30일에 사설을 게재했는데, 그 기사에서도 ‘지키는 회’ 교과서의 ‘복고조’ 역사관을 문제시했다. 이후 아사히는 이 기간 동안 한·중 양국을 중심으로 하여 교과서와 검정제도에 대한 비판을 주로 전개해 갔다. 그러나 사설이나 해설 등에 검정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는 없었다.

마이니치 신문 역시 자의적 검정 프레임(A)을 기조로 하고 있다. ‘지키는 회’ 교과서에 대해서 “황실 기록 많은 고교 일본사”란 제목을 붙여서 이 책의 특이성에 주목하게

했다. 또 “800개소 수정”이라고 하여 교육용 도서로서의 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어필했다. 마이니치는 6월 6일이 되어서 사설을 게재하여, “이 교과서의 자국중심주의 기조는 바로 우리 나라 교육이 극복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말로 비판했다. 그리고 문부성이 검정 합격시켰다는 것으로 책임을 요구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러한 논조는 같은 자의적 검정 프레임을 기조로 하는 아사히보다 한결음 나아가서 일본사회의 역사인식을 문제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⁷¹.

산케이 신문은 자율성 회복 프레임을 기조로 하고, ‘지키는 회’ 교과서가 검정 통과한 것을 이 프레임의 특징인 “다양한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검정제도” 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번 검정 결과를 평가했다. 또 이 교과서의 ‘기술의 독자성’을 평가하여, 부제목을 “수정 가해 검정심(檢定審)에서 합격”이라고 하여 수정했기 때문에 교과서에는 문제 없다는 인상을 주는 기사가 되어 있다. 제1기 산케이에 이따금 나타난 내정간섭 프레임(H)은 모두 다 중국의 문부성 비판에 관한 기사이었다. 6월 14일의 사설에서는 “복고조”란 선정적인 제목을 붙여서 보도한 아사히에 대해 ‘외압유도’라고 비판하고, 또 아직 일본 국민도 모르는 교과서 내용에 대해 외국이 수정요구 한다는 것을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했다.

요미우리 신문도 자율성 회복 프레임(D)을 기조로 한다. ‘지키는 회’ 교과서에 대해서는 “개헌파(改憲派) 일본사 패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교과서의 ‘복고조’를 주목하면서 그러나 ‘패스’라고 하는 일상 회화적인 표현은 오히려 호감과 흥미를 가지고 있던 것을 참작할 수 있다. 다음날의 해설 기사에서는 ‘지키는 회’ 교과서를 합격시킨 검정에 대한 의문이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이것도 ‘검정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고 한 막연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요미우리는 검정제도의 유지를 전제로 제도의 개선을 주장하는 입장이며, ‘지키는 회’ 교과서 그 자체에 대해서는 명확한 평가나 비판을 하지 않았다. 검정의 이해 요구 프레임(G)은 한·중 양국에 검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는 일본정부의 정책 보도 기사이었다. 외교의 희생물 프레임(E)은 복고조

⁷¹ 마이니치는 6월 6일의 사설에서 “...이 교과서의 ‘자국중심주의’의 기조는 바로 우리 나라 교육이 극복해야 하는 대상인 것이다”라고 하거나, “현재의 일본은 전쟁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했다” 등의 견해를 보였다.

(復古調) 교과서에 추가 수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도한 기사에서 나타났다. 외교관계를 고려해서 수정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기사인데, 전혀 없는 지극히 특수한 수정 작업인 것을 어필했다. 또한 6월 6일에 자의적 검정 프레임(A)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지키는 회’ 교과서의 역사관을 문제시한 독자 투고이었다.

② 6월19일부터 7월7일까지 (제2기)⁷².

‘지키는 회’ 교과서는 검정 합격한 직후 5월 30일에 37개소에 이르는 최초의 수정을 실시하고, 6월 10일에는 2번째 수정을 실시했다. 이는 검정 규칙에 없는 수정 작업이었으며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6월 17일에 요미우리가 이 사실을 보도한 후, 18일에는 나머지 3가지 신문 모두가 기사화했다. 그리고 나서 中曽根(나카소네) 수상이 스스로 지시한 것을 밝혔다. 나카소네 수상은 1982년에 검정 조항에 추가된 ‘近隣諸國條項’(근린 제국 조항)에 근거 하여, 외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수정을 지시한 것을 기사 회견에서 발표했다. 검정제도는 전전의 국가 중심적인 교육에 대한 반성을 기반으로 만든 것이며, 정부나 문부성이 검정과정 또는 수정결과에 대해 자의적으로 개입 못하도록 규제가 있다. 그러나 나카소네 수상의 지시는 이러한 규칙을 무시한 바로 ‘검정 개입’에 해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수정을 수상이 직접 지시했다는 것이 큰 이슈가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뚜렷하게 프레임의 변화가 나타난 것은 산케이 신문이었다.

산케이는 그때까지 기초가 된 자율성 회복 프레임(D)에서 외교의 희생물 프레임(E)으로 기초 프레임자체가 변화했다. 그것은 자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검정제도에 대해

⁷² <표10> 기술 수정은 나카소네 수상의 지시.

1986/6/19 프레임		관련 기사 제목
아사히	A	수상 復古調 교과서 수정, 스스로 지시 (6/19)
	E	‘國民會議’역사교과서 재수정은 首相 지시 異例의 관여
산케이	F, H	[사실] 외압에 굴한 교과서검정, 국가로서의 주체성 잃었음
	E, F, H	[사실] 교과서검정의 근간 손상했다. ‘외압수정’과 그 은폐(7/1)
마이니치	A	國民會議의 역사교과서 재수정은 수상 지시, 근린국가의 우호배려
요미우리	E	“中韓 반발에 배려” 日本史 교과서로 首相

나카소네 수상이 직접 관여하여, 외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의 역사교과서의 기술 수정을 지시한 것을 지극히 심각하게 받아 들인 것이었다. 게다가 6월 30일에 문부성이 그 동안의 수정작업을 은폐하려고 하던 것이 노출되어, 산케이는 이후 문부성과 외무성, 그리고 일본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게 되었다.

외압유도 프레임(F)은 ‘지키는 회’ 교과서를 “복고조”라고 하는 제목으로 크게 보도한 것이 외국의 수정요구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는 기사에서 나타났다. 또 내정간섭 프레임(H)은 일본정부가 외국의 수정요구를 수용한 것을 비판하는 문맥에서 나타났다. 특히 사설에서는 “외압에 굴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외국의 비판을 수용한 것에 대한 산케이의 반대 입장을 두드러지게 했다.

아사히 신문과 마이니치 신문은 수정이 수상에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에 당황했다. 자의적 검정 프레임은 문부성에 의한 검정이 때마다의 사회적, 정치적 요구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문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보수파의 교과서에 대해 행사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지키는 회’와 ‘문부성’이란 말하자면 보수파끼리 교과서의 역사 기술을 둘러싸고 싸우는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사히나 마이니치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비판할 것인지, 곤란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사히는 ‘지키는 회’ 교과서가 정식으로 검정 합격한 7월 8일까지 스트레이트 기사 중심으로 보도하게 되었다. 비판 기사 등은 ‘지키는 회’에 비판적인 소스에 의존하고, 아사히 입장으로 ‘지키는 회’와 그들의 교과서를 비판하는 일이 없었다. 마이니치 역시 스트레이트 기사 중심의 대응이 되었다.

요미우리 신문도 아사히와 마이니치 등과 같이 기술 수정은 한·중 양국에 배려한 것이 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해당 기사에서 외교의 희생물 프레임(E)이 나타났다. 이것은 기술 수정이 한·중 양국의 반발에 배려했다는 사실이 알게 된 것으로, 그 후 요미우리는 한·중 양국에 대해 약간 태도가 경화했다. 요미우리는 지2기 분석기간을 통해서 기조 프레임인 자율성 회복 프레임에 변함이 없었으며, 보도의 중심이 된 것은 ‘지키는 회’와 문부성 사이에서 일어나던 ‘기술 수정 극(劇)’이다.

③ 7월8일부터 사건이 수습된 9월 초까지 (제3기)⁷³.

‘지키는 회’ 교과서는 7월 4일에 정식으로 검정 합격했다. 그리고 일본정부는 7월 8일에 한·중 양국에 대해 수정내용을 설명했는데, 요미우리는 그 기사에서 내정간섭 프레임(H)이 나타났다⁷⁴. 또 요미우리는 7월 10일에 게재한 사설 “왜 반복되는 교과서 검정 소란”에서 이번 사건은 문부성과 ‘지키는 회’ 쌍방의 근린 국가에의 배려를 추가한 ‘신 기준’에 대한 인식 부족에 기인한 우발적인 갈등이다라고 하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요미우리는 이번 사건을 일본사회의 역사인식이나 검정체도가 내포하는 문제성이 초래한 사건으로 보는 것보다 절차상 일어난 일과성 문제로 보았다. 그러나 정부의 한·중 양국에 대한 ‘외교적 배려’, 즉 양국의 비판이나 수정요구 등을 내정간섭으로 간주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산케이 신문은 6월 19일의 사건 이후 외교의 희생물 프레임(E)이 계속 나타나 있으며, 이번 사건을 일본정부의 외교를 증시한 정책이 초래한 사건으로 정의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7월 17일 이후 10번에 걸쳐 연재된 기획기사 “외압 검정”은 검정에 개입한

⁷³ <표11> 1986년 검정 합격 관련 기사

1986/7/8	관련 기사 제목
아사히	A ‘復古調교과서’합격 외교배려로 대폭 수정
	A [기획] 전례 없는 검정 경위 ‘復古調교과서’
	A ▲ 중·한 양국에 설명
	A 교과서문제 ‘전례 없는 초지’ 國民會議 정부 개입을 비판
산케이	E 新編日本史 재수정 문제 특별초지이지만 文相 권한
	E ▲ 文部省은 定見을 가지라
	E “規則은 規則, 國益은 國益” 文相, 교과서로 외교배려 우선 시사
마이니치	A, E [해설] “강제적 수정은 문제” 교과서 검정제도
	A 중국이 수정을 평가 ‘지키는 회’ 역사교과서 외무차관이 설명
	A ▲ ‘지키는 회’역사교과서 來春부터 사용 가능으로
요미우리	D 수정 교과서가 합격 文部省 확인 “추가 초지, 전례로 하지 않겠다”
	H ▲ 한국에 설명 駐韓日本大使
	E 교과서 수정은 종례 절차로 文相이 방침
	D [사설] 왜 반복되는가, 교과서 소란(7/10)

⁷⁴ 요미우리는 “한국쪽에 설명, 주한 일본대사” 기사에서, “御巫(미카나기)대사는 ‘우리 나라의 교과서는 어디까지나 우리 나라가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문제이다’라고 강조하고, 이번 검정내용이 1982년의 관방장관 담화에 합치한 것을 중심으로 개정 사례를 제시 하면서 설명했다.” (讀賣 1986/7/8).

정부와 외무성을 비판하는 기사이며, 문부성은 외압을 박차기 위해 충분한 정견(定見)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산케이는 1982년의 ‘오보 사건’에서 외교를 중시한 정치적 결착을 붙인 사실을 자주 예로 들어서, 이번 검정에 개입한 외무성과 정부를 비난했다. 또한 산케이는 13일에 사설 “관방 장관 담화를 재검토하라”⁷⁵를 게재하여, 외국의 검정 간섭을 용인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1982년의 ‘관방 장관 담화’, 그리고 그 후에 검정 조항에 추가된 ‘근린 제국 조항’의 재고(再考)를 주장했다.

아사히 신문은 모두 자의적 검정 프레임(A)이 나타나고 있어서, 대부분이 정부에 의한 검정 개입을 문제시한 기사이었다. 아사히는 검정의 자의적 운용을 문제시해 왔기 때문에, 수정의 대상이 우과의 교과서이어도 검정제도의 타당성을 묻는다고 하는 자세를 나타낸 것이다. 아사히는 7월 10일에 사설 “교과서 제도의 기본을 재검토 하자”를 게재하여, 이번 사건을 검정제도의 자의적인 운용이 가져온 사건으로 결론 지었다. 그리고 교과서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주장했다지만, 그것은 종래와 같이 ‘정치적 대립을 교육 현장에 가져오지 말라’ 라고 하는 주장의 연장선상이었다. 아사히는 마이니치 신문처럼 검정제도가 지니는 강제성이 교과서 문제를 외교 문제화 시키고 있다고 하는 인식을 보이지 않았다.

마이니치 신문은 자의적 검정 프레임(A)에서 변화하지 않았는데, 해설 기사 “강제적 수정은 문제”를 게재하여, 이 기사에서 처음 외교의 희생물 프레임(E)이 나타났다. 이 해설기사는 사회부 기자에 의한 검정제도를 비판한 기사인데, 외국의 의향을 의식해서 강제적인 수정을 실시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또 12일의 사설 “재검토가 필요한 교과서 검정”에서 이번 검정 작업에 언급하여, 이 사건으로 검정이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문부성의 주장은 정당성을 잃었다고 했다. 이와 같이 아사히와 마이니치는 자의적 검정 프레임을 기조로 하면서도 검정제도나 ‘지키는 회’ 교과서에 대한 비판 관점에 차이를 보였다.

3. 개별 신문에 관한 논의

⁷⁵ 검정 개입에 관한 기사인데, 외국의 개입의 근거가 되어 있는 1982년의 관방장관 담화를 다시 생각하자는 내용이다. 제목에 키워드가 없었기 때문에 샘플링 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처음에 보수파가 편집하고 검정 신청한 교과서에 대해 문부성이 압력을 가한 사건이 되었다. 그러나 국내·외에서 문제시된 기술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방법이란 그때까지 아사히와 마이니치가 문제시하는 “검정의 자의적인 운용”이란 방법이였다. 자의적 검정 프레임은 교육을 들러 싸인 일본의 이데올로기 대립 안에서, 좌파에 의해서 양성된 담론의 집합이다. 1955년의 일본 민주당에 의한 ‘제1차 교과서 공격’이나 1970년 말의 자유민주당에 의한 ‘제2차 교과서 공격’ 등을 거치면서, 이 프레임은 항상 보수파로부터의 압력에 대해서 기능 하도록 조정되어 왔다. 이 프레임은 검정 기준이 그 때마다의 사회적·정치적 요구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문제시하여, 이러한 변화를 “검정의 자의적 운용”으로 비난한 것이다. 그러나 이 프레임은 ‘우파’를 ‘좌파’로 옮겨 놓는 것만으로, 우파(보수파)에게도 설득력이 있는 ‘검정의 자의적 운용’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했다.

① 아사히 신문

‘지키는 회’ 등의 보수파 집단은 검정제도는 좌파에 의해서 약체화 되어 있다고 본다. 특히 1982년에 ‘근린 제국 조항’이 검정 조항에 추가된 후에는, 문부성은 교과서의 침략 기술을 수정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키는 회’는 ‘침략’ 기술이 있는 ‘편향 된’ 교과서의 적발을 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담은 역사교과서의 출판을 결정한 것이었다 (무라카미 요시오, 1986, p.80). 그 결과 이번 검정에서는 우파의 교과서에 대해 문부성이 압력을 가하게 되어, 검정 후 수정이라는 규칙에 없는 작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산케이 신문이 이것을 “검정 규칙에 反하는, 쓰게 하는 검정의 실태를 부각시켰다 (산케이 1986/7/3)” 라고, 종래 좌파가 하던 것과 똑같은 말로 문부성을 비난하고, 우파(이번에는 지키는 회)가 검정 신청한 교과서를 옹호했다. 즉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정의 자의적 운용’이나 ‘검정에 의한 역사 왜곡’이란 담론이 좌파의 독점물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이다.

② 마이니치 신문

마이니치 신문은 아사히 신문과 같이 자의적 검정 프레임을 기조로 하고 있지만, 검정제도에 대해서는 보다 비판적이며, 아사히보다 더 강한 표현으로 검정 비판을 했다. 여기서는 아사히와의 비교로 마이니치의 프레임의 특성을 논의한다.

마이니치 신문의 ‘지키는 회’ 교과서에 대한 비판은 교과서로서의 질과 ‘전쟁의 객관적 기술’이라고 하는 가해성 은폐에 대한 것이었다. 마이니치 신문은 현재의 일본은 전쟁에의 반성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며, ‘지키는 회’ 교과서의 자국 중심적 역사 기술의 기조는 일본의 교육이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라고 하는 주장이었다 (6/6). 또, 검정은 국가가 실시하는 것인 한, 이러한 교과서를 합격 시킨 것으로 문부성의 책임이 추궁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사히 신문 역시 ‘지키는 회’ 교과서의 천황 중심적인 기술이나 전쟁의 가해성 은폐 등을 문제시했다. 그러나 아사히는 이번 문제의 뿌리는 “오랫동안 걸쳐 만들어진 오늘 날의 교과서 제도 그 자체에” 있다고 하여,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생긴 검정제도” (朝日7/10)의 자의성을 강조한 점이 마이니치와는 다르다. 이러한 일로부터, 아사히의 자의적 검정 프레임은 교육 현장에 있어서의 이데올로기 대립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마이니치의 비판의 관점은 한국이나 중국의 일본 비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마이니치의 기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외교의 희생물 프레임(E)이 나타났다. 이것은 외국의 압력에 의해서 기술 수정한 것을 문제시하는 기사이지만, 사회부 기자의 해설 기사로 이와 같이 기조가 되는 프레임과 상반되는 프레임이 돌출하기도 할 것이다.

③ 산케이 신문

산케이 신문이 기조로 하는 자율성 회복 프레임(D)은 검정제도가 좌파의 압력에 의해서 약체화 해 왔다고 본다. 전후의 일본사 교과서의 상당수는 전승국(戰勝國)의 역사관이나 마르크스 사관에 의거하여 국가를 죄악시 하고, 일본의 전통이나 문화에 부정적인 ‘좌익 편향’ 교과서가 되었다고 보았다. 검정제도는 이러한 편향·좌경화 한 교과서를 바로잡기 위한 수단이며, 공정하고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산케이 신문은 이번 사건을 1982년의 사건과 같이 정부의 외교를 우선한 정책에 의해서

검정제도가 손상된 사건으로 간주하고 어필했다.

이번 ‘지키는 회’ 사건에 있어서 산케이의 특징은 비판의 대상이 한·중 양국이 아니고 문부성과 외무성 이었다는 점이다. 산케이는 정부 개입에 의한 기술수정을 일관해서 ‘주체성 손상’으로 비난 했는데, 산케이 입장에서는 한국이나 중국으로부터의 수정 요구의 수락은 자국의 역사에 외국이 손을 뻗치는 것이며, 국가가 체면을 잃게 되는 일이었다 (産經7/5). 교과서 문제는 어디까지나 국내 문제로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한·중 양국의 비판에 대해서는 ‘내정간섭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産經6/14) 라든지, ‘내정간섭이라고 해야 하는 것’(産經6/19) 등, 끊임없이 한·중 양국과의 대결 자세를 보였다. 그리고 산케이는 ‘지키는 회’ 교과서를 의견기사 등에서 적극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지만, 보수적 지식인의 기고를 많이 게재했으며 그들의 기사는 “일본의 역사와 문화의 전통을 소중히 취급하는 교과서”와 같은 말로 ‘지키는 회’ 교과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④요미우리 신문

요미우리 신문은 자율성 회복 프레임을 기조로 하여, 검정제도의 유지를 전제로 하고 제도의 개선을 주창하는 입장이다. 동시에 요미우리는 과도한 검정은 국정(國定) 교과서를 낳게 한다는 주의를 환기하여, 억제된 검정을 주장했다. 중국이나 한국의 비판에 대해서는 당초는 일정한 이해를 보였는데, 후에 ‘교과서 문제는 일본이 주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 라고 하고 태도를 약간 경화 시켰다. 그리고 ‘지키는 회’ 교과서의 기술 수정은 외교 문제가 될 것을 피하려고 한 일본정부와 외무성의 의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자의적 검정 프레임(A)이 나타났지만, 이 기사는 2건 모두 독자 투고이며 ‘지키는 회’에 대한 비판이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번 ‘지키는 회’ 사건을 초보적인 실수에 의한 갈등으로서 보려고 한 면이 있었다. 그것은 신문에 일관되게 자율성 회복 프레임이 나타난 것과 사설에서 “왜 반복되는 교과서 검정 소란”(7/10)으로 나타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책을 검정신청한 ‘지키는 회’ 측과 문부성의 쌍방이 ‘신 기준’에 대한 인식이 미흡했기 때문에

1982년과 같은 충돌이 일어나 버렸다고 인식한 것이다. ‘신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1982년에 검정 조항에 추가된 ‘근린 제국 조항’을 말하며, 근·현대 역사 기술에 관해서는 근린 국가들에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항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으니 기술에 문제를 남긴 채로 검정을 통과시켜 버렸다고 하는 설명이었다. ‘소란’이라고 하는 사설 제목은 요미우리가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정 결과를 한·중 양국의 미디어가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태도를 강화시켰기 때문에 내정간섭 프레임이 나타났다. 그리고 요미우리의 ‘지키는 회’ 교과서에 대한 태도는 번거롭게 돌려 비판한⁷⁶ 것에 나타나 있듯이, 적극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일정 인정한 것이 되어 있다.

4. 소결

이번 ‘지키는 회’ 사건의 특징은 처음으로 우파가 교과서를 편집하여 검정 신청을 실시한 점에 있다. 그래서 검정은 충분히 기능하지 않았고⁷⁷, 기술에 문제를 남긴 채로 검정 합격시켰다. 정부는 국내외의 비판으로부터 검정에 개입하여, 합격 후의 재 수정이라고 하는 규정 외의 수정 작업을 실시했다.

아사히 신문은 일관해서 자의적 검정 프레임(A)이 나타나서, ‘지키는 회’ 사건을 교육에 있어서의 이데올로기 대립이라고 하는 범주에서 기사화했다. 아사히는 ‘지키는 회’ 교과서를 ‘복고조’나 ‘황국 사관’과 같이 형용하고,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역사관을 비판했다. 마이니치 신문 역시 일관해서 자의적 검정 프레임(A)이 나타났으며, 교육에 있어서의 이데올로기 대립이라고 하는 도식 안에서 기사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⁷⁶ 요미우리는 사설 “왜 반복하는 교과서 검정 소란”(7/10)에서 ‘지키는 회’ 교과서를 언급했다. ‘지키는 회’ 교과서는 “이른바 좌익 편향 교과서를 비판하고, 그것에 대항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며, 그들이 “공정한 교과서를 목표로 했다고 하지만, 비판과 공격 당한 측이 보면 반대의 편향이 눈에 띠는 복고조 교과서가 된다” 라고 했다. 즉 요미우리의 견해로는 ‘지키는 회’ 교과서는 상대적으로 편향성을 지니는 것이 되어 있다.

⁷⁷ 말하자면 “편집자와 검정자가 역사왜곡의 공범이 된”(朝日2001/4/26)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아사히와 마이니치가 기조로 하는 자의적 검정 프레임(A)은 그러한 이데올로기 대립 안에서 조성된 담론이기 때문에 이번의 사건처럼 문부성이 압력을 가한 대상이 우파가 되었을 때, 자의적 검정 프레임의 비판 담론이 설득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즉 이 프레임은 ‘우파’를 ‘좌파’로 옮겨놓는 것만으로 우파 (보수파) 에게도 설득력이 있는 ‘검정의 자의적 운용’을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 대립에 입각한 자의적 검정 프레임의 한계는 2001년에 ‘만드는 모임’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까지 검정체도를 비판하던 진보파가 ‘만드는 모임’ 교과서의 기술수정을 위해서 검정 강화를 정부에 요청한다고 하는 아이러니컬 한 현상으로서 나타나게 된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아사히와 마이니치가 프레임을 크게 변화 시키지 않았던 이유 중에는 전술한 바 1982년의 사건의 영향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산케이 신문은 교과서 문제는 국내 문제이며, 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국가로서의 주체성을 손상한다고 하는 입장이다. 산케이는 당초 자율성 회복 프레임(D)이 나타나고 있었지만, 수정 지시가 수상에 의한 것, 그리고 문부성이 수정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실이 알게 되었을 때부터 외교의 희생물 프레임(E)으로 기조가 변화했다. 산케이는 1982년의 제1차 역사교과서 문제에서 외무성이 문부성에 압력을 가한 것을 비판했었다. 이번에도 외무성이 교과서 수정 文案을 문부성에 제시하는 등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산케이는 이것을 ‘외압을 배경으로 한 내압’이라고 하여 격렬하게 비난했다. 그리고 산케이는 이번 사건에서 “검정 규칙에 反한, 쓰게 하는 검정의 실태가 부각되었다”고 하는 종래 좌파가 문부성을 비판한 담론을 가지고 문부성을 비판했기 때문에 자의적 검정 프레임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었다.

요미우리 신문도 자율성 회복 프레임(D)을 기조로 하고 있는데, ‘지키는 회’ 사건에서는 분석 기간을 통해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요미우리는 ‘지키는 회’ 교과서를 적극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우파가 검정 신청한 교과서로서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새로운 검정 기준에 대한 인식 부족에 기인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지키는 회’ 교과서의 수정 결과에 대해 한국측이

불만을 표명했을 때와 일본정부가 한·중 양국의 교과서 비판을 내정간섭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국회 답신서를 제출했을 때에 내정간섭 프레임(H)이 나타났다. 또 기술 수정이 수상의 지시인 것이 판명되었을 때도 외교의 희생물 프레임(E)이 나타났다. 이러한 것으로부터 요미우리는 ‘지키는 회’ 교과서에의 적극적인 관심은 표명하지 않았지만, 교과서 행정은 국내 문제로 보는 입장인 것을 참작 할 수 있다.

또 4가지 신문은 각각 검정제도와 문제가 된 ‘지키는 회’ 교과서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어도, 정부의 검정 개입을 비판한다고 하는 태도는 일치했다. 이것은 2001년의 ‘만드는 모임’ 사건에서 4가지 신문 모두가 한·중 양국의 수정 요구를 거부하는 것에 연결된다.

IV-2. 연구문제 ②: 2001년 역사교과서 문제에서 일본 신문들의 보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2001년의 제3차 역사교과서 문제인 ‘만드는 모임’ 사건은 ‘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會’(만드는 모임)이 편집하고 검정 신청한 중학교용 역사교과서 『新しい歴史教科書』(새로운 역사교과서)의 기술내용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국내·외에서 비판 당한 사건이었다. 한·중 양국은 이 교과서의 자국 중심적인 기술을 역사왜곡이라고 하여, 검정 합격 전에는 검정에 의한 기술 수정을 기대하고, 합격 후에는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제시하고 수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文部科學省(문부과학성, 이하 문과성)과 일본정부는 검정에 개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정 과정에의 개입 그리고 합격 후의 수정을 거부했다. 이것에 대해 4가지 일본 신문은 모두 문과성의 이러한 태도를 지지했다. 4가지 신문은 각각 검정제도와 ‘만드는 모임’의 교과서에 대한 평가는 다르지만, 검정개입을 수반하는 기술수정은 다 기피했다.

1. 기사의 양적 분석

2001년은 1986년과 비교해서 관련기사 건수가 크게 증가했는데 그것은 ‘모임’의 교과서가 주목의 대상이 되고, 교과서 채택⁷⁸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불렀기 때문이다. 표 13에서 보듯이 스트레이트 기사와 의견 기사의 비율 등은 4가지 신문 모두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요미우리 신문만이 약간 의견 기사의 비중이 높다. 이는 요미우리 신문이 관심을 가지고 보도한 것을 보여 준다⁷⁹.

아사히 신문은 문과성(文科省)이 자민당(自民黨) 등 보수파 세력의 의향을 따라 검정 제도를 운용하다가 결과적으로 교육에 대한 국가 개입을 초래하는 것을 비판하는 입장이다. 이번의 사건 보도의 전체적인 경향은 ‘모임’ 교과서에 대한 비판이지만, ‘우파’로

⁷⁸ 채택이란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 중에서 어느 것을 사용할까 결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⁷⁹ 특히 해설기사가 33건으로 많았으며, 그 중의 13건이 한국에 관한 언급 또는 한·중 양국에 관한 언급이었다.

부터 ‘좌파’까지 폭 넓은 소스에 의해서 다면적인 보도를 실시했다. 특히 지식인에 의한 기고의 비율이 높는데, ‘모임’ 교과서에 반대하는 입장과 ‘모임’ 관계자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소개했다. 아사히의 기고 기사는 이러한 ‘모임’ 입장에서 쓴 기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모임’에 비판적인 기사이었다. 그리고 아사히는 한국의 동향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해외 특파원 기사의 70%는 한국의 현지 취재 기사이었다.

<표12> 2001년 기사 양적분석

2001	아사히	산케이	마이니치	요미우리
	324 (100%)	558 (100%)	298 (100%)	201 (100%)
스트레이트 기사	239 (75.1%)	430 (77.1%)	224 (75.2%)	154 (76.6%)
(국내)	(143)	(349)	(132)	(78)
(특파원)	(96)	(78)	(72)	(76)
(통신사)	(0)	(3)	(20)	(0)
의견기사	50 (14.2%)	89 (15.9%)	44 (14.8%)	40 (19.9%)
(사설)	(8)	(19)	(7)	(7)
(해설)	(15)	(36)	(27)	(33)
(기획)	(27)	(34)	(10)	(0)
기고	19 (5.8%)	11 (2.0%)	9 (3.0%)	5 (2.5%)
독자투고	11 (3.4%)	25 (4.5%)	9 (3.0%)	2 (1.0%)
인터뷰	5 (1.5%)	3 (0.5%)	12 (4.0%)	0
기타	0	0	0	0
한국	97 (29.9%)	93 (16.7%)	107 (35.9%)	81 (40.3%)
중국	22	37	24	26
중/한	14	14	13	14

<표13> 2001년 소스 유형

2001	아사히	산케이	마이니치	요미우리
국내 스트레이트 기사	143	349	132	78
소스 건수 (%)	157 (99.9%)	(%)	134 (99.9%)	83 (99.9%)
정부·공공기관	62 (39.5%)	140 (40.8%)	59 (44.0%)	44 (53.0%)
정당·정치가	14 (8.9%)	45 (13.1%)	14 (10.4%)	10 (12.1%)
사법·경찰	4 (2.5%)	5 (1.5%)	6 (4.5%)	4 (4.8%)
언론기관·출판	5 (3.2%)	14 (4.1%)	0 (%)	2 (2.4%)
민간·학술단체	43 (27.4%)	40 (11.7%)	22 (16.4%)	4 (4.8%)
기타	17 (10.8%)	36 (10.5%)	28 (20.9%)	9 (10.8%)
불명	0	15 (4.4%)	(%)	3 (3.6%)
만드는 모임	12 (7.6%)	48 (10.7%)	5 (3.7%)	7 (8.4%)

산케이 신문은 검정제도는 ‘밸런스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것이며,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한 엄격한 운용을 주장한다. 산케이 신문은 다른 신문에 비교해서 국내 동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스트레이트 기사에 차지하는 국내 기사의 비율은 80%에 올랐다. 그리고 그러한 기사의 소스는 정부 기관과 정치가가 과반수(53.9%)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민간 단체(11.7%), 그리고 ‘만드는 모임’(10.7%)의 순서이다. 산케이는 정권 당(즉 자민당)을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나카무라, 1999) 이번 사건에서도 정당·정치가 소스 중에서 자민당과 보수파 의원단체의 차지하는 비율이 71%가 되었다. 이들 소스가 주장하는 바는, 한·중 양국의 불합격 요청이나 기술 수정요구는 내정간섭이며, 검정과 채택은 그러한 요구에 좌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정부와 공공기관 소스에서 문과성과 외무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49.3%가 되었는데, 이것은 역사교과서 문제의 이면성, 즉 국내문제이며 동시에 외교 문제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⁸⁰. 산케이는 다른 신문과 비교해서 ‘모임’이 소스로 등장하는 비율이 높다. 스트레이트 기사에서는 ‘모임’의 활동을 소개하고, 기고 기사(6건:54.5%)나 기획 기사(12건:35.3%) 에서도 빈번히 ‘모임’의 관계자가 등장했다. 산케이는 마치 ‘모임’의 홍보지가 된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⁸¹. 그리고 한국이나 중국의 동향을 전달하는 기사는 다른 신문과 비교해서 극단적으로 적었으며, 산케이의 관심사는 ‘모임’의 동향에 있던 것 같았다.

마이니치 신문은 검정의 자의적 운용을 문제시하는 입장이며, ‘모임’ 교과서의 역사관을 비판했다. 마이니치는 아사히와 비슷한 건수의 기사를 게재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소스를 정부기관(44%)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문과성과 외무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62.7%가 되어, 이번 사건은 문과성과 외무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을 참작할 수 있다. 민간·학술 단체(16.4%)의 비율이 아사히 다음에 높았는데, 그 중의

⁸⁰ 산케이가 주시한 것은 문과성에 의한 엄격한 검정·채택 제도의 운용이며, 외무성이 한·중 양국의 비판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이었다. 외무성은 과거의 역사교과서 문제에서 문과성(당시는 문부성)에 외교정책을 우선한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다.

⁸¹ 산케이의 기고나 인터뷰 기사에는 반대입장이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하고 싶은 말만 주장한다. 이것에 대해 아사히는 인터뷰로 기사를 구성할 때 반드시 대립하는 쌍방 의견을 소개하는데, 그대신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치 않다.

77.3%는 ‘모임’ 교과서에 대한 항의 혹은 반대 표명이었다. 마이니치는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와타나베, 1990, p.255), 이번 사건에도 요미우리 다음에 한국에 대한 관심을 보였으며, 한국사회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데에 지면을 많이 할애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검정제도의 유지와 개선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이번 ‘모임’ 사건 보도의 특징은 다른 신문과 비교해서 특파원에 의한 해외 기사의 비율이 높고(스트레이트 기사의 48.6%), 국내 스트레이트 기사보다 특파원 기사 수가 많았던 것이다. 그리고 한국 관련 기사가 전체 기사의 40%를 차지하고 있어서 요미우리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한국사회의 동향을 전달했다.

요미우리는 정부와 공공기관을 소스로 한 기사가 많았고(53%), 역시 문과성과 외무성이 50%를 차지했다. 정당·정치가 소스는 산케이와 대조적으로 야당이 많았으며, 특히 ‘自民有志の會(자민 유지의 회)’ 등 보수파 국회의원 단체들이 소스가 된 기사는 없었다. 이것은 보수파 국회 의원들의 극단적인 주장을 보도하기를 기피했다고 볼 수 있는데, 요미우리의 이러한 태도는 일본에서 가장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는 오피니언 리더 입장에서 오는 것일지도 모른다. 또 요미우리는 의견 기사의 비율도 높았으며, 사실과 해설기사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하려고 했다. 이번 사건에 있어서 요미우리의 전체적인 보도 경향은 ‘모임’ 교과서의 평가나 검정제도에 대한 시비가 아니고, 한·중 양국의 검정제도에 대한 비판과 ‘모임’ 교과서에 대한 수정요구 등에 대한 반박을 일삼는 것이었다.

2. 기사의 프레임 분석

2-1. 프레임 분포의 개관

‘모임’ 사건의 각 신문의 프레임 분석 결과는 다음 페이지 표14과 같다. 1986년과 비교해서 아사히 신문과 마이니치 신문의 프레임이 조금씩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아사히와 마이니치는 우파에 의한 검정 강화와 역사 왜곡을 문제시하는 자의적 검정 프레임(A)을 기조(基調)로 하고 있지만, 상반되는 개념의 프레임을 이따금 볼 수 있다. 변화

의 정도는 마이니치가 아사히보다 크게 나타났는데, 그런데도 기초의 프레임을 변화시킬 정도가 아니었다. 이것에 대해 산케이 신문과 요미우리 신문은 자율성 회복 프레임(D)에 기초를 두고 이슈마다 다양한 프레임이 나타났으며, 이슈에 따라서는 기초 프레임이 변화할 때가 있었다. 산케이 신문과 요미우리 신문이 기초로 하는 자율성 회복 프레임(D)은 검정제도와 역사교과서 기술의 자율성 회복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번 ‘모임’ 사건에서는 산케이는 검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검정의 이해 요구 프레임(G)이, 요미우리는 외국의 비판을 일본의 내정에 대한 간섭으로 간주하는 내정간섭 프레임(H)이 현저하게 증가했다⁸².

아사히 신문은 자의적 검정 프레임(A)을 기초로 하여 위상 재정립 프레임(B)과 사회적 이벤트 프레임(C) 등이 많지 않았지만 나타났다. 또 자의적 검정 프레임과는 약간 상반되는 개념인 외압 유도 프레임(F)이나 검정의 이해 요구 프레임(G)도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 지식인의 기고 기사에서 많이 위상 재정립 프레임(B)이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한·중 양국이 비판한 ‘모임’ 교과서의 왜곡 기술을 역사 수정주의적 관점에서 비판한 것이다. 이번 사건을 검정제도나 교육행정에 근거하여 정의한 것이 아니고, 보다 광범위한 관점으로부터 역사교과서 문제를 비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모임’이 왜곡한 역사에 정당성을 부여한 방법은 “특정의 사실에 대한 실증을 기점(起点)으로 하고, 거기서부터 해당 역사 사상(事象)의 역사적 문맥 전체를 통설과는 다른 방향으로 바꾸다”는 방법이다(야스마루, 2001, p.74).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의 이데올로기 대립이라고

⁸² <표14> 2001년 프레임 분석 결과

2001 프레임	아사히 329 (99.9%)	산케이 578 (100%)	마이니치 306 (100%)	요미우리 211 (100%)
A.자의적 검정 프레임	314 (95.4%)	0	270 (88.2%)	0
B.위상 재정립 프레임	6 (1.8%)	0	5 (1.6%)	0
C.사회적 이벤트 프레임	1 (0.3%)	0	0	0
D.자율성 회복 프레임	4 (1.2%)	354 (61.4%)	8 (2.6%)	88 (41.7%)
E.외교의 희생물 프레임	0	25 (4.3%)	1 (0.3%)	3 (1.4%)
F.외압 도입 프레임	2 (0.6%)	45 (7.8%)	2 (0.7%)	9 (4.3%)
G.검정의 이해 요구 프레임	2 (0.6%)	71 (12.3 %)	17 (5.6%)	34 (16.1%)
H.내정간섭 프레임	0	83 (14.2%)	3 (1.0%)	77 (36.5%)

하는 자의적 검정 프레임의 관점에서는 비판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아사히의 기고·기획 기사에는 역사 수정주의를 비판하는 관점에서 ‘모임’ 교과서와 ‘모임’의 활동을 비판하는 기사가 적지 않아 게재되었다. 그러나 같은 관점에서 쓰여진 사설·논평 등은 거의 게재되지 않았다.

마이니치 신문도 아사히와 같이 자의적 검정 프레임을 기조로 하는데, ‘모임’ 사건에서는 아사히보다 현저하게 프레임이 다양해졌다. 특히 한·중 양국의 수정요구에 대해서 검정의 이해 요구 프레임(G)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한·중 양국의 역사왜곡 비판에는 동조하지만 검정제도의 규칙을 일탈하는 것을 용인 못한다는 태도이다. 그리고 마이니치에게도 위상 재정립 프레임(B)이 칼럼과 지식인에 의한 기고·인터뷰 기사에서 나타났다. 또한 자율성 회복 프레임(D)이나 내정간섭 프레임(H)도 나타났으니 1986년 이후의 마이니치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참작할 수 있다.

산케이 신문은 자율성 회복 프레임(D)을 기조로 하고 있으며, 검정제도는 ‘좌파’의 간섭으로 손상한 자율성을 되찾고 “밸런스가 잡힌 교과서”를 낳는 시스템으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한·중 양국의 비판과 수정요구는 검정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한·중 양국에 검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고 이러한 내정간섭에 해당하는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국가로서의 주체성을 손상하는 것이다 라고도 주장했다.

산케이는 자율성 회복 프레임을 기조로 하면서, 이슈에 의해서 내정간섭 프레임이나 검정의 이해 요구 프레임에 이행하는 경향을 때때로 볼 수 있었다. 산케이는 전체 분석 기간을 통해 ‘채택’⁸³ 관련 기사가 중심이 되었는데, ‘모임’의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기 전부터 채택 관련 기사를 많이 게재했다. 그리고 각 지방의 교육위원회가 채택 작업을 시작하는 5월 중순 이후는 거의 자율성 회복 프레임에 수렴되었다. 채택 역시 교과서 행정의 중요한 일부이며, “특정한 사상 경향을 가진 교사 집단”⁸⁴을 채택 작업에서 제외

⁸³ ‘채택’이란 검정 합격한 교과서 중에서 수업에 사용하는 교과서를 선택하는 작업이다. 각 지방의 교육위원회에 의해서 결정된다. 1986년 ‘지키는 회’ 교과서는 거의 채택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이 교과서 선택에 관여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모임’은 교원에 의해 채택 대상에서 제외될 것을 우려했다.

⁸⁴ “[사설] 教科書採択, 教委의 見識이야 중요하다”(産經 2001/2/25)

하고, 각 지방의회가 선출한 교육위원에 의한 ‘공정한 채택’을 강하게 주장했다. 또 산케이는 한·중 양국의 비판과 아사히 신문의 기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였다. 아사히에 대한 반론 기사에서는 외압유도(外壓誘導) 프레임(F)이 나타났으며, 한국에 대해서는 외압 유도 프레임과 검정의 이해 요구 프레임이 나타났다. 중국에 대해서는 내정간섭 프레임이 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 신문의 특징은 자율성 회복 프레임과 내정간섭 프레임이 거의 같은 건수로 나타난 것이다. 대략 국내 기사에는 자율성 회복 프레임이, 한·중 양국의 비판에 대해서는 내정간섭 프레임이 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보다 한국에 대해서 내정간섭 프레임이 많이 나타났다. 요미우리는 전술한 바 국내 뉴스와 특파원에 의한 해외 취재 뉴스가 거의 같은 건수였으며, 다른 신문에 비교해서 한·중 양국의 동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프레임 분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2. 프레임 추이

2001년의 ‘모임’ 사건은 어떻게 보면 산케이 신문이 전체 흐름을 만들어 간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검정제도와 교과서 행정으로 산케이와 대립하는 입장인 아사히 신문 역시 또하나의 흐름을 만들어 갔다 (전체적인 프레임 추이는 p.112 Fig.6와 Fig.7 참조). 2001년의 사건은 연초부터 화두가 되었으며 이 교과서를 둘러싸고 분석기간 전체를 통해서 국내·외에서 갈등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 절에서는 아래 표 15⁸⁵에 있듯이 전체 분석 기간을 3 가지 분석기간으로 나누어서 각 신문의 프레임 추이를 설명하기로 한다.

제1기 분석기간은 연초부터 한국정부에 의한 수정요구가 있던 5월 8일까지로 한다. 이 분석기간은 ‘모임’ 교과서의 검정 합격이란 사건을 가운데 두고, 한·중 양국과 일본

⁸⁵ <표15> 3가지 분석 기간

명칭	기간
제1기	연초부터 한국이 수정요구를 실시한 5월 8일까지
제2기	국내 동향이 중심이 된 5월10일부터 7월8일까지
제3기	수정요구에 회답한 7월9일부터 연말까지

사이에서 갈등적 사건이 빈발한 시기였다. 각 신문이 이러한 외적 요인에 대해 어떠한 프레임의 변화를 보였는지를 주로 보는 것이다. 제2기 분석 기간은 5월 10일부터 7월 8일까지 사이로 설정했는데, 이 기간은 ‘모임’ 교과서의 채택을 둘러싸고 일본 국내에서 일어난 이슈가 주된 보도 대상이 된 시기이다. 그래서 이 분석기간을 통해 각 신문이 국내 동향에 대해 어떤 프레임 변화를 보였는지를 보게 된다. 그리고 제3기 분석기간은 7월 9일 이후로 했는데 이번 교과서문제가 서서히 진정화 된 시기이다. 일본정부는 7월 9일에 한·중 양국의 수정요구에 대한 회답을 보냈는데 이것은 사실상 한·중 양국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었으며, 더욱 갈등이 심화했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1998년의 한·일 공동선언에서 결정된 일본문화 개방을 중단했다. 그러나 일부 한국 신문이 이러한 정책을 비판하는 등, 갈등을 진정화 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한·일 쌍방에서 보이기 시작했다. 이번 분석기간은 통해 각 신문이 어떤 식으로 갈등 상황을 수렴시키려고 했는지를 프레임의 변화에서 보기로 한다.

2-2-1. 제1기 분석 기간 (연초부터 5월 9일까지)

2001년 연초부터 5월 8일까지 사이는 국내·외에서 갈등이 많았던 시기이었다⁸⁶. 그 동안의 대표적인 이슈로는 3월 1일의 김대중 한국 대통령에 의한 일본의 역사 인식 비판, 4월 4일의 ‘모임’ 교과서의 검정 합격, 4월 10일의 주일 한국대사의 일시 귀국, 그리고 5월 8일의 한국정부에 의한 기술 수정요구 등이다. 국내 문제로서는 외무성 출신

⁸⁶ <표16> 2001년 제1기 프레임 분포

1/1-5/9	아사히	산케이	마이니치	요미우리
A.자의적 감정 프레임	141 (%)	0	109 (%)	0
B.위상 재정립 프레임	4 (%)	0	1 (%)	0
C.사회적 이벤트 프레임	1 (%)	0	0	0
D.자율성 회복 프레임	3 (%)	95 (38.5%)	2 (%)	28 (27.5%)
E.외교의 희생물 프레임	0	22 (8.9%)	1 (%)	3 (2.9%)
F.외압 도입 프레임	2 (%)	37 (15.0%)	2 (%)	9 (8.8%)
G.검정의 이해 요구 프레임	1 (%)	53 (21.5%)	14 (%)	24 (23.5%)
H.내정간섭 프레임	0	40 (16.2%)	1 (%)	38 (37.3%)
합계	153 (%)	247 (100.1%)	130 (%)	102 (100%)

의 검정 심의회 의원에 의한 ‘모임’ 교과서의 “불합격 공작”이나 채택에 관한 아사히와 산케이 사이의 논쟁 등이 있다.

아사히 신문은 자의적 검정 프레임(A)을 기조로 하여 일관되게 ‘모임’ 교과서들 비판했다. 또 ‘모임’ 교과서에 비판적인 지식인이나 학자들의 목소리를 많이 소개했는데, 이러한 기사는 거의 ‘모임’ 교과서의 자국 중심적인 역사관에 대한 비판이었다. 또 아사히는 채택 작업에서 교원(敎員)을 배제하자고 주장하는 산케이에 대해 채택에 있어서는 교육위원보다 교원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 중요하다는 사실 등을 게재하고 산케이의 반발을 유발했다⁸⁷. 또한 한·중 양국이 ‘모임’ 교과서에 주목하는 모습을 전달하고 일본정부의 검정개입을 재촉하는 듯한 기사를 게재하며 역시 산케이의 반발을 유발했다. 이러한 것으로부터 아사히는 ‘모임’의 교과서를 비판의 대상으로 하고, 이번 사건을 “보수파에 의한 역사왜곡”으로 프레임하려고 한 것을 알 수 있다.

마이니치는 아사히와 같은 자의적 검정 프레임(A)을 기조로 하며, ‘모임’이 만든 교과서에 대해서 역시 비판적이다. 그러나 이번의 사건에서는 이슈에 따라서 기조 프레임과 상반되는 개념인 검정의 이해 요구 프레임(G)이나 외압유도 프레임(F)이 나타났다. 외압유도 프레임은 일본 미디어가 외국의 비판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는 관점이다. 즉 검정 신청한 책의 내용을 아직 검정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보도하다가 외국의 비판을 초래했다고 하는 것인데, 마이니치는 아사히에 대한 비판으로서 이 프레임이 나타났다⁸⁸. 또한 3월 7일의 사설⁸⁹에서는 ‘모임’ 교과서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기

⁸⁷ 아사히가 “검정의 추이를 주시한다”(朝日2/22)란 사실을 게재하면 산케이는 “아사히 사실, 검정에 압력을 가한다는 말인가?”(産經2/23)를 게재하고, 또는 아사히가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하지 말라”(朝日2/24)는 사실을 게재하면 산케이가 “敎委(敎育위원)의 견식이야 중요하다”(産經2/25)란 사실을 게재하고 아사히와 논쟁을 전개했다. 또 아사히의 해설기사 “政府, ‘政治介入하지 않겠다’ 中韓 懸念의 ‘모임’교과서”(朝日2/21)에 대해 산케이는 해설기사 “朝日新聞의 교과서 보도, 무얼 의미하는가. 외압유도와 정부의 정치개입?”(産經2/22)를 게재했다.

⁸⁸ 마이니치는 해설 기사 “만드는 모임의 신청 본, 코피가 나들러 조사”(毎日3/3)에서 “코피 본을 근거로 해서 보도한 것이 원인이 되어 한국이나 중국이 책 내용에 대해 반발하는 사태로 발전했다”고 하여 보도한 아사히를 완곡히 비판했다. 또 해설기사 “정부 방침은 ‘개입 안한다’”(毎日3/9)에서도 아사히가 이번 사건을 크게 보도했기 때문에 산케이 사이에서 논쟁거리가 되어 결과적으로 한·중 양국의 비판을 부추기는 것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⁸⁹ “[사설] 교과서검정 국제사회에의 배려는 필요”(毎日2001/3/7)

술 수정이나 아시아 근린(近隣) 국가들에 대한 배려는 일본이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외국의 비판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주장은 산케이나 요미우리 등 자율성 회복 프레임의 기조로 하는 신문의 논조와 똑같이 보인다. 그러나 산케이와 요미우리가 검정제도의 문제성을 무시하고 ‘모임’ 교과서를 평가하는 것과는 달리 마이니치는 검정제도가 지니는 문제성을 인식하고, ‘모임’ 교과서를 비판했다. 그러므로 마이니치에 나타난 검정의 이해 요구 프레임이 의미하는 바는 한·중 양국의 요구 실현은 제도상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검정에 대해 자율성을 주장한다든가 아사히의 보도를 외압 유도로 비판한다는 것은 1986년의 ‘지키는 회’ 사건 이후 마이니치는 분명히 변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산케이 신문은 자율성 회복 프레임(D)을 기조로 하여 이슈마다 다양한 프레임이 나타났다. 자율성 회복 프레임이 나타난 기사는 교과서 ‘채택’에 관한 것과 교육 행정의 자율성 회복을 고무하는 기사의 두 가지로 이분되었다. 채택이란 학교에서 수업에 사용하는 교과서를 선택하는 작업을 말하는데, 이 작업은 원래 각 지방 의회 관할 하에 있는 교육위원회의 직무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현장에서 실제로 교육에 임하는 교원들의 의견이 채택에 반영될 경우가 많았다⁹⁰. 산케이는 이러한 현상(現狀)에 대해, 교원을 채택작업에서 제외하고 교육위원만으로 작업하는 것을 사실 등을 통해서 주장했다⁹¹. 외교의 희생물 프레임(E)은 거의 다 외무성에 관련한 기사에서 나타났다. 산케이는 외무성의 문과성에 대한 태도나 압력을 비판해 왔는데⁹², 이번 사건에서는 외무성이 한·중 양국의 비판에 대해 반박하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내정간섭 프레임(H) 역시 외무성 관련 기사에서 주로 나타났는데, 중국의 ‘불합격 요청’ 등을 ‘외압’으로 간주하지 않

⁹⁰ 1986년의 ‘지키는 회’ 교과서는 검정에 합격했는데 교과서로 채택한 학교가 거의 없었다. ‘모임’은 교원의 반대 의견을 막기 위해 ‘모임’의 지방 회원을 통해 각지의 지방의회에게 교육위원에 의한 채택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타와라, 2001, p.113).

⁹¹ 산케이는 사실 “교과서 채택, 重要性이 커지는 教委의 견식”(2/9)이나 “교과서 채택 教委의 견식이 중요하다”(2/25) 등으로 교육위원에 의한 채택을 주장했다.

⁹² ‘모임’ 사건에서는 외무성 출신의 검정 심의회 위원이 ‘모임’ 책을 불합격시키자고 하는 메모를 다른 위원에게 보냈다는 일이 있었다. 산케이는 이것을 “불합격 공작”(産經1/4)이라고 비난하고, 그 결과 해당 위원은 문과성에 의해 다른 부서로 이동되었다. 이 사건에 관련한 산케이의 기사 건수는 6건이며, 모두 다 외교의 희생물 프레임이 나타났다.

려고 하는 의무성을 비판한 것이다. 중국의 일본 비판에 대해서는 내정간섭이란 말로 심하게 반박하면서 한국 관련 기사에서는 주로 검정의 이해 요구 프레임(G)이 나타났다. 산케이는 채택작업을 중심으로 교과서 행정에 대해 무엇인가 주장하는 바가 있어서 기조 프레임이 계속 나타난다고 하는 경향을 보였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중 양국의 교과서 비판에 대해 그때마다 반론하는 듯이 기사를 게재했다. 그래서 산케이처럼 일관되게 기조 프레임이 나타난다는 모습이 아니었다. 이 시기의 요미우리에 뚜렷하게 나타난 프레임은 내정간섭 프레임(H)이었는데, 이 것은 거의 다 중국의 ‘불합격 요구’ 관련 기사에서 나타났다. 한편으로 한국의 교과서 비판에 대해서는 검정의 이해 요구 프레임(G)이 나타난 것을 보아, 이 시기의 요미우리는 한국에 대해서는 중국처럼 생경한 태도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일본과 같은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讀賣3/2)고 하고, 검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요구했다. 그러나 4월 10일에 주일 한국대사가 ‘일시 귀국’했을 때 이것을 ‘소환’이란 제목으로 보도하고, 4가지 신문 중 가장 강한 반응을 보였다⁹³. 중국에 대한 경직된 태도는 중국을 단일 이데올로기 국가로 간주하는 것에 기인한다⁹⁴.

요미우리의 자율성 회복 프레임은 주로 검정의 경과를 보도하는 기사와 ‘모임’ 관련 기사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요미우리는 ‘모임’ 교과서를 산케이처럼 적극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문제가 된 자국 중심적인 기술 내용의 수정을 긍정하는 듯한 보도를 했다⁹⁵. 요미우리가 ‘모임’ 교과서를 평가한 부분은 그 교과서에는 ‘중군위안부’에 관한 기술이 없다는 것이었다.

분석 기간 제1기에는 (3/1)김대중 한국 대통령의 일본 역사인식 비판과 (4/4)‘모임’ 교과서의 검정 합격, (5/8)한국정부에 의한 기술 수정 요구 등이 일본 신문의 프레임 변

⁹³ “한국, 崔·駐日大使를 사실상 소환 ‘모임’ 역사교과서의 검정합격에 항의”(讀賣4/10).

⁹⁴ “[사실] 검정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회피하기 위해”(讀賣3/19)에서 한국과 중국에 대해 언급하다가 중국에 대해서는 일본의 사상·신조의 자유에 대한 간섭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한국정부에 의한 기술 수정요구를 계기로 크게 변한다.

⁹⁵ “역사교과서문제 ‘만드는 모임’, 검정에서 137개소 수정”(讀賣3/5), “‘새로운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강제 노동의 기술수정, ‘전쟁에 선악 없다’ 전면 삭제”(讀賣3/13) 등. 그런데 산케이는 검정 중인 교과서에 대한 보도는 검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보도하지 않았다.

화를 가져왔다.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해 각 신문의 반응을 살펴보기로 한다.

① 김대중 한국 대통령의 역사 인식에 대한 언급 (3/1)

한국 미디어는 연초부터 ‘모임’ 교과서의 검정 통과를 우려하고 있었는데, 한국 정부는 교과서문제를 적극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삼일절’로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것은 일본 신문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어, 4가지 신문은 각각 사실이나 해설기사 등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언급의 배경 설명을 시도했다. 아래 표17은 그날의 각 신문의 1면에 게재된 기사와 다음 날에 게재된 사실의 리스트이다.

<표17> 김대중 대통령에 의한 일본의 역사인식 언급 관련 기사의 제목과 프레임

2001/3/1 프레임	기사 제목
아사히	A 金大中大統領 “오른 역사인식을” 教科書問題로 언급, 일본에 善處 요구
	A “검정 단계에서 노출되어 유감” 首相, 歴史教科書問題로
	A [해설] ‘對日重視’하는 中韓 딜레마 歴史教科書問題 再燃 (3/2)
산케이	F 韓國大統領 歴史教科書 “오른 認識 期待” 日本에 은근이 是正要求
	F 歴史教科書 내용 노출에 首相 불쾌감
	E, H [사실] 教科書外壓 ‘靜觀’은 말하는 대로 하는 것과 같다(3/2)
마이니치	A 金大中大統領, 日本의 歴史認識을 언급 歴史教科書, 間接적으로 是正 요구
	G 歴史教科書, 검정 결과 지켜보겠다 福田 官房長官
	H 日本에 오른 歴史認識을 期待 歴史教科書檢定로 金韓國大統領이 表明
요미우리	F 검정 중 교과서 내용 노출, 森首相, 予算委에서 遺憾의 意
	F, G, H [사실] 역사교과서 日本은 思想의 多樣性 許容하는 국가이다(3/2)

아사히 신문은 모든 기사에서 자의적 검정 프레임(A)이 나타났으며, 이것은 사건의 앞과 뒤에서 변함이 없었다. 3월 1일 석간에서는 ‘일본에 선처를 요구’ 라고 하여, 이미 ‘모임’ 교과서가 한·일간 문제가 된 것을 강조했다. 다음 날의 해설기사에서 한·중 양국의 일본 비판의 배경을 설명했는데, 한·중 양국은 국내문제가 배경에 있어서 일본 비판을 하게 되었다는 설명이었다. 즉 한국의 경우 국내의 정치 불신에 대한 대응의 강화로

설명한 것이다. 이 해설기사는 당시 일본의 森(모리) 정권에 대한 비판 기사이며, 교과서 문제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려는 의도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일본 비판의 배경을 김대중 정권의 불안 상태로 설명하려는 관점은 산케이나 요미우리와 같은 것이었다. 이러한 아사히의 보도에서는 자의적 검정 프레임에 특유한 일본사회의 역사 인식을 문제시하려는 자세는 보이지 않았다.

마이니치 신문은 연초부터 자의적 검정 프레임(A)이 계속 나타났는데, 이번 사건에서 처음에 검정의 이해 요구 프레임(G)이 나타났다. 해당 기사는 당시의 福田(후쿠다) 관방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일본정부는 검정개입 못한다고 말했다는 것이었다. 검정의 이해 요구 프레임이란 주로 자율성 회복 프레임을 기조로 하는 신문에서 나타나기 쉬운 것이다. 한·중 양국은 검정제도를 잘 이해 못하고 있다, 또는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고 보는 관점이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중 양국에 검정제도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중 양국은 일본의 검정제도를 잘 알고 있다⁹⁶. 그래서 이 검정의 이해 요구 프레임에는 검정제도의 문제성을 은폐하는 기능도 있으며, 자의적 검정 프레임을 기조로 하는 아사히나 마이니치에는 나타나기 어려운 프레임이다. 그래서 마이니치에게 이 프레임이 나타났다는 것은 전술한 바 마이니치의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관점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다시금 말하는 것이다.

산케이 신문은 외압 유도 프레임(F)과 외교의 희생물 프레임(E)이 나타났다. 한국 국내의 일본에 대한 여론을 한국 미디어가 ‘反日 캠페인’으로 악화시키고 있으며,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은 일본과의 우호 관계를 중시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국내 여론에도 배려한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비판을 한국의 국내 사정이 야기한 것처럼 기사화 한 것이다. 또 사실 “정관(靜觀)은 말하는 대로 하는 것과 같다”(3/2)에서 외무성에 대해 한·중 양국의 불합격 요구나 합격에 대한 염려를 내정간섭으로서 간주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케이의 이번 사건 관련기사

⁹⁶요미우리 신문은 "(중국의) 唐 외무부장은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가 매우 복잡한 것은 이해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讀賣2001/3/7). 산케이 역시 3월1일 조간에서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하고 “한·중 양국은 일본의 검정제도를 잘 알고 있다”고 기사화한 적이 있다. 그래서 이 답론은 한·중 양국이 일본의 검정제도를 이해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주장하는 것이다.

의 논조는 교과서문제를 일으킨 것은 일본신문의 폭로보도이며, 한·일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김대중 정권과 대립하는 한국 미디어인 것이다.

요미우리 신문은 연초부터 한국관련 기사에는 내정간섭 프레임(H)이 나타났으며, 이번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반응을 보였다. 사실 “일본은 사상의 다양성 허용의 국가이다”(3/2)에서는 한·중 양국에 대해서 일본의 검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고, ‘모임’ 교과서에 대한 중국의 불합격 요구는 사상·신조·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간섭이라고 비난했다. 일본의 검정제도는 한·중 양국처럼 ‘국정교과서’를 정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반박하여, 갈등 해소에는 우선 한·중 양국의 검정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요미우리는 이번 사건을 일본의 ‘特定マスコミ(특정 마스크)’⁹⁷에 의한 ‘외압 유도’ 보도의 결과로 간주하고, 한·중 양국이 이러한 보도에 편승하여 역사인식 문제를 ‘대일(對日) 외교 카드’로 쓰는 것을 비판했다.

②‘만드는 모임’ 교과서 검정 합격 (4/4)

이날 한·중 양국이 우려한 ‘모임’ 교과서가 검정 합격하였고, 각 신문은 사실로 검정제도와 ‘모임’ 교과서에 대한 태도를 표명했다⁹⁸.

아사히 신문은 주로 ‘모임’ 교과서에 대한 비판을 하고, 마이니치 신문은 교과서 비

⁹⁷ 요미우리가 말하는 ‘특정 마스크’이란 아사히 신문이다. 서설에서 “특정 마스크가 전시(戰時)의 근로동원(勤勞動員)이던 女子挺身隊(여자 정신대)를 강제적인 위안부 사냥이었다고 역사를 날조한 결과, 일시적으로 한일관계를 악화시켰다”고 아사히의 위안부 보도가 일으킨 파동을 비난하고, 이러한 ‘특정 마스크’의 보도에 편승한 한·중 양국을 비판했다.

⁹⁸ <표18> ‘모임’ 교과서 검정합격 관련 조건 1면 기사와 사실

	2001/4/4 프레임	일면 기사와 사실 제목
아사히	A ‘만드는 모임’ 교과서 합격	자국중심 사관 아직도
	A, B [사실] 역시 어울리지 않다. ‘만드는 모임’ 교과서	
	D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	扶桑社 등 8사 합격 - 위안부 기술 감소-
산케이	D [기고] ‘새로운 역사교과서’ 읽어 보고 - 다 끝나 보니 보통 교과서-	
	D, F [사실] 새로운 교과서 폭 넓은 역사교육의 시대 자유롭게 풍요하게	
마이니치	A ‘만드는 모임’ 교과서, 검정합격	- 중학교 역사 137개소 수정-
	A [사실] 역사의 직시해야 미래를 연다 - 검정제도는 근본적 개혁을-	
요미우리	D ‘배우는 내용 30%감소’ 엄격히-만드는 모임 책 137개소 수정, 합격-	
	D, G [사실] ‘역사교과서’ 公正한 검정에 理解 구하라	

판과 동시에 검정제도도 언급했다. 산케이 신문은 ‘모임’ 교과서의 합격이 일본의 역사 교육을 폭 넓은 풍요한 것으로 만든다고 절찬하고, 요미우리 신문은 ‘모임’ 교과서의 적극적인 평가보다 근린 국가들에 대해 검정 결과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산케이와 요미우리는 ‘모임’ 교과서에 ‘중군위안부’ 기술이 없는 것을 평가했는데, 한국과 중국 입장에서는 이것은 역사왜곡에 해당했다. ‘모임’ 자체가 위안부 기술이 없는 교과서를 만든다는 목적으로 생긴 단체이며, 산케이와 요미우리는 교과서에 위안부를 기술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모임’의 목적 달성을 평가한 것이다. ‘중군위안부’는 1992년 이래 일본사회에 큰 파동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바로 1992년 이후 적극적인 보도로 위안부 문제를 일본사회에서 쟁점화 시킨 아사히 신문은, 그러나 ‘모임’ 교과서를 비판하면서 그 책에 위안부 기술이 없다는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

아사히 신문은 합격 관련기사가 가장 많았고(21건), 다양한 소스로 ‘모임’ 교과서를 비판했다. 특히 사설과 기고에 위상 재정립 프레임(B)이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위상 재정립 프레임은 이번 사건을 역사수정주의에 의한 일본사의 고쳐 쓰기로 보는 관점이다. 사설에서는 ‘모임’이 주장하는 “글로벌리제이션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과거를 긍정하는 내셔널리즘으로 대항하자” 라고 하는 태도를 비판했다. 또 위상 재정립 프레임(B)은 한국 지식인에 의한 기고에서도 나타났다. 이 기사는 ‘모임’ 교과서에 대한 한국사회의 염려를 전달하면서, 동시에 ‘모임’의 운동을 인정하고 그것에 응하는 사회 분위기가 일본에 퍼지고 있는 것을 우려했다.

또한 해설 기사 “다음 목표 채택10% ‘만드는 모임’ 교과서”(4/4)에서 사회적 이벤트 프레임(C)이 나타났는데, 이 프레임은 이번 사건을 우파 미디어와 보수파가 협조하여 만들어 낸 것으로 간주한다. 이 기사에서는 ‘모임’의 활동이 自由民主黨과 매스 미디어와의 협조로 행해져 왔다고 설명했다. 즉 ‘모임’과 산케이 신문, 그리고 ‘신진 의원의 회’⁹⁹ 등의 보수파 국회의원 단체들이 연동하여 ‘모임’ 책을 정식 교과서로 만들었다는

⁹⁹ ‘신진 의원의 회(日本の前途と歴史教育を考える若手議員の會)’는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중군위안부’가 기재된 것을 직접적인 계기로 발족한 단체이다. 모임에 참가한 의원들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반일(反日)적인 교과서로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에 대한 불안”을 공통의 인식으로 하고 있었으며, “초등·중등 학교의 역사 교육이 정치나 외교, 특정의 이데올로기로 흔들리고 있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입장이다.

설명이었다. 아사히의 합격 관련 기사 중에 이따금 보이는 자율성 회복 프레임(D)과 검정의 이해 요구 프레임(G)은 ‘모임’ 관계자에 의한 기고이다.

마이니치 신문은 검정제도에 대해서는 아사히보다 한 걸음 나아가서, 제도의 폐지를 시야에 넣어 다시 생각하는 시기에 왔다고 했다(4/4). 또 ‘수정 의견’이나 ‘개선 의견’을 통해서 교과서의 기술내용을 수정한다는 것은 외국 입장에서 보면 국가 역사관의 교과서에 반영으로 보이며, 그래서 역사교과서 문제 같은 갈등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검정이 우과의 교과서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마이니치는 ‘모임’ 교과서의 근·현대 일본의 행동을 정당화 하는 부분을 문제시하면서, “일본을 나쁜 놈으로 만들고 싶지 않은 심정은 이해가 된다”고 하여, ‘모임’ 교과서의 ‘수정된 역사’를 수용한 일본사회의 분위기를 언외에 시인했다. 관련기사는 모두 12건이었다.

산케이 신문은 사설에서 ‘모임’ 교과서의 합격은 일본의 역사교육을 다양하고 풍요롭게 한다고 절찬했다. 또 ‘모임’의 교육용 도서 시장 진출이 타사 교과서에 영향을 주고, ‘중군위안부’나 ‘南京事件(난진사건)’ 등의 ‘자학적 기술’을 수정한 또는 아예 기술하지 않은 교과서가 이번에 생긴 것을 지적했다. 한편으로 ‘중군위안부’ ‘난진대학살’ 등을 기술한 ‘편향적’ 교과서도 합격했다고 해서, 검정은 폭 넓은 재량(裁量)으로 올바르게 기능했다고 평가했다¹⁰⁰. 외교의 희생물 프레임(E)이 나타난 기사는 과거의 역사교과서 문제가 외교를 우선했기 때문에 일본의 국가 주체성을 손상시켰다는 이야기를 되풀이 하는 것이었다. 외압 유도 프레임(F)은 한국의 국내동향을 전달하는 기사에서 나타났으며, 내정간섭 프레임(H)은 중국에 대해서 나타났다. 이 시기의 산케이는 한국정부와 한국 미디어를 구별하고, 한국정부는 1998년의 한일 공동선언을 준수하고 문제를 확대할

¹⁰⁰ 교과서에 위안부 기술이 필요 없다는 이유는, (1)‘중군위안부’란 명칭이 당시 없었다(2)강제적으로 연행되었다는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3)타국에도 위안부가 존재했는데 왜 일본만의 망행으로 취급하는가(4)‘군대와 성’이란 문제를 중학생에 가르치는 것이 시기 상조이다 등이 다(産經4/10). 산케이는 기획 기사 “새로운 교과서의 충격⑤, 감소된 위안부 기술”(産經4/10)에서 각 출판사가 자발적으로 위안부 기술을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건에서 산케이는 교과서의 편향이라는 문맥에서 위안부 문제를 언급할 경우가 많았다. 이것에 대해 요미우리는 주로 외국이 일본의 역사왜곡을 강요한다는 문맥에서 위안부를 언급했다. 즉 중군위안부는 근거 없는 날조사건이기 때문에 역사 교과서에의 기술을 요구하는 것은 ‘역사왜곡’이 된다는 것이다.

생각이 없지만, 한국 미디어가 일본에 대한 강경 자세를 부추기고 있다고 기사화했다. 관련 기사는 모두 17건이었다.

요미우리 신문의 검정 합격 관련 기사(12건)는 자율성 회복 프레임(D)과 내정간섭 프레임(H)에 거의 이분되었다. 내정간섭 프레임은 ‘모임’ 교과서의 검정 합격에 대한 한·중 양국의 국내 분위기를 전달하는 기사에서 나타났다. 서울 특파원에 의한 해설기사는 한국정부가 재발(再發) 방지를 요구한 것을 “과거의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하는 對日 자세의 수정을 단행했다”고 비난했다. 즉 일본과 한국은 1998년의 공동선언으로 과거의 역사적 문제에 매듭을 지었다고 하는 것이 요미우리의 공동선언에 대한 해석이다. 이는 갈등의 원인은 한·일 공동선언을 준수하지 않은 한국측에 있다고 하는 인식인 것을 볼 수 있다. 요미우리는 사설 “공정한 검정에 이해를 요구하라”(4/4)에서 ‘모임’ 교과서에 언급하여, 이 교과서에는 신화(神話) 등이 타사 교과서보다 많다는가, ‘중군위안부’ 기술이 없다는 등 다소 편파적인 부분이 있지만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요미우리는 이날의 해설기사에서도¹⁰¹ 위안부 기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시도하는 등, ‘중군위안부’ 기술에 대해 구애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요미우리는 ‘모임’ 교과서는 종래의 교과서와는 색다른 교과서임에 불구하고 합격한 것은 검정제도가 올바르게 기능하고 있는 증거이며, 일본사회의 사상·언론의 자유와 다양성의 현상이라고 산케이와 같은 말로 검정제도를 긍정했다. 여기에서는 “과도한 검정은 교과서의 국정화를 초래한다”(讀賣1986/7/10)고 우려하고, 좌우 어느쪽이든 교과서 제작의 현장에서 이데올로기를 노골적으로 하는 것을 비판한 1986년의 요미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③ 한국 정부가 교과서의 역사 기술 수정 요구 (5/8)

¹⁰¹ “모임 교과서, 합격의 경위. 혼란 초래한 사전 누설”(讀賣2001/4/4)에서, “‘중군’이란 표현은 역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여, 이미 현행 책의 정정으로 ‘중군’이 삭제되었다”고 했다. 산케이 역시 기획기사 “새로운 교과서의 충격(5), 감소한 위안부 기술”(産經2001/4/10)에서 위안부를 기술한 교과서가 감소했다는 것을 역설(力說)했다.

5월 8일에 한국정부는 ‘모임’ 교과서의 문제 부분을 제시하고 기술 수정을 정식 요구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산케이와 요미우리가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음 표19은 5월 8일의 관련기사의 제목과 프레임 분포이다.

<표19> 한국정부 수정요구 관련 1면 기사와 사설의 제목과 프레임

2001/5/8		프레임	기사 제목
아사히	A		한국, 35개 재수정 요구 역사교과서 문제로 8사 대상
	A, G		[사설] 재수정 요구, 좋은 교과서예의 일조(一助)로 (5/9)
	G		中學歴史教科書 한국, 수정을 요구 8사 35항목 “史實 왜곡, 은폐”
	G		▲ 日本政府 ‘재수정은 곤란하다’
산케이	G		▲ 1社 단독으로는 대응 못해. 出版社는 困惑
	G		中學歴史教科書 修正要求 小泉首相 誠實히 받아드리겠다
	H		[해설] 中學敎역사교과서 修正要求 수용은 公敎育의 崩壞
	H		<참고>[사설] 毅然히 거부의 자세 관찰하라 (5/9)
마이니치	A		韓國, 35項目로 再修正要求 - 歴史教科書 從軍慰安婦記述 등
	G		▲ “잘못이 있으면 修正할지” 文部科學相
	A, G, H		[사설] 歴史教科書 再修正과는 다른 방법 찾아라 (5/9)
요미우리	G		歴史教科書問題 韓國, 35項目 修正을 要求
	G		▲ 韓國의 修正要求, “잘못이 없으면 못한다” 福田 官房長官
	H		▲ [해설] 修正强要은 違憲 해당
	G		▲ 文部科學省, 調査官 詳細한 分析으로
	H		[사설] 歴史教科書 韓國의 修正要求는 內政干涉이다 (5/9)

검정제도는 국가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합격 후의 재수정은 불가능하다는 규칙이 있다. 4가지 신문은 각각 검정제도와 ‘모임’ 교과서에 대한 생각이 다르지만, 한국정부의 수정요구를 모두 다 거부했다. 아사히와 마이니치에는 기존 프레임과 상반되는 개념의 검정의 이해 요구 프레임(G)이 나타났으며, 산케이와 요미우리는 수정요구를 내정간섭으로 간주하고, 검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라고 주장했다. 아사히와 마이니치보다 산케이와 요미우리가 수정요구에 대해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사히 신문은 기초가 된 자의적 검정 프레임(A)에는 변화가 없었는데, 그러나 사실 “좋은 교과서예의 일조(一助)로”(5/9)에서 기존 프레임과는 상반되는 개념인 검정의 이해 요구 프레임(G)이 나타났다. 아사히는 검정의 자의적인 운용을 비판하는 입장이다.

검정의 자의적 운용이란 그때마다의 사회적, 정치적 요구에 따라 검정 기준이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한국의 역사왜곡 비판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만, 검정제도에 대한 개입을 불가피하게 하는 수정요구는 용인할 수 없다. 즉 “주장하는 바는 이해되지만 채 수정은 검정 제도상 불가능하다”라고 부드러운 표현으로 거부한 것이다.

아사히 신문의 이 기사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우리도 타국의 교과서에 문제가 있으면 사양 말고 의견을 말하고 싶다” 라고 주장한 점이다. 즉 외국의 교과서에서 일본에 관련해서 잘 못한 기술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하자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1986년부터 산케이가 주장해 온 것이며 또는 ‘지키는 회’의 주장이기도 하다¹⁰². 동시에 “타국의 지적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옳다고 생각하면 수용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거부하”(朝日5/9)자고 주장했는데, 이는 마이니치가 기술 수정이나 근린 국가에의 배려는 “일본이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문제”(毎日2001/3/7) 라고 주장한 바와 같은 것이다. 또한 일본정부의 저자세 외교를 비판하는 ‘밝은 일본 국회위원의 연맹’이 “안이하게 타국의 견해에 영합하여 추종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분명 저의적 검정 프레임의 적용 범위를 ‘모임’과 그들의 교과서에 한정시키고, 한·중 양국의 수정요구를 ‘제도상 불가능’이라는 말로 기피하는 아사히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마이니치 신문은 자의적 검정 프레임(A)과 검정의 이해 요구 프레임(G)에 이분되었다. 검정의 이해 요구 프레임(G)이 나타난 기사의 상당수는 수정요구에 관한 정부와 자민당의 견해를 전달하는 스트레이트 기사였다. 사실 “채수정과는 다른 방책을 찾아라”(5/9)에서는 내정간섭 프레임(H)이 나타나서 분명히 수정을 거부한 것을 알 수 있다. ‘모임’ 교과서에는 문제가 많지만 수정은 일본이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외국의 요구를 따라 채수정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모임’ 교과서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검정 규칙에 저촉하는 형태로의 수정은 제도상 불가능하다고

¹⁰² 산케이의 기사에는 “상호이해 ‘외국의 오류도 지적’ 수정을 요구해야 할것”(産經1986/7/24), 그리고 “교과서 공동연구, 日本도 史實의 오류를 指摘”(産經2001/11/19) 등이 있다. 산케이는 이 기사에서 “역사 인식의 공유에는 무리가 있어도 명백한 史實의 오류를 日本도 주장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지키는 회’ 역시 “중국의 교과서를 수정해야 한다”는 똑같은 주장을 했다 (무라카미 요시오, 1986, p.38과 p.112).

하는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것은 지난 3월 7일의 사설에서도 볼 수 있던 “일본의 주체적 판단”이란 주장과 공통하는 인식이며, 이번 ‘모임’ 사건에 대한 마이니치의 태도를 나타낸 것이었다.

산케이 신문과 요미우리 신문은 적극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반론을 실시했다. 산케이는 검정제도에의 이해 부족을 지적하고, 해설기사에서 수정요구 수락은 일본의 공교육의 붕괴이다라고 강한 어조로 주장했다. 또 한국의 수정요구의 배경을 “(한국)정부는 마스크 여론의 ‘반일 강경론’에 밀려 수정 요구로서 외교 문제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한국 미디어의 영향으로 설명했다. 기고와 해설의 대부분은 한국의 수정요구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기사들이었다.

요미우리 신문도 수정요구는 내정 간섭이다라고 하는 입장이었다. 요미우리는 사설로 기술 요구는 “한국의 역사관”을 일본에게 강요하는 것이다라고 비난했으며, 한국정부가 ‘중군위안부’의 기술이 없다는 것을 역사왜곡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격렬하게 반발했다. 요미우리는 ‘모임’ 교과서가 검정 합격했을 때는 ‘모임’ 교과서에 ‘중군위안부’ 기술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번 한국의 수정요구에 대해서도 반박하는 데에 핵심 요소가 된 것은 ‘중군위안부’ 기술이다. 이것은 이번 제3차 역사교과서 문제가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중군위안부’ 기술을 문제시한 것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2-2-2. 제2기 분석 기간 (5월 10일부터 7월 7일까지)

문과성(文科省)이 한·중 양국의 수정요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제2기 분석 기간 동안은 한·중 양국의 교과서 비판은 산발적이 것이 되었다. 대신 일본 국내에서 ‘모임’ 교과서에 대한 채택 반대 운동이 활성화되어, 이 시기는 이것이 보도의 중심이 되었다¹⁰³. 이 절에서는 각 신문이 국내 문제를 보도하는 데에서 어떠한 프레임이 나타났는지를 보기로. 아래 표20는 이번 분석 기간 동안의 각 신문의 프레임 분포이다. 산케이가 가장 기사 건수가 많았으며, 특히 검정제도와 교과서 행정의 공정한 진행을 주

¹⁰³ 5월 31일에 ‘모임’ 책의 채택을 반대하기 위한 시민단체인 ‘어린이와 교육 네트워크’(대표 타와라 요시후미)가 결성되었다. 이후 이 단체가 반대운동을 주도하게 된다.

장하는 자율성 회복 프레임(D)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20> 2001년 제2기 프레임 분포

5/10-7/8	아사히	산케이	마이니치	요미우리
A.자의적 검정 프레임	59 (96.7%)	0	42 (87.5%)	0
B.위상 재정립 프레임	1 (1.6%)	0	1 (2.1%)	0
C.사회적 이벤트 프레임	0	0	0	0
D.자율성 회복 프레임	1 (1.6%)	114 (79.2%)	3 (6.3%)	16 (44.4%)
E.외교의 희생물 프레임	0	3 (2.1%)	1 (2.1%)	1 (2.8%)
F.외압 도입 프레임	0	5 (3.5%)	0	0
G.검정의 이해 요구 프레임	0	10 (6.9%)	0	5 (13.9%)
H.내정간섭 프레임	0	12 (8.3%)	1 (2.1%)	14 (38.9%)
합계	61 (99.9%)	144 (100%)	48 (100.1%)	36 (100%)

산케이 신문은 5월 10일 이후 자율성 회복 프레임(D)에 수렴되었으며, 이 분석 기간 동안 보도의 중심이 된 것은 채택과 ‘모임’ 관련 화제이었다. 채택이란 검정 합격한 교과서 중에서 어느 것을 사용할까 결정하는 작업을 말하는데, 4월부터 8월 중순까지 실시된다. 그래서 산케이는 이 기간 동안 교육위원회에 의한 공정한 채택작업을 주장하고, 동시에 ‘모임’ 교과서의 채택 반대운동을 비난했다. 또하나의 뚜렷한 특징은 ‘모임’이 뉴스 소스로서 빈번히 등장한 것이다. ‘모임’ 관계자에 의한 기고 기사(4건)¹⁰⁴와 ‘모임’이 주최하는 다양한 심포지움의 취재기사(14건) 등과, ‘모임’ 교과서의 특징을 알리기 위한 기획기사 “교과서의 통신부(通信簿)” (8건) 등 다양한 형태로 ‘모임’의 활동을 보도했다. 그리고 한·중 양국의 교과서 비판에 대해서는 내정간섭 프레임(H)이 나타났다. 한·중 양국은 외상회의(外相會議)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수정요구에 대한 일본정부의 성의 있는 대응을 재촉했기 때문이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번 분석기간 동안 주로 중국과 한국의 교과서 비판과 검정 비판에 반박하는 기사가 보도의 중심이 되었다. 요미우리는 산케이처럼 ‘모임’의 활동과 그

¹⁰⁴ 산케이에 등장한 ‘모임’ 관계자는 “교과서문제, 자기 역사해석을 강요하는 어리석음/加地伸行”(産經5/9), “評論家/佐伯彰一, 교과서문제 학자들의 ‘편향이용’ 허용하지 말아”(産經5/12), “扶桑社 교과서 藤岡信勝 東大교수 ‘펠리의 白旗’는 사실 / 일방적인 채택방해 활동”(6/22), “중학교 교과서, 이어지는 비판에 반론, 집필자의 한명 田中英道 東北大교수”(7/6) 등이 있다.

들의 교과서에 대해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보도하지는 않았다. ‘모임’에 관련한 기사 건수도 타사에 비교해서 특별히 많은 것도 없었으며, 때마다 일어나는 ‘모임’에 관계된 갈등적 사건을 스트레이트 기사로 보도하는 것을 일삼는다. 제2기에서 자율성 회복 프레임이 나타난 기사는 국내 동향을 보도하는 기사이었으며, 내정간섭 프레임은 중국의 수정요구와 한·중 양국의 일본에 대한 비판, 그리고 ‘모임’의 자주적 수정에 대한 한·중 양국의 냉정한 태도에 대한 기사 등에서 나타났다. 요미우리는 ‘모임’의 교과서를 전적으로는 평가하지 않으면서도 교과서에 대한 한·중 양국의 비판에는 심하게 반박한다는 특징을 이번 분석 기간에서도 보였다.

아사히 신문은 산케이가 ‘모임’ 교과서의 평가 기사를 주로 게재한 것에 대해 ‘모임’ 교과서의 비판 기사를 중심으로 게재했다. 그러한 비판의 주체는 진보적 지식인과 학술 단체를 중심으로 시민운동 단체, 일본 교직원 조합, 그리고 한국과 중국 등이었다. 또한 채택 반대운동 단체의 전면(全面) 광고를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에 가담했더니 역시 산케이의 반발을 유발했다¹⁰⁵. 이번 분석 기간을 통해서 아사히는 ‘모임’ 교과서를 비판하는 데에 집중되었는데, 그러나 검정제도에 대한 언급과 역사교과서 문제의 배경에 대한 언급은 한국계 미국인에 의한 기고 기사¹⁰⁶밖에 보지 못했다.

이번 분석기간에 나타난 마이니치 신문의 특징은 스트레이트 기사에 치중하여 보도하다가 몇 가지 자율성 회복 프레임(D)이 나타난 점이다. 전술한 바 자율성 회복 프레임은 산케이와 요미우리가 기조로 하는 프레임이며, 마이니치가 기조로 하는 자의적 검정 프레임과 대립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번 기간에는 지식인의 기고와 독자투고 그리고 칼럼에서 이 프레임이 나타났다. 특히 칼럼의 기사 내용은 ‘모임’ 교과서를 평가하고 있으며, 제1기 분석기간에 사설에서 내정간섭 프레임이 나타났듯이 이것은 마이니치의 인식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마이니치는 모임 책의 역사관을 비판하지만, 책의 기술내용에 대해서는 일본이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주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으로부터 이번 ‘모임’ 사건의 특징은 보수나 진보나를 불문하고 문제해결에 있어서 일본이 주체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¹⁰⁵ “扶桑社教科書 不採択 運動側の 全面広告를 掲載 朝日新聞”(産經 6/22)

¹⁰⁶ “정치 결착은 일·한의 어긋남 확대”(朝日6/23).

2-2-3. 제3기 분석 기간 (7월 9일부터 연말까지)

일본정부는 7월 9일에 한·중 양국의 수정요구에 대해 회답했다. 그것은 고대사에 두 개 잘 못한 기술이 있지만 근·현대사에는 수정할 것이 없다는 답이었기 때문에 한·중 양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이 더욱 심각해졌다. 한국정부는 이것에 대해 7월 13일에 일본 문화 개방을 중단한다고 통지해 왔다. 이것으로 한·일 양국은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경직된 상황이 되었는데, 그러나 양국의 미디어에는 갈등을 진정화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한다. 그리고 ‘모임’ 교과서의 채택율이 지극히 낮은 것이 알게 되면서 갈등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서서히 해소되었다. 이 분석 기간은 일본의 신문들이 갈등이 진정화 하는 데서 어떠한 방향으로 프레임이 수렴되어 갔는지를 보게 된다¹⁰⁷.

아사히는 이번 분석기간을 통해 일관되게 자의적 검정 프레임(A)이 나타났다. 제2기 분석기간과 같이 ‘모임’ 교과서에 대한 비판과 반대운동이 보도의 중심이 되었는데, 그것과 동시에 25개 의견 기사를 게재하여 교과서문제를 다양한 각도로 검증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다만 역사인식이나 일본사회의 변화를 언급한 기사는 거의 다 지식인에 의한 기고 또는 인터뷰 기사이며, 아사히 신문의 기자가 쓴 기사는 ‘모임’ 교과서에 대한 반대운동의 실천과 성과, 한·일간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소개와 이것에 대한 일본정부의 소극적인 대응 등이었다. 또 중국이나 한국의 국내 동향을 전달하는 기사 역시 많았으

¹⁰⁷ <표21> 2001년 제3기 프레임 분포

7/9-12/31	아사히	산케이	마이니치	요미우리
A.자의적 검정 프레임	114 (99.1%)	0	118 (92.2%)	0
B.위상 재정립 프레임	1 (0.9%)	0	3 (2.3%)	0
C.사회적 이벤트 프레임	0	0	0	0
D.자율성 회복 프레임	0	145 (77.5%)	3 (2.3%)	44 (60.3%)
E.외교의 희생물 프레임	0	1 (0.5%)	0	0
F.외압 도입 프레임	0	3 (1.6%)	0	0
G.검정의 이해 요구 프레임	0	7 (3.7%)	3 (2.3%)	5 (6.8%)
H.내정간섭 프레임	0	31 (16.6%)	1 (0.8%)	24 (32.9%)
합계	115 (100%)	187 (99.9%)	128 (99.9%)	73 (100%)

며, 한·중 양국이 일본의 상황을 계속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일본사회에 알리기도 했다. 아사히는 지식인의 기고나 인터뷰 기사에서는 역사인식 문제와 역사 수정주의에 의한 역사왜곡을 우려하고 비판했다. 그러나 신문사 입장으로는 결국 자의적 검정 프레임을 유지한 채 이번 역사교과서 문제 관련 보도를 끝냈다.

마이니치는 자의적 검정 프레임(A)을 기조로 하면서도 사실이나 해설 등 의견 기사에서 검정의 이해 요구 프레임(G)이나 자율성 회복 프레임(D)이 나타난다는 변화를 보였다. 마이니치의 이러한 변화의 징후는 연초부터 나타나고 있었는데, 해설이나 사실에서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이번 분석기간이 되면서이다. 마이니치는 제3기가 시작되자 곧 사실에서 검정의 이해 요구 프레임(G)이 나타났으며, 8월에 들어가서는 ‘모임’의 교과서를 비판하는 해설기사에서 자율성 회복 프레임(D)이 나타났다. 이들 기사는 사회부 기자의 서명이 있는 해설 기사이니 마이니치의 기조가 된 프레임과 상반될 수 있지만, 사실과 해설과 취재기사가 거의 일원화되어 있는(나카무라, 1997) 일본 신문에서는 흔한 일이 아닐 것이다. 마이니치는 서서히 자의적 검정 프레임에 수렴되어 이번 사건 보도를 끝냈다. 마이니치의 이러한 변화는 검정제도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모임’이 만들어 낸 교과서를 수용한 일본사회의 변화의 두 가지를 그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마이니치는 모임의 교과서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수정된 역사”를 담은 교과서를 수용한 일본사회에게도 비판의 눈을 돌린 듯하다.

제3기의 산케이 신문은 회답에 대한 한·중 양국의 반응에 대해 내정간섭 프레임(H)이 나타났으나 곧 자율성 회복 프레임(D)으로 다시 수렴되었다. 자율성 회복 프레임이 나타난 기사를 보니 거의 ‘모임’ 교과서에 대한 반대운동을 비난하는 기사이었다. 또는 이러한 반대 단체들의 압력을 배제한 ‘정상적’인 채택작업 실현을 호소하는 기사이었다. 반대운동에 관한 비난 기사는 8월 중순 채택작업이 끝난 후에는 ‘모임’ 교과서를 선택한 학교 또는 교육위원회에 대한 평가 기사로 변화했다. 그래서 이 시기의 해설기사는 ‘모임’ 교과서가 채택되지 않았던 그 배경에 대한 해설, 즉 반대운동의 정당성을 호소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연말이 되면서 산케이는 시민단체의 반대운동을 ‘좌익 반체제’ 운동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이번 역사교과서 문제 관련 보도를 끝냈다. 이번 분석

기간 내에 나타난 내정간섭 프레임(H)은 모두 다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외국의 일본 비판에 대한 것이었다.

요미우리는 일본정부의 수정 회답 이후에는 문화개방 중단 등 한국의 일본 비판에 대해 내정간섭 프레임(H)이 나타났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자율성 회복 프레임(D)으로 수렴되었다. 요미우리는 한국정부에 의한 일본문화 개방 중단을 전달하면서 1998년 이래 좋은 관계에 있던 한·일간 사이가 끝났다고까지 했다. 그러나 그 후 한국 미디어가 문화개방 중단을 비판하거나 또는 ‘모임’ 교과서의 낮은 채택 율을 평가하는 등 갈등 해소를 시도하는 듯한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되자 그것을 동조하듯이 논조를 서서히 진정시켰다. 마지막으로 한·일 공동 역사연구에 관한 기사로 이번 사건 보도를 끝냈다. 요미우리는 한국과 중국의 일본 비판에 대해서는 심하게 반박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산케이처럼 ‘모임’ 교과서의 채택을 권장하는 것도 아니었다. 8월 2일의 사실 “교과서 채택 ‘어린이를 위한’ 관점을 관철했나?”(讀賣8/2)에서는 채택 현장의 혼란을 소개하고, ‘모임’ 교과서를 추진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쌍방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3기에는 한·중 양국의 수정요구에 대한 일본정부의 회답과, 이것을 불만으로 한 한국의 일본문화 개방중단 처지의 두 가지 갈등이 있었다. 다음 절에서는 이들 두 가지 사건에 대한 각 신문의 프레임 변화를 살펴 보기로 한다.

① 수정 요구에 대한 일본정부의 회답 (7/9)

한·중 양국에 있어서는 일본정부의 “근·현대사에서는 수정할 것이 없다”는 회답은 마치 수정 거부와 같아서 결코 용인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일본 신문들은 회답에 대한 한·중 양국의 반발을 예상하고, 정부 발표와 동시에 각기 사실 등에서 주장하는 바를 비력했다. 아사히 신문과 마이니치 신문은 표제를 “정정(訂正) 개소는 2개소”로 조사 결과가 기대 못한 것이 되었다는 것으로 한·중 양국의 반발을 예상했다. 산케이 신문과 요미우리 신문은 둘 다 9일의 석간 1면에서 “근·현대사에 잘못이 없음”란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했다. 문과성이 역사교과서의 기술을 인정하고 근·현대사에는 문제 없다고 한 것은 산케이와 요미우리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것이었다. 다음 페이지 표22

는 7월 9일 석간과 10일에 걸쳐 게재된 각 신문의 관련기사의 제목과 프레임의 분포이다. 이번의 한국의 대일 정책에 대해서는 각 신문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표22> 한국정부의 수정요구에 대한 일본정부 회답

2001/7/9 플레임		기사 제목
아사히	A	韓中要求, 대부분 물리 치다 日本側回答에 반발 歴史教科書問題
	A	▲ 韓國, 98年以前로 관계후퇴, 中國 '強烈한 유감'
	A	日本語教師養成을 支援 教科書問題로 關係修復策, 우선 韓國에 提示
	A	歴史解釋, 과고들지 않다 教科書修正로 文科省, 당초 姿勢를 관철
	A	[사설] 本格的인 역사 대화를 教科書問題 (7/10)
	A	[해설] 방침없는 아시아 외교 반응, 予想外 歴史教科書問題 (7/10)
산케이	G	歴史教科書問題修正要求問題 近現代史에는 '오류'없다 中韓에 政府回答
	G	▲ 여당 3 幹事長, 韓國外相과 회담 '대응의 한계' 강조
	H	[해설] 【視点】 歴史教科書修正要求問題 冷靜, 타당한 조사결과
	F	教科書修正要求, 政府回答 '國民도 當惑으로 失望' 韓國外相, 강한 거부감
	H	▲ '검정의 취지 지켰다' 만드는 모임 西尾會長
	D	▲ 國內 批判도 '論破' 慰安婦, 記述 구하지 않음
	G	▲ 正確性을 遠山敦子 文科科學相의 이야기
	H	▲ 中國, 再修正을 要求
	H	教科書修正, 政府가 回答 韓國 '遺憾'
	H	[사설] 【主張】 教科書回答 修正要求拒否은 타당하다 '선물'이란 고식 하다
마이니치	A	歴史教科書 '訂正必要'은 2개소 文科省의 回答에 中韓 반발
	A	▲ 韓國, 中國 둘 다 '받아들이지 못한다'
	G	[해설] 歴史教科書問題·修正檢討結果 검정제도를 따라 해석 과고들지 않다
	A	▲ 與党幹事長이 訪韓, 韓國外相과 會談
	A	歴史教科書問題 追加修正없으면 對抗措置 - 韓昇洙·韓國外相
요미우리	A, G	[사설] 歴史教科書 未來志向으로 향하는 한 거름으로
	D, G	歴史教科書問題 近現代史 '오류 없다' 修正要求한 中·韓에 回答 / 政府
	H	▲ 中韓, 심하게 반발
	G, H	[해설] 政府回答 中韓의 修正要求에 法 내에서 最大限 대응
	D	[칼럼] 【編集手帳】 教科書問題契機로 相互理解를 (7/10)
	G	歴史教科書問題 '予想以上 심한 반발' 政府 '끄준히 설명' (7/10)
	H	▲ 韓昇洙·韓國外相, 對抗措置를 示唆 (7/10)
	H	▲ 中國이 '실제 행동'을 要求 (7/10)
D, H	[사설] 歴史教科書 誠意 다한 回答에 理解 求하라 (7/10)	

아사히 신문은 일관되게 자의적 검정 프레임(A)이 나타나서 한·중 양국과의 관계 악

화를 우려했다. 사실 “본격적인 역사 대화를”(7/10)에서는 현행 검정제도의 대응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임’ 교과서의 재수정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했다. 아사히는 수정은 못하니까 그 대신 역사 공동연구 등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러한 태도는 지금까지의 정부나 야당 민주당의 주장과 똑같은 것이다. 즉 小泉(고이즈미) 수상이 주장하는 “역사교과서 문제 같은 가시 돌친 문제가 아니라 보다 대극(大局)적인 견지에서 관계 개선도모하고 싶다”(朝日7/9)는 것을 말을 바꿔서 반복하는 것이 되어 있다. 또한 해설기사 “방침이 없는 아시아 외교”(7/10)에서는 교과서문제를 해결 못한 것을 이제 외교 정책의 실수로 보는 관점이 되어있다.

아사히는 “과거의 침략이나 식민지 지배란 사실로부터 눈을 돌리게 하는 운동이 반복해서 일어나다가 그것을 용인하는 공기가 점차 일본 사회에 퍼지고 있다”(7/10)고 일본사회의 변화를 지적하는 데에서는 종래와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아사히의 이번 사건 관련 기사에서는 역사교과서 문제의 요인이 되어 있는 검정제도의 시비를 묻는 언급이 사라졌다. 그렇다고 해서 마이니치 신문처럼 검정제도의 이해를 요구한다 등의 명확한 주장으로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레임의 변화로 나타나지 않았다.

마이니치 신문은 자의적 검정 프레임(A)을 기조로 하고 있지만, 사실 “미래 지향으로 변하는 한 걸음에”(7/10)에서는 검정의 이해 요구 프레임(G)이 나타나고, 아사히보다 명확하게 현행 제도로는 더 이상 대응 못한다는 것을 어필했다. 역사교과서 문제의 근본은 “역사 인식의 틈에 있다”고 지적하고, 역시 한·중 양국과의 역사 공동 연구 등 대안을 제시했다. 마이니치는 검정제도는 국가가 검정 합격한 책의 역사관을 인정한 것이 되니까 근린 국가들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을 일으킨다고 한다. 그래서 국민의 이성과 견식을 신뢰하고 교과서제도는 ‘자유 발행’과 ‘자유 채택’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검정제도를 역사교과서 문제의 요인으로 보는 것이며, 아사히가 일본정부의 역사인식에 대한 의의(疑義)와 왜곡된 역사를 수용한 일본사회에의 불신감을 문제의 요인으로 본 것과 차이가 나타났다. 마이니치는 그 후 “한가지 교과서에 좌지우지 되지 말자”(7/15) 라고 하는 사실을 게재해, 검정에 합격한 한 수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국정부에는 일본의 교과서 행정을 정중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마이니치의 경우 검정의 이해 프레임이 기초가 된 자의적 검정 프레임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갈등의 원인은 일본에 있다고 하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고 한·중 양국에 양보를 요구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산케이 신문은 거의 반수의 기사에 내정간섭 프레임(H)이 나타났다. 문과성이 근·현대사에서 지적 받은 부분의 수정을 거부한 것은 국가가 ‘모임’ 교과서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 된다. 나아가서 이것은 일본의 근·현대사에 문제없다는 것이 되는 것으로 산케이는 사설에서 “수정요구 거부는 타당하다”(7/10)는 주장을 하였다. 한·중 양국의 수정요구는 양국의 역사관의 일본에 대한 강요이며, 이러한 내정간섭에 대해서는 의연한 외교 자세가 중요하다고 종래와 같은 주장이었다. 수정요구의 배경에 관해서는 한국정부가 한국 미디어의 비판 캠페인에 밀린 결과라고 하여, 말기를 맞이한 김대중 정권의 지도력 저하라고 하는 도식에서 설명했다. 그리고 김대중 정권도 종래 한국 정권과 같이 일본비판이란 안이한 길을 선택했다고 비난했다(7/9). 또 해설 기사 제목에서 위안부 기술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했다는데, 이것은 위안부 문제가 제3차 역사교과서 문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슈인 것을 참작할 수 있다¹⁰⁸.

요미우리 신문 역시 내정간섭 프레임(H)이 중심이 되었다. 산케이와 똑같이 7월 9일 석간 1면에서 “근·현대사에 오류는 없다”고 강조했다는데, 이것은 역사교과서에 문제없다는 것보다 일본의 근·현대사에는 문제없다고 하는 주장이 되어 있다. 또한 요미우리는 “검정은 집필자의 역사인식이나 역사관의 시비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7/9)라고 하는 정부 주장¹⁰⁹을 그대로 게재하고 일본정부의 수정거부를 지지했다¹¹⁰.

② 한국정부가 日本文化 개방 중단을 결정 (7/13)

¹⁰⁸ 이 ‘중군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는 연구문제 3에서 자세히 논의하겠다.

¹⁰⁹ 요미우리는 “교과서검정은 집필자의 역사인식이나 역사관의 시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기술 외에는 정정이나 가필을 요구할 수 없다”(讀賣7/9)라고 정부 주장을 기사화했다. 그러나 역사기술이란 집필자의 역사인식이나 역사관이 반영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 ‘잘못된 기술’이라고 하는 근거가 어떤 것인지를 묻는 기사는 전체 분석 기간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다.

¹¹⁰ 이렇게 요미우리와 산케이가 일본의 근·현대사에 문제없다고 하나같이 강조하는 이유는 1990년대를 통해 ‘중군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아시아 근린 국가에게서 계속 비판 당한 것이 요인이 되었는지 모른다.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회답을 불만으로 하여, 일본문화 개방 중단을 결정했다. 이것에 대해 일본 신문들은 다양하게 반응을 보였다.

<표23> 한국정부가 일본문화 개방 중단

2001/7/13	기사 제목
아사히	A 韓國政府, 日本文化開放을 중단 教科書問題에 對抗策 本格化 A [해설] 삐걱거리는 日韓 日本의 歷史教科書 둘러싸 關係가 緊張 (7/14)
산케이	H 歷史教科書修正問題 韓國이 ‘報復措置’決定 日本文化의 規制解除 중단 H 韓國 對抗措置 教育交流까지 再검토 文化·防衛에 이어서(7/14)
마이니치	A 歷史教科書問題에 對抗, 日本文化의 開放 중단- 韓國政府- A 歷史教科書 再修正을 否定- 福田 官房長官- A [해설] 歷史教科書問題 韓國국회, 보조 맞추지 못해 여당 對立 A, G [사설] 日韓摩擦 教科書로 휘둘리지 말아 (7/15)
요미우리	H 韓國이 日本文化의 開放停止 教科書問題에 對抗措置 自衛隊와의 交流도(7/12) H 歷史教科書問題 崔 韓國大使, 福田官房長官로 再修正檢討 求한다 G [해설] ‘教科書問題’막다른 골로 對日追加措置 구하는 소리까지 / 韓國 H ▲ 韓國, 日本文化開放 中단을 발표(7/13) H [해설] 韓國이對日措置 世論의 離反回避 金政權, 友好路線에 ‘막’(7/13)

아사히 신문은 자의적 감정 프레임(A)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어서 한국과의 관계 악화를 염려한 것을 알 수 있다. 해설기사에서는 김대중 정권의 대일 개방정책이 교과서 문제로 막혀, 일본의 수정 거부로 더욱 일본 비판을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마이니치 신문도 자의적 감정 프레임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해설기사에서는 문화 개방 중단이란 국면을 둘러싸고 한국 내에 갈등이 생기고 있다고 하고, 특히 중앙일보가 한국정부의 과도한 대일 대책을 비판한 것을 소개했다. 한국쪽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전달하면서 동시에 갈등 해소를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시사한 것이었다. 아사히와 마이니치는 감정제도를 시인하고 기술 수정을 거부했기 때문에 한국의 동향을 전달하는 데에 그쳤다.

산케이 신문은 자율성 회복 프레임(D)과 내정간섭 프레임(H)이 나타났다. 관련 기사 건수는 4가지 신문 중에서 가장 적었지만, 해방 중단을 전달하는 서울 지국으로부터의 스트레이트 기사는 “보복 조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국 정부가 차례차례로 대책을 새

우고 있는 것을 보도했다. 이 기사는 “개방 중단은 한국의 국내산업의 보호라고 하는 측면도 있다” 라고 하는 코멘트를 부연하고, 한국정부는 대일 비판을 국내 정책에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인상을 수용자에게 주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날 산케이의 조간 1면 기사는 栃木(도치기)의 공립(公立) 중학교가 ‘모임’ 교과서를 채택했다는 것이었다.

요미우리 신문은 7월12일의 석간 1면에서 개방 중단을 보도하고, 13일에 2건의 해설 기사를 게재했다. 내정간섭 프레임(H)이 나타난 해설 기사는 서울 지국으로부터의 현지 보고로, “우호 노선에 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일 관계의 중단을 시사했다. 1998년의 공동선언에 의해서 한·일 관계는 많이 진전했지만 한국정부의 태도 변화에 의해서 “우호 노선은 사실상, 마지막을 고했다”라고 하는 인식이었다. 김대중 정권은 경기 회복의 지연이나 ‘의약 분업’으로 국민의 정권에의 불신감이 확대하고 있으며, 게다가 한국 미디어와는 세무 조사로 대립이 깊어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강경한 대일 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이후 요미우리는 자율성 회복 프레임으로 수렴되어, 소극적이거나 갈등 해소를 향해 갔다. 7월 27일의 기사 “한국의 억제 자세에 희망”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감정적인 대응이나 불필요한 분야에서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발언을 소개하고, 8월에는 한국인에 대한 일본 비자 발급 건수가 과거 5년간에서 가장 많았다(8/22) 등의 연성뉴스를 게재했다. 이 시기에 산케이가 채택 반대운동을 비판하는 기사를 집중적으로 게재한 것에 비교해서 요미우리는 ‘모임’ 교과서의 채택 율이 낮은 것을 평가하는 한국 외무부 장관(8/21)과 한국정부의 견해(8/25)를 전달하는 등 서서히 갈등 해소를 도모하는 모습을 보였다.

3. 소결

연구문제 ②에서는 ‘모임’ 사건 관련 보도에서 4가지 신문을 비교했다. ‘모임’ 사건은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편집하여 검정 신청한 교과서 ‘새로운 역사교과서’의 자국 중심적인 기술 내용이 문제가 된 사건이었다.

아사히 신문은 ‘모임’ 사건을 우파 역사 왜곡 집단에 의한 역사 왜곡으로 간주했다. 아사히는 ‘모임’ 교과서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보도하고, 이러한 교과서를 낳은 일본의 사회적 분위기(우경화)를 우려했다. 아사히의 기조는 보수파 세력에 의한 역사 왜곡을 문제시하는 자의적 검정 프레임인 것에 변화는 없지만, 비판의 대상을 ‘모임’으로 한정하고, 문과성 혹은 검정제도에의 언급은 피하려고 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검정제도에 대해서는 문제는 많지만 현실에 기능하고 있는 제도로 시인하여, 한국의 수정요구는 제도상 무리가 있다고 하는 이유로 거부했다. 검정의 자의적 운용을 문제시하는 아사히는 제도의 규정을 무시한 개입을 불가피하게 하는 수정요구는 받아 들이기 힘들었다.

또한 ‘모임’ 교과서의 역사관에 대한 다양한 소스들의 비판담론을 소개했지만, 한·중 양국이 가장 문제시한 ‘중군위안부’ 기술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번 ‘모임’ 사건은 말하자면 위안부 기술에 대한 보수파의 ‘거부 운동’이었으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사실 등에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사히의 변화를 말없이 말하고 있다. 아사히는 한국 정부의 역사 인식 비판에 적극 동의 한다. 그러나 비판의 대상은 ‘모임’이며, 일본 사회의 역사관을 문제시하는 것에는 소극적이었다. 또 검정제도가 역사교과서 문제를 낳는다고 하는 주장도 지 직인의 기고 기사에서 볼 수 있는 뿐, 아사히 입장에서 이러한 주장이 없었다. 아사히는 자의적 검정 프레임 안에서 비판의 대상을 나누는 작업을 한 것 같았다.

마이니치 신문 역시 이번 사건을 ‘모임’이란 보수파 집단에 의한 역사 왜곡 사건으로 간주했다. 그리고 아사히와 같이 이러한 교과서의 검정 통과를 가능하게 한 일본 사회의 변화에도 주위를 기울였다. 마이니치 역시 한국 정부의 수정 요구에는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일본 비판을 일본 사회의 역사 인식의 문제와 연관 지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과의 교류를 제안하는 면도 보였다. 그것은 일본사회에 ‘모임’ 교과서와 같은 것을 요구하는 층이 적지 않은 규모로 존재하는 것을 인정한 결

과이다. ‘모임’ 교과서에 대한 비판은 오히려 소극적이고, 채택 결과에 일본 사회의 민주적 사회로서의 성숙도가 나타날 것으로 여겼다. 마이니치는 아사히와 달리 검정제도의 폐지를 시야에 넣고 개선을 주장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선택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태도이다. 그러나 지금의 일본은 우파도 좌파도 검정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¹¹¹ 마이니치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 들여지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또한 마이니치 역시 위안부에 관한 언급이 거의 없었다. 진보적 입장에 있는 아사히와 마이니치 둘 다 ‘중군위안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위안부 기술에 관한 그동안의 일본사회에서 일어난 변화의 심각함을 참작할 수 있다. 아사히와 마이니치는 기초가 된 자의적 검정 프레임 안에서 요동하고 있지만, 그 요인은 일본 사회의 ‘우경화’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된다.

산케이 신문에 있어서 ‘모임’ 사건은 일본의 ‘좌익 미디어’의 외압 유도 보도에 편승한 한국이나 중국에 의한 일본 비판 사건이었다. 한국의 일본 비판의 배경은 김대중 정권 말기의 국내 사정이며, 한국 미디어의 反日 캠페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부터의 보도로 일관되었다. 한·중 양국에 대한 검정제도의 이해 요구는 양국의 국정 교과서 체도를 구태 의연한 비민주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비판을 내포한 것이다. 또 산케이 신문에 있어서 ‘모임’ 교과서는 일본의 검정제도가 낳은 역사 기술의 ‘밸런스가 잡힌’, 일본의 역사교육을 풍요하게 하는 바람직한 교과서였다. 산케이는 연초부터 ‘모임’ 교과서의 채택 지원을 위한 논진을 펴서, 지면을 이용해 ‘모임’의 활동과 ‘모임’ 교과서를 홍보했다. 자율성 회복 프레임에 의한 대량의 기사는 대부분 ‘모임’ 교과서 관련 기사이었지만, ‘모임’ 교과서에 대한 비판은 채택 작업에 선입관을 준다고 하는 이유로 비난하고, 채택 반대운동은 ‘좌익·반체제 운동’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기사화되었다. 한·중 양국의 교과서 비판이나 수정요구를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하여, 검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갈등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 인식이었다.

요미우리 신문은 자율성 회복 프레임과 내정간섭 프레임의 두 가지에 집중되어 있어서, 산케이 신문보다 더욱 한·중 양국과의 대결 자세를 선명히 했다. 갈등의 원인은 한·

¹¹¹ 검정에 대해 반대 입장이던 사민당(社民黨)이 문과성에 ‘모임’ 책에 대한 검정 강화를 요청했다(産經3/24). 지극히 아이러니컬한 사건이었다.

중 양국이 국정교과서 제도를 채용하는 것에 기인하는, 일본의 검정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요미우리에 의하면 국정교과서의 사용에는 국가 사관에 의한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으며, 국가는 교과서의 기술 내용을 일의(一義)로 규정한다. 이러한 국가에는 언론의 자유도 출판의 자유도 없다, 검정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것은 보다 민주화 된 사회의 증거이다라고 하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태도는 검정제도는 물론 일본의 근·현대사에 문제는 없다고 하는 전제에 선 것이며, 요미우리의 지면에서는 역사기술이나 역사인식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볼 수 없었다. 문과성이 한·중 양국의 수정요구에 대해 일본 역사교과서의 ‘근·현대사’ 기술에 오류는 없다고 회답한 것을 요미우리는 ‘일본의 근·현대사에 잘못이 없다’고 들었을지도 모른다. 요미우리 신문에 있어서 ‘모임’ 사건은 1990년대의 ‘중군위안부’ 문제에 계속된 근린 국가들에 의한 일본의 근·현대사에 대한 간섭이며, 일본인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외환(外患)’이었을지도 모른다.

IV-3. 연구문제 ③ : 제1차, 제2차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 일본 신문들의 보도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일본사회가 문화적, 경제적으로 고양하던 시기인 1986년에 비해 2001년은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형용된 장기불황과, 냉전 구조의 변화와 세계화라고 하는 세계 수준의 변화를 경험하며 간신히 맞이한 21세기이었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세계는 격변했고, 일본사회 역시 그러한 변화로부터 무관할 수는 없었다. 연구문제 ③은 제2차와 제3차 역사교과서 문제의 분석 결과를 비교하고, 4가지 신문이 어떠한 통시적 변화를 보였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두 가지의 역사교과서 문제

1986년의 ‘지키는 회’ 사건은 교과서의 ‘침략’ 기술을 혐오하는 단체가 자기들의 주장을 담은 교과서를 편집하고 검정 신청한 데에서 일어났다. 1982년의 ‘오보 사건’에 의해 검정 조항에 추가된 ‘근린조항’은 교과서의 ‘침략’ 기술을 수정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보수파 집단이 교과서를 편집하고 검정 신청한 이번 사건은 그때까지 검정의 자의적 운용을 비판해 온 아사히와 마이니치 등 진보적 입장의 비판담론을 무효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우파의 교과서에 대한 검정 강화라고 하는 형태로 일어난 이 사건은, 우파도 ‘자의적 검정’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었기 때문이었다.

2001년의 ‘만드는 모임’ 사건은 교과서의 위안부 기술을 혐오하는 단체가 위안부 기술이 없는 교과서를 만들어서 검정 신청한 데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종군위안부’ 징용에 관한 일본군의 관여와 강제성을 일본정부가 1993년에 인정했는데, 그러나 그 후 국회위원 단체나 현대사 연구자 등에 의해 역사적 근거가 애매한 채 ‘외교적 배려’에 의해 인정한 것이더라고 결정지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수정된 역사’를 일본사회가 수용한 것이 아사히와 마이니치 등 진보적 입장의 역사교과서 문제 비판을 어렵게 만들

었다. 2001년의 ‘만드는 모임’ 사건은 1990년대 후반의 일본사회를 흔든 위안부 문제에 대한 보수파에서부터의 ‘중지부’이었다고 볼 수 있다.

자의적 검정 프레임은 교육 현장에 있어서의 이데올로기 대립 안에서 좌파에 의해서 양성된 담론의 집합이다. 1955년의 ‘제1차 교과서 공격’이나 1970년 말의 ‘제2차 교과서 공격’ 등을 거치면서, 항상 보수파로부터의 압력에 대해서 기능 하도록 조정되어 왔다. 이 프레임은 검정 기준이 그 때마다의 사회적, 정치적 요구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문제시하여, 이러한 변화를 가리키며 ‘자의적 운용’이라고 비난해 왔다. 그러나 이 프레임은 ‘우파’를 ‘좌파’로 옮겨놓는 것만으로 우파(보수파)에게도 설득력이 있는 ‘검정의 자의성’ 비판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1986년의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¹¹². 즉 1986년의 ‘지키는 회’ 사건 이후는 ‘자의적 검정’이나 ‘역사 왜곡’이라고 하는 담론은 좌파(진보파)의 독점물은 아니게 되어, 이 프레임의 “자의적 검정에 의한 역사 왜곡”이라고 하는 좌파의 비판 담론이 설득력을 잃게 된 것이다. 그리고 검정제도는 오랫동안 진보적 입장이 만든 ‘편향’ 교과서에 압력을 가하는 데에 기능 해 왔는데, 그러나 1986년 ‘지키는 회’ 사건 이후 우파의 교과서에 대해서는 검정을 실시하되, 내용을 감수하여 합격시키는 기능으로 결과적으로 변질했다.

다음에, 역사를 왜곡하는 수법에는 ‘지키는 회’와 ‘만드는 모임’에서 큰 차이는 없었지만, 고쳐 쓴 역사 기술에 신빙성을 부여하는 방법에 큰 차이가 있었다. ‘지키는 회’는 ‘천황제’를 중심으로 하여 전쟁의 침략성과 가해성 인정을 기피하는, 전후의 이데올로기 대립에 있어서의 보수파의 헤게모니, 바로 그것이었다. 그래서 일본사회 전체가 인정한 것이 되기 힘들었다. 그러나 ‘만드는 모임’의 그것은 “특정의 사실에 대한 실증을 거점(据占)으로 하고 문맥을 바꿔 읽는” 역사 수정주의의 수법으로 행해졌다(安丸, 2001). 이것에 의해서 ‘만드는 모임’은 극히 찌그러진 “새로운 역사”에 신빙성을 부여했고, “국가 중심적인 질서의 재구축에 의한 심리적 구제”(Morris-Suzuki, 2001)를 요구하는 일본사회는 이것을 기꺼이 수용했다. 그 결과 예를 들어 ‘중군위안부’는 국가가 군의 관여

¹¹²실제로 산케이 신문은 ‘지키는 회’ 사건에서 “[...]검정 규칙에 반한다. 쓰게 하는 검정의 실태가 나타나 있다” (산케이1986/7/3) 라고 하는, 아사히나 마이니치와 완전히 같은 말로 문부성을 비난하여 ‘지키는 회’ 교과서를 옹호 했다.

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에 의한 ‘의사 사건’으로 재정의된 것이었다. 즉, 일본사회는 1990년대를 통해서 국가 전체가 “자부심과 자율”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말하자면 일본사회 전체가 자율성 회복 프레임으로 이행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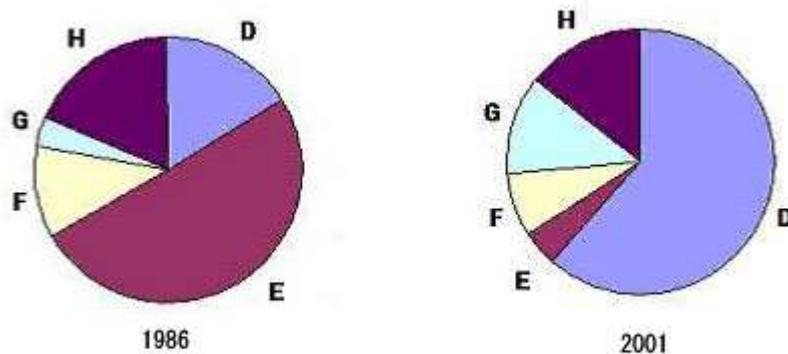
이러한 사회변화를 거치면서 4 가지 신문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산케이 신문과 요미우리 신문을 먼저 논의한다. 현저하게 프레임을 변화시킨 산케이 신문과 요미우리 신문을 먼저 보는 것을 통해 아사히 신문과 마이니치 신문이 왜 프레임이 변화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보다 명확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 4가지 신문의 변화

① 산케이 신문

산케이 신문의 특징은 1986년에 비교해서 2001년에는 자율성 회복 프레임(D)과 검정의 이해 요구 프레임(G)이 현저하게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내정간섭 프레임(H)이 미증하여, 이것들에 반비례하여 1986년에 가장 많았던 외교의 희생물 프레임(E)이 격감했다.

Fig. 1 산케이 신문의 프레임 변화



현저하게 증가한 자율성 회복 프레임(D)이 나타난 기사가 언급한 것은 연구문제 ②

에서 본 바와 같다. 그것은 검정과 채택 제도의 공정한 운용 노력 주장, ‘모임’ 교과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나 채택 지원, 그리고 ‘모임’ 교과서에 대한 비판이나 채택 반대운동에 대한 비난·반론 등이었다. 1986년의 ‘지키는 회’ 사건에서는 검정제도의 공정하고 엄격한 적용이라고 하는 기사에서만 자율성 회복 프레임이 나타났으며, 당시 산케이는 ‘지키는 회’가 만든 교과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자세를 보이지는 않았다.

1986년에 과반을 차지하고 있던 외교의 희생물 프레임(E)이 2001년에는 뚜렷하게 감소한 이유는 의무성을 경계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1982년의 ‘오보’ 사건과 1986년의 ‘지키는 회’ 사건에서는 의무성이 문부성에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산케이는 이것을 “외압을 배경으로 한 내압”이라고 하고 비난해 왔다. 그러나 ‘만드는 모임’ 사건에서는 의무성이 문과성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없었고, 문부성을 따라 가는 자세를 보였다. 또한 일본 내 사회분위기가 의무성의 검정 개입을 허용하지 않았다¹¹³. 오히려 산케이 신문이 의무성에 대해 한·중 양국의 비판이나 요구를 내정간섭으로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촉구하는 기사에서 외교의 희생물 프레임(E)이 나타났다.

외압 유도 프레임(F)도 2001년에는 1986년의 반 정도로 감소했다. ‘지키는 회’ 사건에서는 일본의 ‘좌익’ 미디어가 부적절하게 문제를 확대시켰다고 하는 주장으로 나타난 프레임이다. ‘만드는 모임’ 사건에서는 이러한 주장과 동시에 한국 미디어가 자국의 국내여론의 통합을 목적으로 ‘반일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 주장에서도 나타났다. 그러나 이 프레임은 중국에 대해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검정의 이해 요구 프레임(G)은 3.5배 증가했다. ‘지키는 회’ 사건에서는 정부가 앞서서 검정 개입했기 때문에 이 프레임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만드는 모임’ 사건에서는 일본의 검정제도나 교과서 행정의 이해 부족이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기사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이 프레임이 지니는 ‘자문화 우월성의 강조’(이토우, 2000, pp.50-51)라고 할 수 있는 특성은 연구문제 ②에서 본 바와 같이 한·중 양국을 국정 교과서를 사용하는 “민족주의 고양기에 있는 국가” 라든가 “민주화가 아직 덜 된 국가” 등의 인상

¹¹³ 일본 사회의 변화는 “1982년의 사건에서는 정부는 국회의원을 한국에 파견했는데, 지금은 사정 설명을 가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 국내에서 내정간섭에 동조했다는 오해를 초래하기 쉽다”(毎日2001/4/4) 라고 하는 기사에서도 참작할 수 있다.

을 수용자에게 주는 것이었다. 내정간섭 프레임(H)은 0.8배 감소했지만, 검정의 이해 요구 프레임과 거의 동수이었으며 한·중 양국에 대해 거의 같은 건수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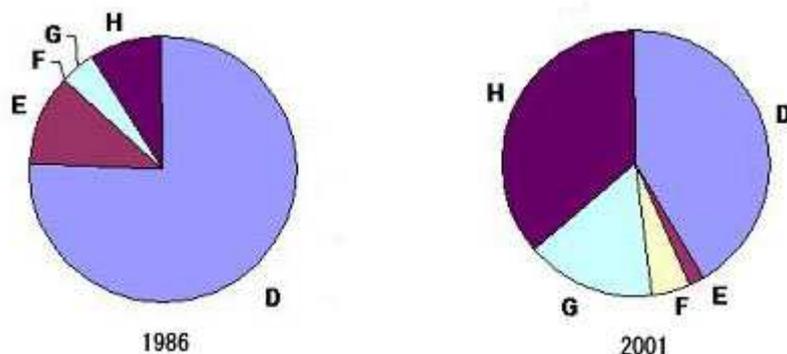
이러한 것으로부터 2001년의 산케이의 프레임 분포는 자율성 회복 프레임(D)으로 국내 여론을 통합, 한·중 양국의 대 일본 비판에는 내정간섭과 검정제도에의 이해라고 하는 두 가지 태도로 대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국내 여론 통합의 목적은 ‘만드는 모임’ 교과서의 채택 실적의 지원에 있었던 것이다.

이상 논의하듯이 산케이 신문의 프레임 변화는 일본사회의 변화라든가 한·중 양국의 비판 등의 외적 요인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고, ‘만드는 모임’의 교과서 채택을 목적으로 하다가 그때마다 일어난 반대운동 등의 사건들을 대처하기 위해 나타난 지극히 ‘전략적’인 변화인 것을 알 수 있다.

② 요미우리 신문

요미우리 신문은 자율성 회복 프레임(D)을 기조로 하고 검정제도의 유지를 전제로 해서 제도의 개선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1986년의 ‘지키는 회’ 사건 때는 과도한 검정은 교과서의 ‘국정화’를 초래한다고 하여 검정의 강화에는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만드는 모임’ 사건에서는 검정제도를 언급하는 기사는 거의 사라졌으며, 한국이나 중국의 수정요구의 수용은 검정제도를 손상시킨다고 해서 격렬하게 비난했다. 1986년과 2001년의 프레임 분포는 아래의 그래프와 같다.

Fig. 2 요미우리 신문의 프레임 변화



요미우리 신문의 통시적 변화의 특징은 역사교과서의 기술의 자율성 회복을 주장하는 자율성 회복 프레임(D)이 1986년도 비교해서 2001년에는 크게 감소하여, 외국의 기술 수정요구나 일본 비판을 내정에 대한 간섭으로 간주하는 내정간섭 프레임(H), 일본의 검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는 검정의 이해 요구 프레임(G)이 현저하게 증가한 점이다.

연구문제 ①의 분석결과에서 보았듯이 1986년의 요미우리는 ‘지키는 회’ 사건을 우발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지키는 회’와 문부성 쌍방이 새로운 검정규정에 대한 인식 부족이었다는 말로 마무리했다. 그래서 내정간섭 프레임은 ‘지키는 회’ 교과서에의 기술 수정 결과를 한국에 보고했다는 기사(1986/7/8)와 한국이 앞으로도 정확한 역사기술을 요구했다는 기사(1986/7/13)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은 교과서의 기술 내용을 결정하는 자는 어디까지나 일본이 주체가 된다는 주장에서 나타난 것이었다. 2001년에는 연구문제 ②에서 본 것처럼 역시 한국 관련 기사에서 빈번히 내정간섭 프레임이 나타났는데¹¹⁴, 이것은 한·중 양국의 일본비판과 기술 수정요구 등에 대한 반박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특히 한·중 양국이 역사왜곡의 사례로 ‘중군위안부’ 기술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을 때에 요미우리는 심하게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문제 ②에서는 본 바와 같이 요미우리는 자율성 회복 프레임의 특징인 국내여론의 통합을 도모하는 것보다 내정간섭 프레임과 검정의 이해 요구 프레임으로 한·중 양국의 교과서 비판에 대해 반박하는 것을 일삼았다. 그러한 모습의 배경에는 1990년대 후반 일본사회를 흔든 위안부 문제가 있었다.

‘중군위안부’ 문제는 1992년 이후 일본사회에서 다양한 갈등을 일으켰다. 1993년에 일본정부가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했음에 불구하고, 1997년에 보수파 국회의원 단체나 현대사 연구자, 저널리스트 등에 의해 ‘근거 없는 날조 사건’으로 다시 결론 지어졌다.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에는 일본정부가 1993년 이후 전쟁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행동을 거듭해 온 것에 대한 보수파 내의 반동이 있었다. 즉 “전쟁에 대한 반성”이 극히 ‘자학

¹¹⁴ 요미우리 2001년의 내정간섭 프레임의 건수는 전체 77개이었는데, 그 중의 46개(59.7%)가 한국에 대한 것이다. 산케이의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 프레임은 24개(28.8%)이었다. 요미우리는 한국에 대해 심하게 반론한 것을 알 수 있다.

적'인 “끝이 없는 사죄”로 변했다는 것이었다(産經2005/8/2). 교과서에서의 ‘중군위안부’ 기술은 그러한 ‘자학사관’ 중에서 가장 자학적인 것이 되었으며, 위안부 기술이 없는 ‘모임’의 책은 일본사회가 자존심을 되찾는 데에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요미우리는 한·중 양국이 위안부 기술이 없는 것을 역사왜곡이라고 비판하고 기술수정을 요구했을 때마다 강하게 반박한 것이었다(讀賣3/1, 讀賣3/2, 讀賣4/4, 讀賣5/9). 위안부 문제는 “냉전 체제가 무너지고 일본이 국가적 자립을 모색한 시기에, 그러한 국가로서의 형태를 근거로부터 묻는 관점”이었다(야수마루, 2001, p.77). 산케이와 요미우리는 ‘모임’ 교과서에 대한 비판은 그대로 일본 근·현대사에 대한 비판으로 간주되었을지 모른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일본의 장기적 경제 불안이나 급속히 전개하는 세계화와 냉전구조의 변화 등과 무관할 수 없다. 일본사회에는 서서히 존재감(presence)을 상실하는 듯한 불안감이 퍼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분위기와 위안부 문제는 아사히 신문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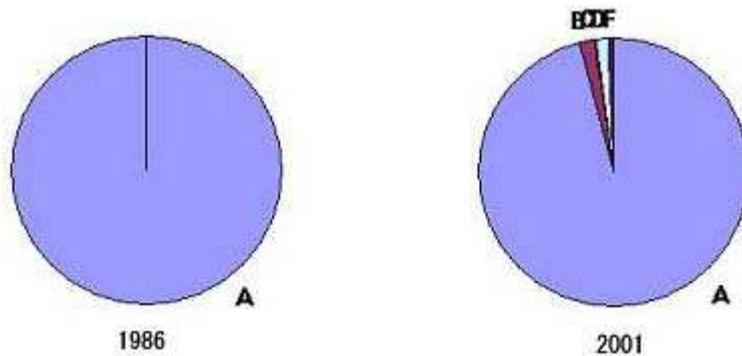
또한 요미우리는 검정의 이해 요구 프레임(G)이 역시 현저하게 증가했는데, 이 프레임에 관해서는 연구문제 ②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역사교과서 문제를 일본의 검정제도에 대한 오해나 인식 부족에서 오는 갈등으로 전화(轉化)시키는 기능을 발휘한다. 특히 요미우리는 중국의 일본비판에 대해 빈번히 나타났는데, 이 프레임이 내포하는 의미 역시 연구문제 ②에서 논의한 바 중국을 “덜 민주화된 국가”로 간주하기 위한 것이었다.

③ 아사히 신문

아사히 신문은 1986년과 2001년에서 크게 변화한 것은 없었으나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그것은 4개의 기고와 1개의 인터뷰 기사, 그리고 1개의 사설에서 위상 재정립 프레임(B)이 나타난 것이다. 또 해설 기사에는 사회적 이벤트 프레임(C)이 나타나서, 아사히가 일본사회의 변화에 결코 무관심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 ‘지키는 회’ 사건과 ‘만드는 모임’ 사건에는 몇 가지 큰 차이가 있다. 그 중에 하나는 자의적 검정 프레임(A)이 문과성의 검정제도를 비판하는 데에 설득력을 잃었다는 것이었다. 이 프레임은 보수파가 검정을 통해서 진보파의 교과서에 압력을 가하는

테에 대한 대항 담론으로 구성된 것이니 ‘지키는 회’ 사건이나 ‘모임’ 사건처럼 교과서의 기술을 들러싸고 보수파끼리 싸우는 데에는 그들의 어느 쪽도 비판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문부성(문과성)과 우파 단체를 동시에 비판하기 위해서는 검정제도의 폐지를 주장해야 했는데, 그러나 아사히는 검정제도를 시인하는 것을 선택했다.

Fig. 3 아사히 신문의 프레임 변화



아사히는 “검정제도의 의의(意義)를 일률적으로는 부정하지 않다”(2/22)고 우선 제도를 시인하고, “국가의 검정은 가능한 한 억제하고, 다양한 교과서가 있어도 된다”(4/4)고 1986년 당시의 산케이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검정의 물을 일탈하여 교과서 발행자에 재수정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5/9)고 한·중 양국의 수정요구를 거부하고, “현재의 검정제도 하에서는 수정에는 한계가 있다”(7/10)고 검정제도 상 수정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이 일련의 사실에는 검정제도의 비공개성을 문제시해도 검정의 자의성을 문제 삼는 글이 없었다. 이것은 자의적 검정 프레임을 기조로 하는 아사히의 한계를 보여 준 것이다. 한·중 양국처럼 문부성(문과성)과 일본정부 그리고 우파 단체를 모두 다 역사왜곡 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으면 철저한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아사히는 ‘모임’ 교과서의 자국 중심적 역사관을 중심으로 비판했다. 그러나 국가가 검정제도를 통해서 교과서를 선정하는 것이 바로 역사교과서 문제를 낳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는 언급이 아사히에는 없었다.

고쳐 쓴 역사 기술에 신빙성을 부여하는 방법에서 ‘지키는 회’ 사건과 ‘모임’ 사건에

서는 큰 차이가 있었다. ‘모임’ 사건에서는 어느 특정 史實에 대한 실증을 기점으로 해서 해당 역사 사상(事象)의 역사적 문맥 전체를 통설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져간다는(安丸, 2001, p.74) 방식인데, 이 방법의 가장 성공한 사례가 바로 ‘중군위안부’이었다.

위안부 문제는 전술한 바 일본정부가 일본군의 관여와 징용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스스로 교과서에 기술하겠다고 해서 1993년에 결착이 되었다. 그러나 1997년에 보수파 국회의원 단체에 의한 관계자에의 인터뷰 조사, 현대사 연구자에 의한 제주도에서의 현지 조사 등, 소위 역사 실증주의적 기법으로 위안부의 역사적 근거를 부정했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를 일본사회가 수용하고 산케이 신문은 ‘중군위안부’ 문제를 일본사회에서 쟁점화한 아사히 신문을 비판하기 시작했다¹¹⁵. 또한 요미우리 역시 위안부 문제를 일으킨 아사히를 원곡이 비난했다(讀賣2001/3/2).

아래 표24¹¹⁶은 2001년에 분석 대상이 된 기사 중에서 위안부를 언급한 기사 건수이다. 교과서에의 위안부 기술을 기피하고 삭제하라고 주장하는 산케이와 요미우리에 비해서 아사히와 마이니치는 위안부 문제를 거의 기사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사히가 산케이 신문에게서 비난 당했기 때문에 위안부를 언급하지 않았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아사히가 위안부 문제로 침묵한 배경에는 ‘모임’이 만들어 낸 역사를 수용한 1990년대 일본의 사회적 변화가 보다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¹¹⁷.

¹¹⁵ “[사설]파탄한 아사히의 위안부 보도, ‘강제연행’은 사라졌다”(産經1997/4/1) 등.

¹¹⁶ <표24> 2001년 샘플 중에 위안부에 관한 언급이 있는 기사 건수

2001	아사히	산케이	마이니치	요미우리
스트레이트 기사	3(1.3%)	22(5.1%)	3(1.3%)	11(7.1%)
의견기사	2(4%)	20(22.5%)	0	4(10%)

¹¹⁷ 1980년대에 시작된 우과 잡지에 대한 역사교과서 비판은 동시에 신문 비판이었다(吉見俊哉, 1998, p.202). 이것은 1982년의 ‘오보 사건’을 일으킨 신문 미디어에 대한 비판부터 시작한 것인데,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다양한 잡지 미디어에 의한 ‘신문 공격’으로 변화했다. 吉見俊哉(요시미 슌야)에 의하면, “80년대의 민족적인 담론은 전후의 점령과 안보체제 속에서 국가의 본질이 이미 상실되었다는 인식에 입각하고, 그러한 본질을 더욱 상실시키는 (그들이 생각하는) 미디어로서의 교과서와 신문에 맹렬한 반발을 노골적인 것으로 만들어 갔다”(ibid. p.204). 1990년대의 우경화는 남성 잡지나 사진 잡지 그리고 만화 등 다양한 잡지 미디어에 의해, ‘전후’ 라고 하는 담론 공간을 만들어 온 신문이나 교과서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자기 입장을 우위로 하려고 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광범위한 잡지 미디어에 의한 ‘민족주의’의 대량소비가 일어났다는 것이 1990년대 우경화의 특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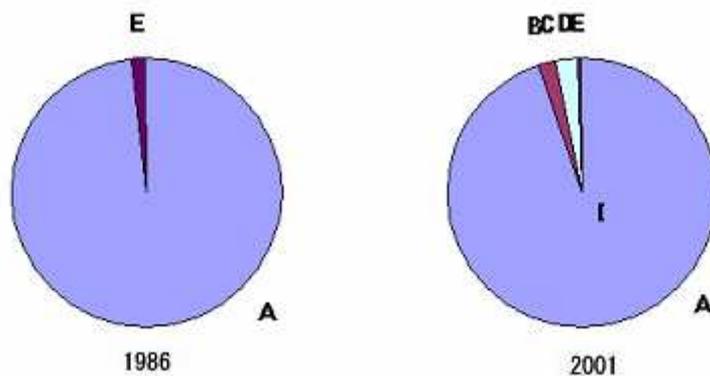
연구문제 ②에서 논의한 것처럼 아사히는 지식인의 기고나 인터뷰 기사에서는 역사 수정주의에 의한 일본의 정체성 재정립 프레임이 나타났으며, 결코 일본사회의 변화에 눈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사설 등에서는 종래 입장을 고수했다.

야당 제일당인 민주당(民主黨)은 3월에 당내에서 검정제도에 관한 논의를 가졌는데, “역사 인식에서는 한·중 양국 등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공통 인식을 가지는 것과 동시에, ‘내전 불간섭’도 확보할 수 있는 원칙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朝日3/7) 라고 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것은 ‘모임’과 그들의 교과서에 대해서는 비판적 태도를 취하지만, 검정제도를 시인하고 한·중 양국의 수정요구에는 제도상 불가능하다고 한 아사히의 태도와 일치한다.

④ 마이니치 신문

마이니치의 1986년과 2001년을 비교하면 건수는 많지 않지만 다양한 프레임이 나타났다. 특히 사설이나 해설 등 의견기사에 자율성 회복 프레임(D)이나 검정의 이해 요구 프레임(G)이 나타난 것이 같은 자의적 검정 프레임을 기조로 하는 아사히와 크게 다르다.

Fig. 4 마이니치 신문의 프레임 변화



마이니치 신문의 가장 큰 변화는 사실에다가 검정의 이해 요구 프레임(G)과 내정간섭 프레임(H)이 나타난 것으로 알 수 있듯이, 검정 과정이나 교과서의 기술에 있어서는 일본이 판단 주체가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산케이 신문과 요미우리 신문 등 자율성 회복 프레임을 기조로 하는 신문에 나타나는 프레임이다¹¹⁸. 마이니치의 경우는 자의적 검정 프레임을 기조로 하면서 거기에다가 검정의 이해 요구 프레임이나 내정간섭 프레임이 나타난 것으로, 갈등의 원인은 일본쪽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프레임의 분포는 검정 개입을 불가피하게 하는 수정요구를 수용 못한다는 주장에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마이니치는 1986년의 ‘지키는 회’ 사건에서는 검정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개선을 주장했으며, ‘모임’ 사건에서도 자유발행·자유채택으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면서 마이니치가 검정제도를 실제로 운용되고 있는 현행 제도로서 시인한 이유는 역사를 왜곡한 우파의 교과서를 수정하기 위해 검정에 의존하는 상황이며¹¹⁹, 또는 교과서 출판사가 문제가 될 것 같은 기술을 스스로 기피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더 이상 검정제도의 자의성을 비판해도 소용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인지 모른다. 그래서 마이니치는 일본사회의 민주주의의 성숙도가 어느 교과서를 선택하는가에 나타난다고 하고, 국민의 이성과 견식을 믿고 자유발행·채택을 주장했다(7/10).

또한 기자의 서명이 있는 해설 기사와 칼럼에서 자율성 회복 프레임이나 검정의 이해 요구 프레임이 나타난 것도 아사히에는 보지 못한 마이니치의 특징이었다¹²⁰. 기자의 서명이 있는 해설기사나 칼럼 등은 신문사의 전체 주장과는 논지를 다르게 할 수 있는데, 마이니치의 경우 이것은 검정제도의 시비를 묻는 개인적 견해 차이로 나타났다. 해당 기사는 ‘모임’ 교과서의 검정통과를 문제시하는 것보다 어느 교과서를 채택할까 하는 데에 일본사회의 성숙도가 나타난다는 주지이었다. 마이니치는 이제 검정제도의

¹¹⁸ 이들 신문들은 한·중 양국의 수정요구를 거부하는데 일본쪽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혹은 암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이 두 가지 프레임을 사용했다.

¹¹⁹ 검정에 대해 반대 입장이던 사민당(社民黨)이 문과성에 ‘모임’ 책에 대한 검정 강화를 요청했다(産經3/24).

¹²⁰ 아사히는 기자의 서명이 있어도 없어도 논조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마이니치는 이러한 종류의 기사에서 이따금 기조로 하고 있는 프레임과 상반되는 프레임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다.

기능을 우과의 교과서를 감수하여 통과시키기 위한 것으로 간주하고, 검정과정의 기술 수정에는 기대를 못 한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전술한 바 검정제도를 비판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야당이 ‘모임’ 교과서에 대해 검정 강화를 요청한다는 상황에서는 검정의 폐지라고 하는 생각은 사회적으로 동의를 얻기 힘들 것이다.

마이니치의 프레임 변화는 제3차 역사교과서 문제를 비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다. 교육에 있어서의 이데올로기 대립 속에서 조성된 좌파의 비판 담론은 우과가 교과서를 만들어서 검정 신청한 것으로 우과에게도 설득력 있는 검정 비판을 가능케 했다. 게다가 ‘모임’이 “수정한 역사”에 신빙성을 부여하는 방법은 역사 실증주의적 기법이며, 그리고 ‘모임’의 교과서를 반대하는 입장과 추진하는 입장의 쌍방이 “데모크라시나 자유주의를 자기주장의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朝日2001/5/30). 이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마이니치가 주장하고 아사히에 기고하는 지식인들이 권장하는 “검정제도의 폐지”이다.

V. 요약과 결론

미디어의 ‘현실 구성’에 관한 영향력은 이미 많은 연구들이 밝혀져 왔다. 본 연구는 그러한 선행 연구들의 성과에 힘입어 일본의 신문 미디어가 역사 교과서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재구성했는지를 프레임 분석을 통해서 보았다. 기트린에 의하면 미디어는 사회변화에서 영향을 받고 프레임을 변화시키는데(Gitlin, 2003, p269), 프레임의 변화는 어디까지나 지배적인 헤게모니와 상관적 관계에서 일어난다(ibid. p.12). 즉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지배적인 헤게모니의 원칙과 모순되지 않는 프레임을 생성하게 된다는 것이다(ibid. p.271).

1986년의 ‘지키는 회’ 사건과 2001년의 ‘만드는 모임’ 사건 사이에는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이 있다. 이것은 “근대를 초월하는 문화의 시대”(요시미, 1998, p.78)를 구가한 1980년대를 퇴색한 추억으로 만들고, “구미 제국이 아시아를 삼키려고 하던 제국주의 시대”를 상기시켰다. 급속한 세계화의 진행을 배경으로 한 내셔널리스트틱한 불안한 의식의 확대는(ibid. p.208), 정체성을 뒤찾기 위해 “자랑스러운 과거”를 담은 역사교과서를 낳았다. 어떤 신문은 이 “자랑스러운 과거”를 상기시키는 데에 열중하고, 또 어떤 신문은 그러한 “자랑스러운 과거”를 기꺼이 수용한 일본사회의 변화에 입을 머물렀다.

연구문제 ①은 1986년 ‘지키는 회’가 검정 신청한 교과서가 문제가 되어, 정부가 검정에 개입하여 기술 내용을 수정한 사건이었다. ‘지키는 회’는 검정제도가 좌파에 의해 약화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편향’ 교과서에 대한 대안으로 보수파의 이상을 담은 교과서를 펴낸 것이었다. 이것에 대해 각 신문이 각기 입장마다 다르게 프레이밍한 모습을 연구를 통해 확인했다. 아사히 신문과 마이니치 신문은 검정제도의 자의적 운용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이번 사건을 검정제도의 자의적인 운용이 낳은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사히와 마이니치가 문부성을 비판해 온 말과 똑같은 말로 보수파 신문이 문부성을 비판한 것은 진보 입장의 신문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검정의 자의적 운용”이란 말이 이제 좌파의 독점물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으로 이번 사건은 보수파가 만든 역사왜곡 교과서와 문부성의 자의적인 검정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검정제도에 대한 철저한 비판, 즉 검정제도의 폐지를 염두에 두고 비판해야 한다는 것

을 알리게 한 사건이었다.

문부성을 비판해야 할지 ‘지키는 회’를 비판해야 할 것인지 판단 못한 듯한 진보적 신문과는 달리 산케이 신문은 1982년에 이어서 이번 사건을 검정제도에 대한 심각한 간섭으로 간주했다. 그리고 외국의 압력을 수용한 것을 국가 주체성의 상실이란 말로 비난했다. 한·중 양국의 비판과 수정요구를 초래한 것이 일본정부의 치졸한 외교 정책에 기인한다고 비판하고, 동시에 ‘좌파’ 신문이 사건을 일으켰다고 아사히를 비난했다. 아사히와 산케이는 검정제도를 사이에 두고 대립하고 있는데, 그러나 둘 다 검정의 자의성을 비판하게 된 셈이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보수 입장이 검정제도의 자율성 회복을 주장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문부성이 한·중 양국의 수정요구를 거부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된 사건이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번 사건을 우발적인 사건으로 간주하여, 정부의 검정 개입을 시인했다. 그리고 ‘지키는 회’ 교과서를 번거롭게 돌려 비판했는데, 이것은 간접적으로 평가한 것이었다. 수정 결과에 대한 한국의 비판적 태도에 대해 생경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은 교과서문제는 국내문제이며 일본이 주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하는 주장이 드러난 것이었다.

연구문제 ②는 2001년에 ‘만드는 모임’이 편집해서 검정 신청한 교과서에 자국 중심적인 기술이 있어서 문제가 된 사건이었다. 아사히는 문과성의 자의적 검정이 만들어 낸 갈등이라고 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보였는데, 그러나 이번 사건은 ‘지키는 회’ 사건과는 달리 역사 수정주의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다루어야 할 사건이었다. 그러나 위안부 보도로 비판당한 아사히는 ‘모임’이 만들어 낸 역사를 수용한 일본의 사회 분위기에 침묵했다.

이번 ‘모임’ 사건은 교과서에의 위안부 기술을 기피하는 데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중군위안부’는 국회의원 단체나 일본현대사 연구자에 의해 부정되었기 때문에 알기 쉬운 사례가 되어, 여타의 역사 수정을 정당화하는 데에 많이 인용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수정된 역사’를 일본 사회가 필요로 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특징이었으며, 아사히와 마이니치가 침묵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마이니치 신문은 검정제도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데, 그러나 실제로 운용되고 있는 현행 제도로서 시인했다. 그 이유는 한·중 양국의 수정요구로 검정 개입이 일어났을 경우, 제도의 타당성 여부보다 큰 파동을 일으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지키는 회’ 사건 이후 검정의 자의성을 비판하는 좌파 담론이 설득력을 상실하다가, 출판사가 편집 단계에서 미리 문제가 될 수 있는 기술을 회피하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검정을 비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산케이 신문은 ‘모임’ 교과서의 채택을 지원한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프레임의 변화는 ‘모임’ 교과서에 대한 비판이나 채택 반대 운동을 비난하는 기사에서 나타났다. ‘모임’의 교과서는 올바르게 운용된 검정제도가 만든 바람직한 교과서이며, 일본의 역사 교육을 풍요로운 것으로 하는 교과서이다. 산케이에 있어서 역사 교과서 문제란 한국이나 중국이 각기 국내 사정에 의해 만들어 낸 사건이며, 검정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도 ‘만드는 모임’ 교과서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요미우리는 이번 사건을 오래 계속 된 위안부 문제에 종지부를 찍는 기회로 보았다. 위안부 징용의 강제성 인정은 여타의 ‘자학사관’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 전술한 바 다양한 거부 반응을 야기했다. 그래서 한중 양국의 일본비판에 대해서는 내정간섭 또는 검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것으로, 위안부 문제를 낳게 한 일본의 전쟁 책임이라든가 또는 역사 교과서 문제의 근본 원인인 검정제도가 지니는 문제성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지 않았다. 수정된 역사를 수용하고 동아시아에서 다시 자리매김하는 것을 우선했다고 볼 수 있다.

연구문제 ③은 1986년의 ‘지키는 회’ 사건과 2001년의 ‘만드는 모임’ 사건의 각 신문의 프레임 변화를 비교하여, 어떠한 통시적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았다. 분석결과는 산케이 신문을 제외한 각 신문의 프레임 변화에는 1990년대의 사회적 변화에서 많은 영향을 얻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역사 교과서 문제를 일본사회의 역사인식과 연관시켜서 언급한 신문은 1986년의 마이니치 신문 만이었다. 그리고 검정제도가 근린 국가들 사이에 갈등을 야기하는 근본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하는 신문도 마이니치를 제외하고는 없었다. 아사히는 검

정제도를 비판하지만 그것은 자의적인 운용을 문제시한 것이었으며, 검정제도가 역사 교과서문제의 요인이 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요미우리는 1986년에는 검정제도가 지니는 문제성을 지적하면서, 그러나 2001년에는 제도에 대한 언급은 지면에서 사라졌다. 약화된 일본사회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수정된 역사가 필요했으며, 검정제도는 원하는 대로 교과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산케이 신문은 사회가 요구하는 교과서를 만들어 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만드는 모임’과 산케이 신문, 그리고 문화 과학성과 ‘신진 의원의 회’ 등 보수파 집단 사이에서 어떤 합의가 있었다고는 생각 못하지만, ‘건전한 민족주의’를 고양시키기 위한 교과서를 구현화 한다는 것에서 각각의 목적이 일치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일본사회가 괴로운 현실을 완화하기 위한(Richter, 2003), 혹은 일본인을 괴롭히는 과거와 결별하기 위한 ‘새로운 신화’를 담은 교과서이었다.

한·일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생각할 때, 미디어의 역할은 지극히 중요하다. 미디어를 통한 한국에 관한 다양한 정보는 實在하는 한국과는 또 다른 ‘리얼리티’를 지니며, 우리 일본인의 韓國像을 형성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 1986년과 2001년의 사건을 통해서 역사 교과서 문제의 본질에 대한 언급이 일부 신문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다. 고도 정보 시대의 미디어는 정보의 양과 속도를 자랑할 일이 많으나 동시에 고도의 윤리관이 필요하다. 국가간에서 일어나는 갈등적 사안의 배경이나 문제의 본질에 대한 진지한 고찰과 언급 없이는 양국간의 올바른 바람직한 커뮤니케이션이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시대의 미디어는 과연 국익이나 외교 정책, 혹은 기업으로서의 이윤 추구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사회의 변화에 대해 얼마나 철저하고 진정한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이것이 지금 한·일간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하고 시급한 요구 사항이다.

참고 문헌과 인용 문헌

- Berelson, B. (1971) *Content Analysis in Communication Research*. New York: Hanfer Publishing Company.
- Chomsky, N. (1989) *Necessary Illusions*. Boston, MA: South End Press.
- Cohen, A.A.& Wolfsfeld, G. (1992) *Framing the Intifada*. Norwood, NJ: Ablex Pub.
- Cohen, B.C. (1963) *The Press and Foreign Polic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Entman, R. M. (2004) *Projection of Powe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ntman, R. M.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pp.6-27.
- Entman, R. M. (1991) "Framing U.S. Coverage of International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41(4), pp.51-58.
- Gamson, W. A. et. al.(1992) "Media images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Annual Review of Sociology* 18, pp.373-393.
- Gitlin, T. (2003) *The Whole World Is Watching*.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rippendorff, K. (2002)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CA: SAGE Pub.
- Lang & Lang (1984) *Politics and Television re-viewed*. Beverly Hills, Calif. SAGE Pub.
- 이동신 역 (1996) 『TV와 정치』 영풍문고.
- Lippmann, W. (1922) *Public Opinion*: Macmillan. 掛川トミ子역 (1987) 『世論』 岩波書店.
- MaCombs & Shaw (1976) "Structuring the Unseen Environment." *Journal of Communications*. Spring. 1976. pp.
- McQuail, D. (2000) *Mass Communication Theory*. (4th). CA: Sage Pub.
- Pan, Z & Kosicki, G.M. (1993) "Framing Analysis: An Approach to News Discourse." *Political Communication*.(10-1) pp.55-75
- Scheufele, D. A. (1999) "Framing as a Theory of Media Effects." *Journal of Communication*, pp.103-127.

- Silverstone, R. (1999) *Why study the media?* London. Sage Pub. 吉見俊哉訳 (2003)
『なぜメディア研究か』せりか書房.
-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The Free Press.
박홍수 역(1995) 『메이킹 뉴스』 나남출판.
- van Dijk, T. A. (1985) *News As Discourse.*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 Inc.
- 石田, 勝利(1995) “新聞の言説生産過程とマスコミ労働者の可能性：S・ホール / 稲葉三千男の議論を手がかりとして” 『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 47, pp.140-152.
- 伊藤, 陽一(2000) “ニュース報道の国際流津に関する理論と実証” 慶應義塾大学メディア・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所紀要 50, pp.45-62.
- 稲葉, 三千男 (1987) 『マスコミの総合理論』 創風社.
- 稲葉, 三千男・新井, 直之・桂, 敬一 (2000) 『新聞學』 日本評論社.
- 内川, 芳美・柳井, 道夫(1994) 『マスメディアと国際関係－日本・韓国・中國の国際比較』 學文社.
- 大石, 裕・岩田, 濤・藤田, 眞文(2000) 『現代ニュース論』 有斐閣アルマ.
- 大畑, 裕嗣(1988) “社會運動・マスメディア・受け手” 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 37, pp.83-97.
- 岡田, 直之(1992) 『マスコミ研究の視座と課題』 東京大學出版會.
- 小熊, 英二(1997) 『日本人の境界』 新曜社.
- 小熊, 英二・上野, 陽子(2003) 『癒しのナショナリズム』 慶應義塾大學出版會.
- 蒲島, 郁夫(1990) “マスメディアと政治” レヴアイアサン 7. pp.7-29.
- 烏谷, 昌之(2001) “フレーム形成過程に関する理論的一考察” 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 58, pp.78-93.
- 姜, 尙中・吉見, 俊哉(2001) 『グローバル化の遠近法』 岩波書店.
- 楠根, 重和 (1999) “マスメディアの對韓認識” 金澤法學 40, pp.101-149.

- 検証, 新聞報道編集委員会(1995)『検証「日韓報道」ペンの懸け橋』大村書店.
- 小森, 陽一 “つくる會教科書から日本の保守構造を読む”
<http://www.hansen-jp.com/209komori.htm>
- 小森, 陽一・高橋, 哲哉 (1998)『ナショナル・ヒストリーを超えて』東京大學出版會.
- 小森, 陽一・坂本, 義和・安丸, 良夫 編(2001)『歴史教科書 何が問題か』岩波書店.
- 佐藤, 卓己(2005)『八月十五日の神話』筑摩書房.
- 佐渡, 眞紀子(2003) “マスメディアの自国報道と受け手の自国イメージとの関連性”
ソシオロジスト 5, pp.207-228.
- 孫, 歌 (2002)『アジアを語ることのジレンマ』岩波書店.
- 高崎, 宗司(2002)『「妄言」の原形』木犀社.
- 竹下, 俊郎(1999)『メディアの議題設定機能』學文社.
- 田崎, 篤朗・兒島, 和人(1992/2003)『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効果研究の展開』北樹出版
- 俵, 義文(2002)『徹底批判「最新日本史」』學習の友社.
- 鶴木, 眞(1990) “マスメディアの国際環境監視機能と報道わく組み” 55, pp.94-109.
- 中村, 輝子(1990) “オンリー・イエスタデーの新聞” *レヴァイアサン* 7, 木鐸社, pp.115-127.
- 浪本, 勝年(1984) “戦後教科書制度改革の意義” *立正文學部論叢* pp.35-68.
- 日本の前途と歴史教育を考える若手議員の會編(1997)『歴史教科書への疑問』展轉社.
- 林, 健太郎(1987)『外壓に揺らぐ日本史』光文社.
- 原, 壽雄(1985) “新聞ジャーナリズムの現在” *新聞學評論* 35, pp.173-183.
- 日吉, 昭彦(2004) “内容分析研究の展開” *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 64, pp.5-24.
- 藤永, 壯(1998) “現代日本反動勢力の韓國史認識” *歴史批評* 3, pp.286-308.

- 別冊「世界」(2001)『歴史教科諸問題 未来への回答』岩波書店.
- 堀内, 孜(2002)“教科書制度と教科書問題”*京都教育大學教育研究所紀要* 11, pp.3-10.
- 三上, 俊治・椎野, 信雄・橋元, 良明(1989/2003)『メッセージ分析の技法』勁草書房.
- 村上, 義雄編(1986)『天皇の教科書』晩聲社.
- 門奈, 直樹(2001)『ジャーナリズムの科学』有斐閣選書.
- 安江, 良介(1988)“日本の新聞の韓国報道”*新聞研究* 446, pp.69-73
- 尹, 榮喆・李, 光鎬(2002)“日本と韓国の領有権紛争に関する新聞報道の内容分析”*慶應メディア
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所紀要* 50, pp.141-155.
- 吉岡, 至 (1988)“ニュースのアクチュアリティとその現実構成機能”*新聞学評論* 37, pp.181-195
- 李, 度珩 (1981)『日本の韓国報道は信じられない』エール出版.
- 李, 度珩 (1982)“日本の新聞社説に見る韓国観”*慶應大學新聞研究所紀要*, pp.47-81.
- 李, 相湖 (1992)“日本新聞の韓国報道傾向分析”*慶應大學新聞研究所紀要*, pp.123-141.
- 李, 光鎬 (1988)“メッセージ分析による送り手研究”*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 53, pp.53-64.
- 渡邊, 良智 (1990)“新聞の社説に見る朝鮮”*青山學院女子短期大學紀要* 44, pp.231-260.

Fig. 5 1986년 프레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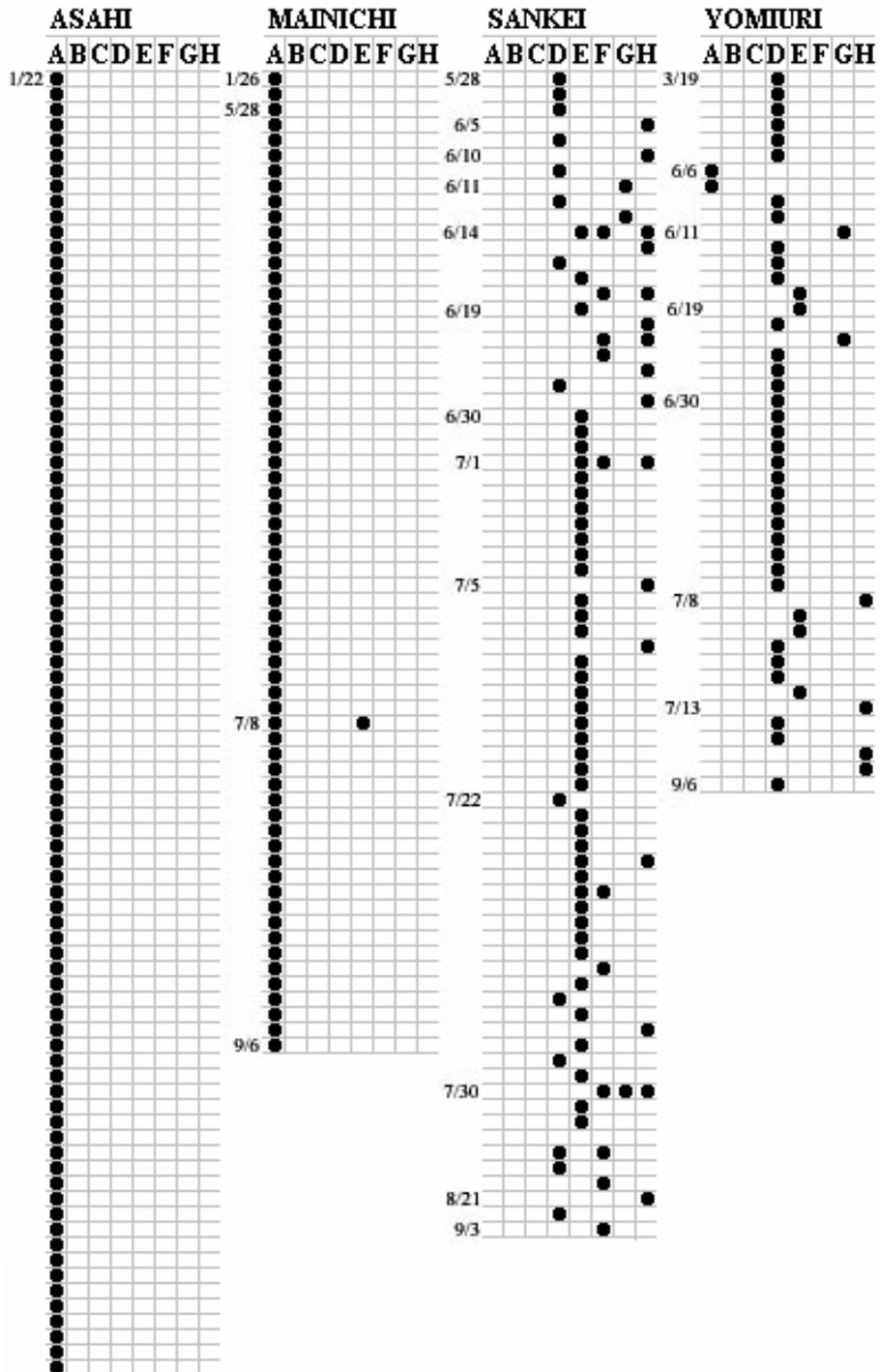


Fig. 8 2001년도 베1기 (상) 프레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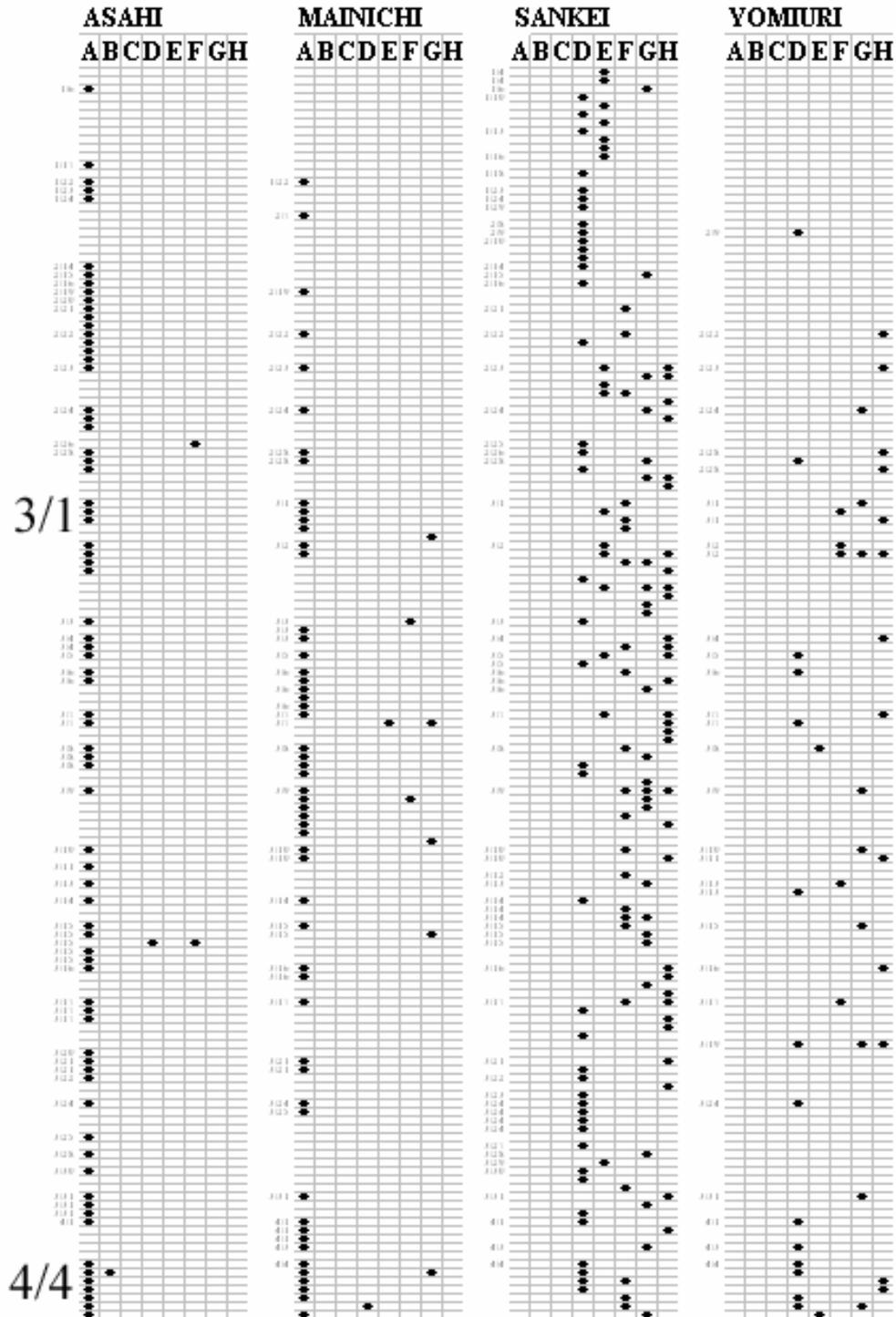


Fig. 9 2001년도 제1기 (하) 프레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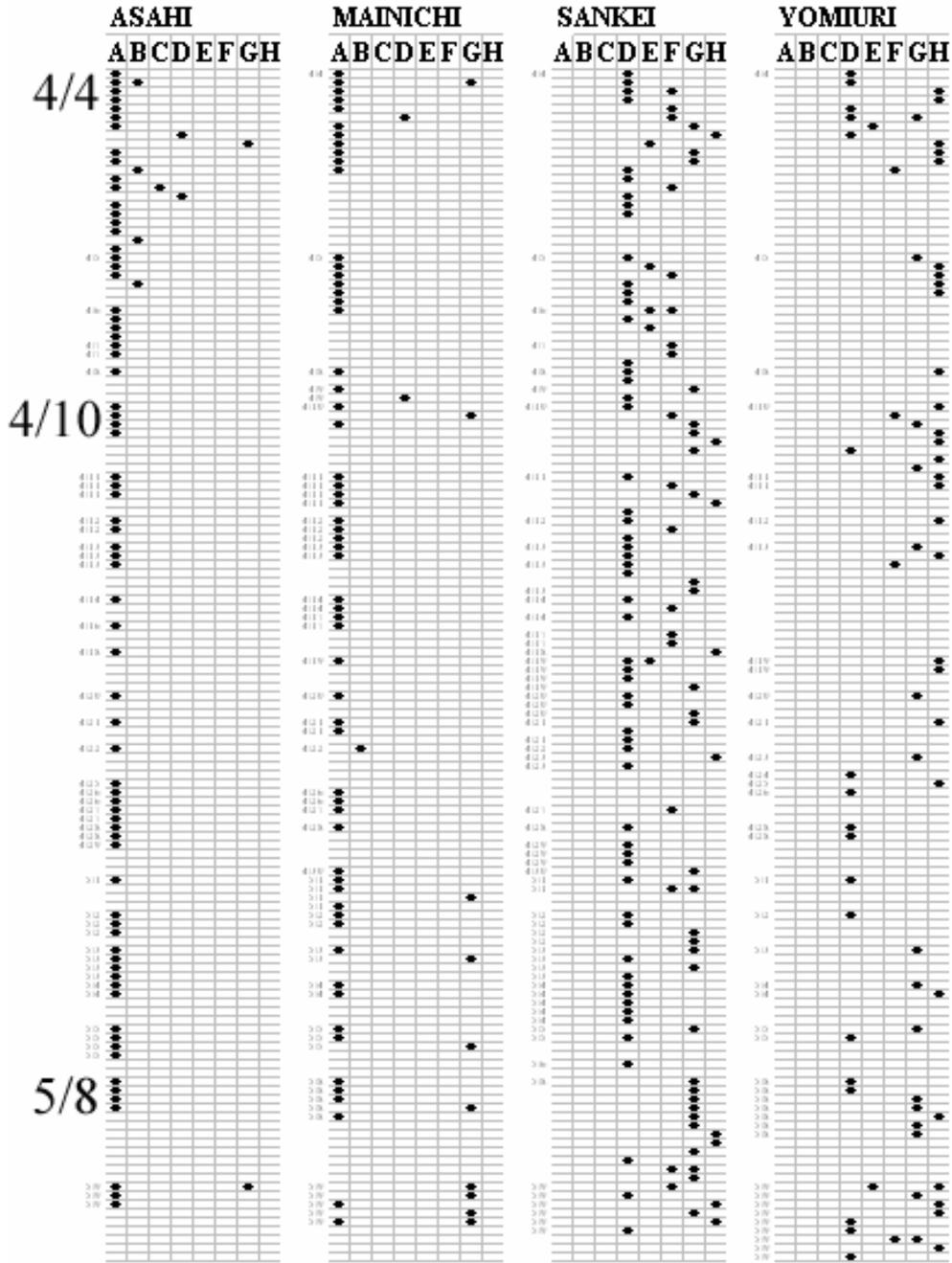


Fig. 10 2001년도 제2기 프레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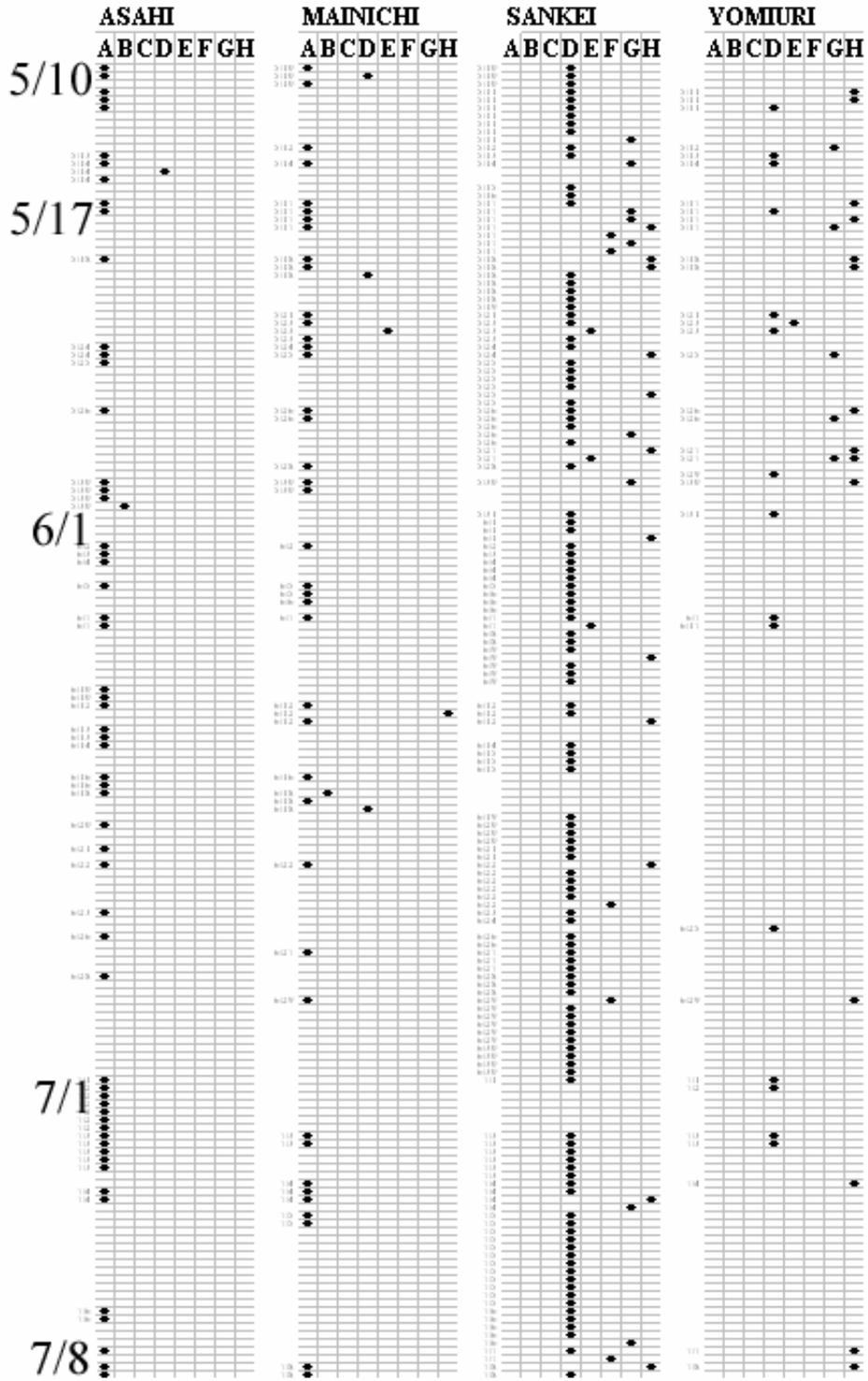


Fig. 11 2001년도 제3기 프레임 분포

